



SINCE 1949



# 국회보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 소식지



2022. 06

VOL. 667

2022년 제21대국회는 일상의 행복을 다시 찾겠습니다.  
국민의 내일을,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겠습니다.

국회사무처  
NATIONAL ASSEMBLY SECRETARIAT

# CONTENTS



04



24



26

## 국회보

2022. 06 / VOL. 667

### 간행물발간등록번호

31-9710176-000680-06 ISSN1975-7581

### 발행일

2022년 6월 2일

### 발행인

이춘석 국회의사무총장

### 국회홍보출판위원회

전상수 위원장(입법차장)

지동하 위원(외교통일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조의섭 위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오창석 위원(법제실장)

유상조 위원(국회입법조사처 정책행정조사실장)

김수옥 위원(의정연수원장)

한웅현 위원(문화소통기획관)

정환철 위원(공보기획관)

현은희 위원(국회부산도서관장)

강준희 간사(문화소통담당관)

### 국회보편집실무위원회

성중호(보좌관), 한주연(비서관), 하상우(서기관)

### 편집진

글 김현아(취재보도사무관), 고영선, 박민선, 윤성혜

사진 김지범(촬영사무관), 임진완, 김진원, 유윤기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6788-2058 book@assembly.go.kr

디자인·인쇄 (주)이팝 02)514-7567

### 04 지금 국회에서는

제74주년 국회개원기념식 개최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취임

윤석열 대통령, 국회 첫 시정연설

국회, 코로나19 손실보상 위한 추경안 등 의결

### 11 특집 - 제21대 전반기 국회 성과와 후반기 과제

‘상시 국회’와 ‘일하는 국회’ 실현 \_임지봉

주요 외교 안보 사안에 초당파적 국회 지원 기대 \_이상현

새 ‘국방혁신’ 정책 논의 활성화를 통한 국방력 강화방안 모색 \_김부년

우리 사회를 선진국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공정경제 3법’ \_최운열

코로나19 대응,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 해결 등 성과 낸 국회 \_김준

지방자치법과 국회법 개정 등 지방균형발전 입법 성과 \_강정석

### 24 의원외교단체 탐방

“한일 정부, 마주 앉아 과거사 문제 대승적으로 풀어야”

\_윤상현 한일의원연맹 부회장

### 26 길에서 길을 찾다 \_최재형 의원

대한민국 ‘정치 1번지’ 서울 종로

### 30 의원의 좌우명 \_양경숙 의원

‘처음부터 끝까지 지지치 않고 꾸준히’

### 32 칭찬합니다 \_엄태영 의원

“정치란 행동과 실천이 동반되어야 하는 것”

### 34 나의 인생 나의 정치 \_신현영 의원

국민 생명 살리는 의사에서 국민의 삶 살리는 의원 되고 싶어



30



32



34



### 표지 이야기

호국보훈의 6월입니다.  
국회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기리며, 지켜주신  
이 나라를 더 강건하게 이끌어하겠습니다.

### 36 새 법률 소개

국회 본회의, 검찰 수사권 분리하는 '검찰청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배달 라이더 적용 '산재보험법' 개정안 등 의결

### 42 법률 시대를 읽다

코로나19 시대에 참정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선거제도 도입 \_김일권

### 44 국회 주재관 리포트

미국의 낙태 관련 입법동향 \_문성환

### 47 일하는 국회 공부하는 국회

동물보호법 개정, 성평등 추진기구 강화 등 주제로 토론회 열려

### 50 법 시행 그 후

건강 증진하고 삶의 질 높이는 '치유농업'

### 52 만화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 54 4차산업혁명의 현장을 찾아서

비대면 시대, '햇봇'이 뜬다

### 56 위원회는 지금

국회, 국무총리 후보자 등 인사청문회 실시

### 68 국회 사람들

"아이들의 순수한 모습 볼 때 에너지를 충전하는 기분"

### 70 기고

조세법률주의와 위임입법의 적정성 유지를 위한 국회의 역할 \_윤동준  
영국과 미국의 오랜 의사운영 경험을 공유하다 \_우영진

### 76 국회 뉴스

### 82 이 달의 서평

법정에서 못다 한 이야기 \_백대용

### 84 고전의 향연

택당(澤堂) 이식(李植) 선생과 양동(楊東) 지역

### 86 속기록으로 본 의정소사

중대재해처벌법 태동의 원조, 삼풍백화점붕괴사건조사특위 \_김미라

### 88 새로 읽는 중앙아시아사

중·서유럽과 러시아 사이에서 고심 중인 벨라루스 \_이광태

### 91 국회의 풀꽃과 나무 이야기

작약

### 92 국회 미술관

개인의 고통에 주목하는 전쟁 그림 \_김준기

### 96 우리 건축 이야기

한 나라의 역사를 담은 아름다운 그릇, 박물관 건축 \_임석재

### 100 바이러스의 역사

한국의 지명을 딴 전염병, '한탄 바이러스' \_도현신

### 102 산으로 떠나는 치유여행

인천 무의도 호룡곡산 \_유인근

### 106 생활 속 우리말글

비슷한 말은 뜻도 같을까?: '관하여'와 '대하여' \_김풍기

### 107 정치 관련 주요 일지

## 제74주년 국회개원기념식 개최

박병석 국회의장 “국회가 협치로서 헌법을 바꾸는 일에 적극 나서야”



박병석 국회의장이 5월 25일 국회 중앙홀에서 열린 제74주년 국회개원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제74주년 국회개원기념식이 5월 25일 국회 중앙홀에서 열렸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기념사에서 제21대 국회 2년간의 성과를 되짚었다. 박 의장은 “코로나 19 상황 속에서도 대화와 타협, 조율과 조정, 협의와 중재, 합의를 운영 원칙으로 ‘일하는 국회’, ‘성숙한 의회정치’를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하며, 2년 연속 예

산안법정기한 내 여야 합의 처리, 첫 추경을 제외한 4번의 추경 합의처리, 개원 이래 같은 기간 가장 많은 법안 처리,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 국민동의청원 성립요건 5만 명으로 완화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회가 국가균형발전의 초석



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20년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국회 세종시대가 여야 합의로 열리게 되었다”며 지난 4월 국회청사관리위원회에서는 세종시 예정부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부산도서관 개관을 통한 지역주민 편의 이바지, 국회통합디지털센터 건립 추진을 통한 디지털국회로의 전환, 국회 박물관 개관을 통한 국회와 민주주의 역사의 장 마련 등을 언급했다.

국민통합과 국가 중장기 비전의 길도 강조했다. 박 의장은 “국회의장 직속기구로 활동한 ‘국회국민통합위원회’와 ‘국가중장기아젠더위원회’를 통해 결과물을 도출했으며 ‘국민통합을 위한 제언’과 ‘성장사회에서 성숙사회로 전환’ 보고서는 국회와 사회 지도층, 주요 기관에 배포되어 국민통합과 미래비전의 밑알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익을 위한 의회외교의 지평을 넓혔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대한민국이 살 길은 외교에 있다”는 지론 속에 코로나 팬데믹의 위험을 무릅쓰고 적극적인 의회외교를 펼쳤으며, 국제

의회연맹 총회(IPU)와 세계국회의장회의의 참석, 국제노동기구(ILO) 방문 등 아시아와 아프리카, 중동, 유럽 등지에서 국익과 국민을 위한 의회외교를 펼쳐 가시적인 성과를 보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장은 국민통합의 제도적 완성은 새로운 헌법에 있다고 강조하며 “권력분산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제도로서 협치를 만들 수 있도록 국회가 헌법을 바꾸는 일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개원기념식에서는 ‘제2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수상 의원 및 의원연구단체와 위원회에 대한 시상식도 진행됐다.

입법활동 부문에서는 총 25명의 우수 법률안 대표발의 국회의원, 정책연구 부문에서는 6개의 의원연구단체, 우수위원회 부문에서는 3개 위원회, 여야협치 부문에서는 5명의 국회의원이 수상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통해 제21대 전반기 국회가 목표로 삼았던 ‘일하는 국회’와 ‘성숙한 의회정치’가 대한민국 국회의 일상 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시상 의미 전했다. 🏆

### ‘제2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수상자 명단

(선수, 연령기준)

<b>우수 의원연구단체(6개)</b>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 국회 글로벌외교안보포럼, 국회 기후위기 그린뉴딜 연구회, 소상공인정책포럼, 약자의 눈, 여성·아동 인권 포럼
<b>우수 위원회(3개)</b>	법제사법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b>여야협치 우수 의원(5명)</b>	김영진(더불어민주당), 김성원(국민의힘),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추경호(국민의힘), 배진교(정의당)
<b>우수 법률안 대표발의 의원(25명)</b>	<b>정치행정분야:</b> 김상훈(국민의힘), 서영교·김민기·소병훈·조응천(이상 더불어민주당), 서범수(국민의힘), 장혜영(정의당) <b>경제산업분야:</b> 어기구(더불어민주당), 성일종(국민의힘), 김윤덕·송갑석(더불어민주당), 양금희(국민의힘), 김희재·홍기원(더불어민주당), 강민국(국민의힘), 박상혁(더불어민주당) <b>사회문화분야:</b> 이상민(더불어민주당), 임이자(국민의힘), 임종성(더불어민주당), 조명희(국민의힘), 정필모·이수진(비례)(더불어민주당), 허은아(국민의힘), 강선우·이소영(더불어민주당)

##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취임



윤석열 대통령이 5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이 5월 10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취임식에는 박병석 국회의장과 국내외 귀빈을 비롯한 국회 및 정부 관계자, 각계 대표, 초청받은 일반 국민 등 약 4만 1천 명이 참석했다.

국민희망대표 20명과 함께 연단에 오른 윤석열 대통령은 먼저 도착해 있던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가 있는 곳으로 가 밝게 웃으며 악수했다.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도 악수한 뒤 앞줄의 다른 참석자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전경

들과도 일일이 악수하며 인사를 나눴다.

이어 개식 선언과 함께 천안함 생존병사 전환수 씨가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낭독했고 다문화 어린이들로 구성된 '레인보우합창단'이 애국가를 불렀다.

### 윤 대통령 “국민이 진정 주인인 나라 만들 것”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갖고 이 자리에 섰다”고 취임사를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팬데믹 위기, 공급망 재편, 기후 변화, 식량·에너지 위기, 초저성장과 대규모 실업,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 등 각종 현안을 거론하면서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빠른 성장 과정에서 많은 국민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고, 사회 이동성을 제고해 양극화와 갈등의 근원을 제거할 수 있다”며 “도약과 빠른 성장은 오로지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에 의해서만 이뤄낼 수 있다”고 말했다.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는 “핵개발에 대한 평화적 해결을 위해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다”면서 “북한이 핵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 경제와 주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와 인권의 가치에 기반한 보편적 국제규범을 적극 지지하고 수호하는 데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며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고 취임사를 마무리했다. 🍌

## 윤석열 대통령, 국회 첫 시정연설



윤석열 대통령이 5월 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6일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추경안 통과를 위한 국회의 협조와 위기 대응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강조했다.

대통령 취임 엿새 만에 이루어진 이번 시정연설은 역대 대통령 중 취임 후 가장 빨리 이뤄진 국회 연설이고,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한 국회 연설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다.

하늘색 넥타이를 맨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및 여야 지도부와 사전 환담을 갖고 오전 10시가 조금 넘어서 본회의장에 입장했다.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우리가 당면한 상황과

앞으로 새 정부가 풀어가야 할 과제를 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고자 한다”며 정부가 주요국과 경제안보 협력을 확대하고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의 초당적인 협력과 도움이 절실하다며 ‘협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윤 대통령, 59조 규모 추경 국회 협조 요청

윤 대통령은 이어 “탈냉전 이후 지난 30여 년간 지속된 국제 정치·경제 질서가 급변하고 있다”며 “정치, 경제, 군사적 주도권을 놓고 벌어지는 지정학적 갈등은 산업과 자원의 무기화와 공급망의 블록화라



는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내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정치경제의 변화는 수출을 통해 성장해 오던 우리 경제에 큰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서 금리 인상과 유동성 축소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금융 시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높은 물가와 금리는 취약계층에게 더 큰 고통을 준다”며 “방역 위기를 버티는 동안 눈덩이처럼 불어난 손실만으로도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게 치명적이다. 59조 4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소상공인의 온전한 손실보상과 방역 및 의료체계 전환 등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국가 안보에 대해서는 “북한은 날이 갈수록 핵무기 체계를 고도화하면서 핵무기 투발(投發) 수단인 미사일 시험 발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등 상황이 더욱 엄중해지고 있다”며 “형식적 평화가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와 남북 간 신뢰 구축이 선순환하는 지속가능한 평화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5월 13일 코로나19 대확산세를 맞이한 북한에 백신과 의약품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윤석열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남북 관계의 정치, 군사적 고려 없이 언제든 열어놓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혀 왔다”며 “북한 당국이 호응한다면 코로나 백신을 포함한 의약품, 의료기구, 보건 인력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개혁 완성 없이는 안팎의 위기와 도전 극복 어려워”

윤 대통령은 개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가 직면한 나라 안팎의 위기와 도전은 우리가 미루어 놓은 개혁을 완성하지 않고서는 극복하기 어렵다”며 “지속가능한 복지제도를 구현하고



시정연설을 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아래)과 의장석에 앉아있는 박병석 국회의장

빈틈없는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려면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협치를 거듭 당부했다. “이번 추경안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과 서민 생활의 안정을 위한 중요한 사업들을 포함하고 있다. 민생 안정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추경이 이른 시일 내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약 15분간 이어진 윤 대통령의 연설에 여야는 총 18번의 박수로 화답했다. 연설을 마친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의원들과 먼저 악수를 나눈 뒤 본회의장을 돌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에게도 손을 건넸다. 여야 의원들은 윤 대통령이 인사를 마무리할 때까지 장내를 지키며 박수를 보냈다. 🍷

## 국회, 코로나19 손실보상 위한 추경안 등 의결



국회는 5월 29일 제397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총 62조 원 규모의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법률안 110건 등 총 130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추경안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59조 4천억 원)보다 2조 6천억 원(2조 8천억 원 증액, 2천억 원 추가 지출구조조정)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정부는 추경 재원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 지원·방역 보강·민생 안정(39조 원)과 지방재정 보강(23조 원)에 각각 활용할 계획이다.

추경안은 소상공인의 매출액·피해 수준과 업종별 특성 등을 고려해 600만~1천만 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지급대상 매출액 기준은 당초 '30억 원 이하'에서 '50억 원 이하'로 확대됐다. 소상공

인·자영업자 법적 손실보상의 대상은 현행 '매출액 10억 원 이하 소기업'에서 '매출액 30억 원 이하 중기업'까지 확대됐다. 손실보정률은 90%에서 100%로, 하한액은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문화예술인에 대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원안(100만 원)보다 100만 원 늘어난 200만 원씩 지급한다. 또 법인택시 기사와 전세버스·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 16만 1천 명을 대상으로 원안(200만 원)보다 100만 원 늘어난 300만 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배달 라이더'도 산재보험을 적용받도록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국정운영의 효율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제고하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법' 등도 처리됐다. 🍵

## 특집

# 제21대 전반기 국회 성과와 후반기 과제

제21대 전반기 국회가 마무리되고 후반기 국회가 시작됐습니다.  
5월 10일 새로운 정부도 출범했습니다.  
제21대국회 전반기에 펼쳐졌던 의정활동을 분야별로 점검, 결산하고  
앞으로의 과제들도 알아봤습니다. <편집자주>



### ‘상시 국회’와 ‘일하는 국회’ 실현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주요 외교 안보 사안에 초당파적 국회 지원 기대

이상현 세종연구소 소장

### 새 ‘국방혁신’ 정책 논의 활성화를 통한 국방력 강화방안 모색

김부년 국방과학연구소 연구개발자문위원

### 우리 사회를 선진국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공정경제 3법’

최운열 전 의원, 서강대 명예교수

### 코로나19 대응,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 해결 등 성과 낸 국회

김준 전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장

### 지방자치법과 국회법 개정 등 지방균형발전 입법 성과

강정석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상시 국회’와 ‘일하는 국회’ 실현

제21대국회가 출범한 지 벌써 2년이 흘러 전반기 국회가 마감됐다. 지난 2년간 정치분야에서 입법적 ‘성과’로 주목할 만한 법률로는 ‘상시국회’와 ‘일하는 국회’를 실현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과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공무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 중에서 우선 ‘상시국회’ 내지 ‘일하는 국회’를 실현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은 첫째, ‘상시국회’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임시회를 짝수 달에 집회하는 것에 더해 3월과 5월에도 임시회를 추가로 열도록 했다. 그리고 ‘일하는 국회’를 실현하기 위해 위원회는 매월 2회 이상, 법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는 매월 3회 이상 열도록 했다.

둘째, 원격화상회의의 근거도 마련했다. 즉, 코로나19와 같은 제1급 감염병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국회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려운 경우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합의를 거쳐 원격영상회의 방식의 본회의를 열 수 있게 한 것이다.

또한 의정활동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방송을 운용하거나 국회 회의를 인터넷으로 중계하는 경우 한국수어, 폐쇄자막 및 화면해설 등을 제공하도록 했다. 이 법이 장애인과 같은 소수자를 배려하고, 상시 열심히 일하는 국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셋째,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도 통과돼 지난 5월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원래 김영란법으로 더 잘 알려진 ‘부정청탁금지법’의 국회 제출법안에는 들어 있었으나 공직자의 직무 범위가 모호하다는 등의 이유로 최종 법안에서는 빠졌는데, 작년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태가 일어나자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어 4월 말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다.

이 법의 적용대상 공직자는 국회의원을 포함해 입법·사법·



임지봉 교수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행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 약 200만 명에 달하고 그 가족까지 합치면 500만 명이 이 법의 영향을 받게 된다. 또한 이 법에 의하면 공직자는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퇴직자 사적(私的) 접촉 신고의 5가지 신고·제출의무와 함께,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의 5가지 제한·금지행위 준수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인허가·공사용역·재판·수사 등의 직무를 수행한 사실을 알게 되면 14일 이내에 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이를 회피해야 하며, 토지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주로 하는 공공기관 임직원이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매수했을 때에는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고위공직자나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은 해당 공공기관과 산하기관, 자회사 등에 취업이 금지되고, 공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도 공공기관 및 그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공직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하면 최고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게 했다. 아무쪼록 이 법의 시행으로 공직자의 직무 수행시 사적 이해관계로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는 일이 방지돼, 공직자들이 진정으로 헌법 제7조가 규정한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우뚝 서는 계기가 되기를 기

대한다.

## 후반기 국회 ‘공직선거법’ 개정해야

제21대국회 전반기에 해결되지 못해 후반기로 넘어간 과제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2년 앞으로 다가온 지금에 이르기까지 아직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개정이 이뤄지지 못한 것은 큰 문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제20대국회에서 여당과 정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추진하다가 국회 전체 의석을 300석으로 고정하되 비례대표 의석수의 50%만 지역구 의석수와 정당 득표율에 연동하는 ‘절반만의’ 연동형 비례대표제조항을 두는 것으로 후퇴했다.

여기에 더해 정당별 득표율과 지역구 의석수의 차이가 적은 거대양당이 의석 확보를 위해 반(反)민주적인 위성정당까지 출현시켰고, 이로 인해 선거 결과의 불비례성과 양대 정당의 과대표 현상은 기존보다 오히려 더 심화됐다. 주권자의 의사를 심히 왜곡하는 한계가 드러난 것이다. 이런 비민주적인 선거제도로 다음 국회의원 선거를 치를 수는 없다.

제21대 후반기 국회는 조속히 공직선거법 개정 작업에 나서서, 연동되는 비례대표 의석수를 확대하고 위성정당 설립도 금지하는 제대로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 제대로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이미 다원주의 사회로 진입해있는 우리 사회에서 국민 각 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다당제 정당 구조를 낳을 것이고, 이러한 다당제 구조하에서 복수 정당들 간의 연립내각 구성을 통해 헌정의 ‘협치적 운영’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

## 주요 외교 안보 사안에 초당파적 국회 지원 기대

윤석열 정부는 외교안보 정책 기조로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제시했다. 글로벌 중추국가란 대한민국이 한반도 문제 해결의 중요한 당사자인 동시에, 한반도를 넘어서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글로벌 이슈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나라가 되어야 함을 지적한 것이다. 즉, 국제사회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창조적이고 선제적인 외교로 대한민국을 더욱 활기찬 나라, 혁신적인 나라, 매력있는 나라로 만들어 나가는 한편,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실질적 협력을 추구하겠다는 비전을 선포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전 세계는 팬데믹 위기, 교역 질서의 변화와 공급망의 재편, 기후변화, 식량과 에너지 위기, 분쟁의 평화적 해결 후퇴 등 한 나라가 독자적으로, 혹은 소수의 나라만 참여해서는 해결되기 어려운 난제들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요컨대, 다양한 위기가 복합적으로 한국은 물론 인류사회 전체를 위협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출범한 윤 정부는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도전과 리스크에 처해 있다.

### 국회 미얀마 군부 규탄 결의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불법 침략 규탄 결의안 등 채택

오늘날 한 국가의 외교는 행정부의 전유물만은 아니다. 대중매체와 소셜 미디어의 활용이 가능해지면서 국제문제에 일반인의 관심과 지식이 크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행정부와 더불어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의회의 역할은 거의 모든 국가들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제는 외교에도 의회를 통한 민의의 반영, 소위 국민외교가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외교 문제에 관한 우리 국회의 위상과 역할에도 중요한 함의를 시사한다. 제21대국회는 한국이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여러 문제에 나름대로 의미 있는 기여를 해왔다.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자면, 우선 미얀마 군부 규탄 결의안이



이상현 소장  
세종연구소



있다. 미얀마 군부는 2021년 2월 1일 쿠데타를 통해 국가 고문 아웅산 수치와 미얀마의 대통령 윈 민 및 여당 지도자들을 축출하고 가택 연금했다. 하지만 군부 쿠데타를 거부하는 국민들의 저항과 봉기가 본격화되면서 미얀마 사태는 거대한 민주화 운동으로 확산됐다. 국회는 결의안에서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를 규탄하고, 군부가 구금한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을 비롯한 정치인 등에 대한 석방을 촉구하는 한편 현지 체류 중인 우리 교민 3천500여 명을 안전하게 보호할 것을 촉구했다.

또 다른 예는 작년 9월 16일 본회의를 통과한 ‘아프가니스탄 평화정착 및 인권보호 촉구 결의안’이다. 이 결의안은 탈레반의 정권 이양 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인권 침해 상황에 우려를 표명하고, 인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마련해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외에도 국회 차원에서 우리의 외교와 대외관계에 관한 다양한 이슈에 관심을 갖고 바람직한 정책결정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좋은 현상이다. 작년 9월에 채택된 ‘일본 정부의 군함도 등 일본 근대 산업시설 한국인 강제노역에 대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권고이행 및 후속조치 재이행 촉구 결의안’은 강제노역과 관련된 일본 정부의 역사적 사실 왜곡을 규탄하고, 일본 정부가 강제노역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지난 3월 2일 유엔이 긴급특별총회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고 러시아군 즉각 철군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자, 우리 국회도 조태용 의원 발의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불법 침략 규탄 및 우크라이나 평화 회복 촉구 결의안’을 제안한 바 있다. 2022년 1

월부터는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국제기구 분담금법)’이 시행됐다. 국제기구분담금법은 외교부를 중심으로 각 정부기관에 산재된 국제기구분담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익과 외교정책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효율적인 분담금 납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정된 법으로, 한국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기여외교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법이다.

### 우리 외교와 후반기 국회의 역할

앞으로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역할이 커지면 국제무대에서의 역할도 더 중요해질 것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한미동맹이나 북핵문제 등 전통적인 외교안보 사안 외에 주요 분야 다자외교 리더십 확대 및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즉, 평화안보·민주주의·인권·법치·비확산·기후변화·개발 분야 협력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규범 기반 국제질서 강화를 주도하면서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모든 노력은 결국 대한민국 국가 브랜드 제고에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이러한 과제들은 말 그대로 범국가적 접근이 필요하다. 정부가 추진하는 국제적 활동이 힘을 받으려면 국회의 법적·제도적 뒷받침은 물론 국민의 지지도 필수다. 국회 또한 외교활동의 중요한 행위자라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적어도 한국의 국가이익과 안보, 그리고 국가위상에 관련되는 외교 사안은 초당파적인 입장에서 국회의 동의를 바탕으로 실행되기를 기대한다. 제21대 국회 후반기의 역할이 중요하고 기대가 높은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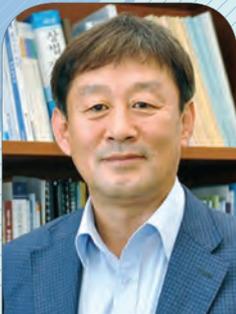
# 새 ‘국방혁신’ 정책 논의 활성화를 통한 국방력 강화방안 모색

제21대국회 전반기의 안보환경은 2020년 6월 북한이 개성공단 내 공동연락소를 폭파한 이후 남북 간의 긴장관계가 급속도로 고조되기 시작했고,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비전통적 안보위협까지 가세되는 형국이었다. 2022년에 들어와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횟수가 늘어나고 성능이 더 고도화됐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대내·외적 안보환경은 긴박한 상황을 맞게 됐다.

이러한 대내외적 안보환경에서도 국방위원회가 지난 2년 동안 ‘국가안보에는 여·야나 보수·진보가 따로 없다’는 신념으로 입법 및 예산 심의활동을 통해 거둔 주요 성과를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첫 번째 성과로는 ‘국방개혁 20’ 관련 입법을 적극적으로 심의해 병력감소 추세에 대응하고 군 복지 기반을 강화했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는 병력감소 추세에 대응해 예비역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을 일정기간 ‘비상근 예비군’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사업자가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택지를 필요로 하는 경우 이를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모가 모두 사망한 전몰·순직자 자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퇴직연금유족연금의 수급자격을 만 18세에서 24세까지로 연장하는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심의·의결했다.

둘째,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의 원만한 타결로 굳건한 한미동맹 관계를 재확인했다는 점이다. 2020년도 한미 방위비분담금을 당초 미국 측이 요구한 50억 달러(약 6조 원) 수준에서 “2020년은 동결 수준인 1조 389억 원으로 하고, 2022년부터 2025년까지는 전년도 국방비 증가율(2022년 5.4%)을 적용”하는 등 6년간 다년도에 걸쳐 적용되는 분담금특별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방위비분담금의 증가폭을 최소화하고 분담금



김부년 연구개발자문위원  
국방과학연구소



소요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 ‘국방혁신 4.0’ 등 새 정부 국방정책에 대한 건설적 논의가 활성화돼야

제21대국회 후반기에도 대내·외적 안보환경이 크게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2022년 5월 10일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통령 집무실을 국방부 청사로 이전함에 따른 국방부 등 예하부대의 연쇄이동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여소야대 정국으로 후반기를 맞이하게 됐다. 국방위원회가 후반기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될 과제를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새 정부의 ‘국방혁신4.0’ 수립계획에 대한 국회 차원의 대응 전략이다. 새 정부는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위한 국정과제의 하나로 “제2창군 수준의 ‘국방혁신 4.0’ 추진으로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 혁신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기존의 ‘국방개혁2.0’과 실질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을지는 아직은 미지수지만, 아마도 군 구조 분야에 있어서 전시작전권 전환 요건, 3축체계 등 북 핵·미사일 대응체계, AI를 적용한 첨단 군사력 확충 전략 등에 있어서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고 이에 따른 입법 및 예산에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응 또는 지원 전략을 찾아야 할 것이다.

둘째, BTS(방탄소년단) 등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병역특례 부여를 위한 ‘병역법’ 개정 과제다. 2021년 7월 이후 국위선양과 문화창달에 기여한 대중문화예술인에게 병역특례의 길을 열어주기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이 국방위원회에 회부돼 계류 중이다. 개정안의

공통점은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서 직접 대중문화예술인을 예술경연대회 입상자와 함께 명시적으로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인구절벽에 따른 병력감소 추세, 타 분야와의 형평성 위배 여부 등 이슈별로 상당한 사회적 논란이 예상되는데, 국방위원회는 우리나라가 현재 처해 있는 대내외적 안보환경과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여야가 바람직한 합의점을 찾는 지혜를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로는, 국방 예산안 및 결산 심의 시 국회의 재정 통제 기능을 보다 강화해야 할 것이다. 제21대국회 전반기에는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관련 추경편성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편성한 네차례 추경안에서 국방예산 본예산을 연례적·반복적으로 대폭 삭감한 데 대해 국방위원회는 이러한 관행의 부적절성을 지적하고 여야 한 목소리로 핵심전력사업의 차질이나 장비복지 예산의 축소 집행 우려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 밖에도 제21대국회 후반기 안보분야 과제로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인한 안보공백 최소화 방안, 사드(THAAD) 배치 등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방안, 9·19군사합의 이행 여부, 코로나19로 축소되었던 한미연합기동훈련의 확대, 전시작전권 전환의 방식과 시기, 국가사이버 대응 역량 강화, 국방우주개발 육성을 위한 법·제도 정비 방안, 병사 월급 200만 원 지급 등의 공약 이행 방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이 우리나라 국가안보에 시사하는 전훈(戰訓) 등이 주요 논의 과제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

## 우리 사회를 선진국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공정경제 3법’

국민들의 많은 기대를 안고 출범한 제21대국회도 벌써 전반기를 보내고 임기의 반환점에 이르렀다. 입법·행정·사법의 3권분립이 되었다고 하지만 국회에서 입법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행정행위도 사법행위도 원활하게 작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입법의 기능이야말로 국가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관건이라 할 수 있다.

제21대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장 직을 맡은 이우로 총선 개표일 자정 무렵 모 방송국 생방송 프로에 나갔었다. 사회자가 더불어민주당이 180여 석을 석권해 축하한다고 한 얘기에 “축하받기 이전에 두려움이 앞섭니다. 이제 국정을 잘못 운영하면 소수당이라는 핑곗거리도 사라졌습니다. 무한 책임을 져야 할 집권여당으로서 잘 해주기를 바랄 뿐입니다”라는 반응을 보인 적이 있었다.

임기 반을 보낸 이 시점에서 그 당시 우려가 기우가 아니라 현실로 나타나 정권이 5년 만에 바뀌는 것을 보면서 우리 국민의 현명하고 수준 높은 민주의식에 경외감을 갖게 된다.

### 행위를 규제하는 법은 적을수록 좋아

제20대국회를 마감하면서 제20대국회가 최악의 국회라는 언론의 평가를 받았다. 그 이유로 발의한 법안 통과율이 37%라는 수치가 지적됐다. 본인은 많은 언론과 인터뷰하면서 “법안 통과율 37%가 얼마나 다행인줄 모른다. 만약 발의된 2만여 건 이상의 법안이 모두 통과되었다고 상상해 보아라. 우리 사회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 하고 법이라는 굴레에 묶이고 말 것이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다.

법 없이도 돌아가는 사회가 가장 선진국이라고 평소 생각하고 있다. 몽골 제국의 칭기스칸이 세계를 제패할 때 법률이 28개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우리 삶을 살찌우게 하는 법은 많을수록 좋



최운열 전 의원  
서강대 명예교수



지만 우리 행위를 규제하는 법은 적을수록 사회를 원활하게 작동시킬 수 있다.

### 우리 사회에 큰 변화 예고한 법안 많아

그런 차원에서 제21대국회 입법 성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총 발의 법안이 1만 5천163건이고 본회의에 통과된 법안이 1천393건이라고 한다.(지난 5월 15일 기준) 본회의 통과율이 10%가 채 되지 않음에 우선 다행이라고 생각된다. 건수는 적지만 법안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사회에 엄청난 변화를 예고한 법안이 꽤 많아 성과도 있었고 과제도 안겨주고 있다.

모두 평가할 수 없지만 ‘공정경제 3법’(‘상법’ 일부개정안,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제정안)은 우리 사회를 선진국 수준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법안이라고 평가하고 싶다.

우리는 양적으로는 세계10대 경제 강국에 속하지만 지배구조관련 질적 지표는 후진국 수준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집중투표제 등이 통과되지 못해 아쉽지만 다중대표소송제, 감사인 선임 시 3% 룰 등을 도입한 ‘상법’ 개정안은 사회발전을 위해 진일보한 법안이라 평하고 싶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수준을 대주주 지분을 30%에서 20%로 낮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나 금융그룹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금융복합기업집단법’ 등은 우리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 필요한 장치라 본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 보완으로도 충분히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을 텐데 기업 행위를 지나치게 규제하는 과잉 입법이 아닌가 우려된다.

기본적으로 고용은 기업이 창출한다. 기업이 있어야 고용이 발생한다. 충무공의 난중일기를 원용해 ‘若無企業(약무기업)이면 是無勞動(시무노동)’이라는 말을 하고 싶다. 일자리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기업이 없으면 노동 자체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 정치인들이 기업과 기업인을 구분 못하는데서 기업 발목을 잡는 법안을 발의한다. 기업인은 기업을 구성하는 이해관계자 중 하나일 뿐이다. 기업인이 밍다고 기업을 죽이면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온다.

또한 우리 사회에 엄청난 파문을 낳고 있는 부동산 관련 임대차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이 핵심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도 신중을 기했어야 할 법이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서민을 위한다고 선의로 출발한 법안이 서민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준 역설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오직 이 법 때문만은 아니었겠지만 부동산 값이 치솟고 임대료가 너무 올라 청년들이나 서민들에게 자기 집을 갖고 싶은 소박한 꿈을 앗아 가버리거나 앓았는지.

법안을 발의하기 전 이 법이 시행되면 사회에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 최소한의 시뮬레이션을 해 봐야 한다. 국회의원실에서 할 수 없다면 국회입법조사처에서라도 이 과정을 반드시 거치고 법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장치를 했으면 한다.

제21대국회 후반기에는 보다 신중한 입법절차에 따라 다수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입법성과를 기대해 본다. 🍷

## 코로나19 대응,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 해결 등 성과 낸 국회

제21대국회는 팬데믹이라는 미증유의 위기 속에서 출범했다. 따라서 제21대국회 전반기는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가운데 수많은 새로운 난관과 도전에 직면해야 했다.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뒤돌아보면 사회분야에서는 위기극복을 위한 여야의 공감대에 힘입어 시의적절한 입법적 대처를 통해 의미 있는 발자취를 남겼다고 평가할 수 있다.

### ‘감염병예방법’ 수차례 개정, ‘공중보건 위기대응 특별법’ 제정

코로나19가 초래한 위기는 당초 예상보다 훨씬 길어지고 심각해졌으며, 상황도 수시로 변화했다. 이에 국회는 병상 등 의료시설 동원,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확보, 감염병 환자 관련 정보의 수집과 개인정보의 보호, 환자 및 의료진에 심리적·재정적 지원, 의약품 등의 비축·관리, 개발단계 백신의 구매·공급계약, 질병관리청 개청 및 국립감염병연구소 신설 등에 법적 근거를 부여하기 위해 ‘감염병예방법’을 수차례 개정하는 등 숨가쁘게 일했다.

또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백신 등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신속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예비지정, 우선 심사, 수시 동반심사, 조건부허가 제도 등을 신설하고, 긴급대응에 필요한 의료제품의 제조, 수입 및 유통을 관리하는 긴급공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긴급생산, 수입명령, 유통개선조치 등을 도입했다.

전반기 국회는 국제노동기구(ILO) 가입 이래 30년간 숙제로 남아 있던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를 해결하는 등 고용노동 분야에서도 큰 족적을 남겼다. 국회는 2020년 말 노동관계법과 ‘병역법’을 개정함으로써 비준의 걸림돌을 제거했으며, 2021년 2월에는 미비준 4개 핵심협약 중 3개에 대한 비준에 동의했다. 이는 국내적으로는 노동기본권 신장, 국제적으로는 국가신인도 제고 측



김준 박사  
전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장



면에서 큰 의미를 지닌 것이었다.

또한 국회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 등의 고용보험 가입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없애고 전국민고용보험 시대를 열었다. 아울러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자 또는 경영 책임자에게 유해·위험을 방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등으로 강력히 처벌할 수 있게 하며,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또는 위험물 제조·취급 업체가 안전·보건 의무를 위반해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도 강력히 처벌할 수 있게 한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했다.

이와 더불어 재난 상황 속에서도 사회기능과 일상이 유지되도록 의료·돌봄·물류·교통 등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의 범위를 지정하고 이들을 지원하는 ‘필수업무종사자법’ 제정, 노동관계법 적용이 배제되어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던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제도화함으로써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개선의 계기를 마련한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 제정, 노동이사제를 도입함으로써 근로자 경영 참여의 새로운 차원을 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등도 역사적 이정표를 세운 입법이었다.

### 성폭력, 가정폭력 근절과 코로나19에 따른 교육 위기 대응

전반기 국회는 각종 폭력에 대응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분주했다. 체육계의 폭력·성폭력 등 인권 침해 근절, 성범죄 2차 피해 방지, 가정폭력 근절과 피해자 보호,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스토킹행위 처벌, 인신매매 범죄 방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아동 및 장애인에

대한 학대 방지 등을 위해 여러 법률을 개정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 특히 아동학대 가해자의 항변사유로 악용될 소지가 있던 민법의 ‘자녀 징계권’ 조항을 삭제한 것 또한 한 시대의 획을 긋는 입법이었다.

교육분야에서는 감염병 위기로 인해 앞당겨진 원격교육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뒷받침하기 위해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등 여러 법률을 제·개정했다. 또한 심화되는 학력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에게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노력 의무를 부여하는 ‘기초학력 보장법’을 제정하는 등 입법적 노력을 기울였다. 아울러 교육정책과 제도개선을 사회적 합의에 기반을 두고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한 ‘국가교육위원회법’도 중요한 입법이라 할 수 있다.

문화·청소년 분야에서는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했던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제도(‘셋다운제’)를 10년 만에 폐지하고, 게임물 등급 분류를 간소화하는 등 시대의 변화를 반영해 규제를 완화하고 자율을 확대한 것을 중요한 입법 성과로 손꼽을 수 있다.

이처럼 많은 전반기 성과에도 불구하고 후반기 국회가 직면한 도전은 결코 만만치 않다. 감염병 위기는 쉽게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저출산 고령화, 빈부 격차 등 확대, 연금개혁과 복지제도 재조정 등 구조적 난제가 산적해 있다.

전반기 국회가 미증유의 위기를 극복하는 순발력 있는 대응에 힘썼다고 한다면, 후반기 국회는 구조적인 문제 해결에 좀 더 주의를 기울여주기를 기대한다. 🍀

## 지방자치법과 국회법 개정 등 지방균형발전 입법 성과

지방자치가 출범한 이래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관심 가운데 하나는 늘 지방의 균형발전이었다. 수도권이라는 단어가 때로는 선망의 대상이고 때로는 미움의 대상이 될 만큼 사실상 우리나라 지방과 지역 현실은 냉혹하고도 엄중하다. 나라를 잘 살게 하는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길을 모색한 것이지만, 집중화는 어쩔 수 없이 지방의 공동화를 수반했다. 고령화와 저출산 또한 지방공동화의 경향을 더욱 심화시킬 것도 분명하다.

따라서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하는 지방자치와 지역균형발전의 전략이 적절한 것인지를 돌아볼 때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제21대국회가 이와 관련한 입법성과를 어느 정도 이룬 것은 큰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한다.

### ‘지방자치법’, 다양성·자율성에 바탕 둔 균형발전 토대 제공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필자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지방자치법’과 ‘국회법’ 개정이다.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은 다양성과 자율성에 바탕을 둔 균형발전의 토대를 제공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삼십여 년의 역사를 겪으면서 상당히 굳건한 토대를 만들어 왔다.

하지만 동시에 모든 지방과 지역들이 획일적이고 동일한 제도를 적용받아야만 하는 법률적 제한이 존재했고, 이로 인해 지역의 다양한 발전 요구들이 적절하게 펼쳐지기는 어려운 상황이 존재한 것도 사실이다. ‘지방자치법’ 개정은 획일성이라는 굴레를 벗고 다양성에 기반한 자율적 책임을 구현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제공한 점이 가장 주목할 만하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자치단체의 기관구성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숨통을 터주었고, 공동 목적을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에서 가장 적절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제도적 토대를 스스로 추구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졌다.



강정석 선임연구위원  
한국행정연구원



동시에 주민의 감사청구권 강화라든가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 등을 비롯한 여러 조치도 이루어졌는데, 이 모든 변화는 결국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의 상황에 적합한 다양성과 자율성을 모색하고 이를 책임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의미가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율성과 다양성에 대한 강조가 지역균형에 대해서도 새로운 시각을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는 점이다. 획일적이고 통일적인 법제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지역균형은 어쩔 수 없이 제로섬(zero-sum)적인 균형일 수밖에 없는데, 자율성과 다양성을 기반으로 하는 변화가 넌제로섬 또는 포지티브섬으로의 확장적 균형을 가능하게 해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세종분원 설치’ 규정한 ‘국회법’ 개정은 지역균형발전의 중요한 계기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측면과 관련해 주목할 만한 또 하나의 변화는 국회 세종분원을 가능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이다.

관련 연구에 의하면 세종과 여의도라는 공간적 분리로 인해 행정 비효율성이 발생한다는 것에 행정부 공무원의 약 42%가 동조한 바 있고 세종분원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86%가 공감한 바 있다.

그러나 국회의 세종분원 설치를 규정한 ‘국회법’ 개정은 효율성뿐만 아니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중요한 계기로도 작용할 것이다.

세종시를 만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분산을 통한 지역의 균형발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효율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원래의 목적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갖

기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국회분원을 설치함으로써 발생하는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를 30년간 약 1조 1천562억 원으로 추정하는 연구도 있으나, 더 중요한 것은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정책 목적이 실제로 작동할 것이라는 기대와 인식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믿음이 행동으로 이어져야만 실제로 의도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데, 국회분원 설치의 가장 중요한 행동(key action)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이 지방자치와 지역균형발전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지방자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은 보조금을 비롯한 다른 수단의 영역에서도 이루어져야만 한다.

세종분원 설치가 실제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국회와 그 구성원들의 목표에 대한 공감과 실천의지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 외에 다른 모든 행정 분야의 법률들에서도 사회적이고 기술적인 변화를 적절하게 수용하면서 다양성과 자율성, 그리고 책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회 차원에서 입법에 대한 영향분석의 기준과 변수를 현재보다 훨씬 높고 강하게 유지하지 않는다면 법률이 시대를 따르지 못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사회적 변화의 방향과 강도를 얼마나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는 언제나 법률의 형태로 나타나며 이는 국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이기 때문이다. 🍯



## “한일 정부, 마주 앉아 과거사 문제 대승적으로 풀어야”

윤상현 한일의원연맹 부회장  
(국민의힘,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을)

### Q. 한일의원연맹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한일의원연맹은 한국과 일본 두 나라 의원들의 친목, 교류 증진 등을 위해 1975년 5월 23일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이는 앞서 존재했던 한일의원간친회를 해체하면서 탄생했는데, 한일의원간친회는 1972년 3월 일본을 방문한 한국 국회의원 13명과 일본 자유민주당 의원 48명이 모임을 만들기로 합의한데 따라, 그해 5월 서울에서 한

일의원간친회 창립총회를 열어 창립된 단체입니다. 1975년 도쿄에서 열린 제4차 총회에서 한일의원간친회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한일의원연맹으로 확대됐습니다.

한일의원연맹에는 현재 한국 측 100여 명, 일본 측 320여 명(중의원 230여 명, 참의원 90여 명)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양국 의원 간 친선단체이지만, 의회 차원에서 정부 외교를 측면 지원하는 역할을 합



니다. 의원 간 친교를 통해 외교 현안 해결을 모색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산하에 안보외교위원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사회문화위원회, 재일동포법적위원회, 미래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매년 한일 양국에서 교차로 합동총회를 열어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등 한일외교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재작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재임 중 주한 일본 대사를 만나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강조하는 등 일본에 대해 할 말은 강하게 하지만, 한일외교는 복합적 요소가 많은 만큼 다양한 채널과 방식으로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Q. 한일의원연맹의 그간 활동과 주요 성과에 대해 알려주세요.

A. 한일의원연맹은 지금까지 한일경제협력문제, 일본 역사교과서의 한국사 왜곡 문제, 재일 한국인의 법적 지위와 권익 향상 문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다양한 한일관계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2011년 3월에는 일본 동북부 지방 지진과 대해일로 고통을 겪는 일본인을 돕기 위해 성금을 기탁하는 등 두 나라에 격변이 있을 때에도 관심을 기울이며 한일관계에서 중추적 역할을 해왔습니다. 특히 최근 일본 기업에 대한 강제징용 배상판결로 인해 한일관계가 악화된 이후, 한일의원연맹은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해 다각도로 논의하고 교류하는 등 관계 회복 노력에 힘써왔습니다.

### Q. 한일관계에 있어 앞으로 과제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A. 우선 지난 정부 5년 동안 대일 외교가 국내정치 수단처럼 이용된 점을 반성하고, 양국 정부가 대립이 아니라 마주 앉아 과거사 문제를 창의적이고 대승적으로

풀어낼 진지한 교류를 시작해야 합니다.

정치적이 아닌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접근을 유지한다면 양국이 동의할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한미동맹과 함께 한미일 공조체제를 강화함으로써 국익을 수호하고 외교안보를 강화하는 길입니다.

한일 양국은 경제 등 다양한 방면에서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만큼, 관계의 중요성을 면밀히 검토해 추후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관계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 Q. 바람직한 한일관계의 해법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A. 한일관계를 슬기롭게 풀어가기 위한 실마리는 1998년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가 함께 선언했던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선언)에서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선언에서 오부치 총리는 일본이 과거 한때 식민지 지배로 인해 한국 국민에게 대대한 손해와 고통을 안겨 주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이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했습니다.

김 대통령은 이러한 오부치 총리의 역사 인식 표명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이를 평가하는 동시에, 양국이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화해와 선린우호협력에 입각한 미래지향적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서로 노력하는 것이 시대적 요청이라는 뜻을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양국 정상이 마무리한 ‘20세기의 한·일 관계’는 지금도 여전히 끝맺음을 이루지 못하고 있고 ‘21세기의 새로운 파트너십’도 구축하지 못했는데, 이렇듯 미처 이루지 못한 외교적 숙제를 새로운 시대에 맞게 재해석하고, 한일관계 복구의 실마리로 삼아 그 때의 파트너십 정신을 되살려 이어가는 데서 재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글 고영선 사진 임진완

# 대한민국 ‘정치 1번지’ 서울 종로

## 최재형 의원

(국민의힘,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울 종로는 대한민국의 ‘정치 1번지’, ‘민심의 바로미터’라 불린다. 그만큼 정치적 상징성이 큰 곳이다. 경복궁, 창경궁, 청와대, 정부서울청사까지 과거와 현재의 정치·행정의 시공간이 모두 집약된 곳이기도 하다. 또 종로는 정치·경제·문화·사회 어느 것 하나를 딱 집어 말하기 힘들 정도로 다양한 분야에서 대표성을 갖는 곳이다. 대기업 본사가 위치해 있고 곳곳에 문화유적이 있으며 통인시장·광장시장 등 전통시장도 많다. 최재형 의원과 함께 과거와 현재, 느림과 빠름이 공존하는 매력적인 지역, 서울 종로를 찾았다.

### 자연과 조화 이룬 가장 한국적인 궁궐 창덕궁

최재형 의원이 아침 일찍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종로구 율곡로에 위치한 창덕궁이다. 창덕궁은 조선 태종 5년(1405) 한양 북쪽에 지어진 이궁(離宮, 법궁과 떨어진 궁)이다. 아침부터 외국인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평지에 세워진 경복궁과 달리 창덕궁은 북쪽 응봉에서 흘러나온 자연지형을 이용해 자리를 잡았다. 언뜻 보면 무질서해보이지만 주변 구릉의 곡선과 자

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는 건물 배치다. 창덕궁은 자연과의 조화로운 배치와 한국의 정서가 담겨 있다고 하여 1997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됐다.

최 의원은 창덕궁과 창경궁 경계에 자리 잡은 낙선재에도 들렀다. 낙선재는 조선 헌종이 서재 겸 휴식공간으로 지은 건물로, 지난 2012년 보물 제1764호로 지정됐다. 낙선재는 궁궐 내 다른 전각과 달리 단청을 하지 않아 수수한 분위기가 특징이다. 낙선재 뒤편에는 화초, 석물, 꽃담 등으로 가꾼 계단식 정원인 화계(花階)가



창덕궁 낙선재 앞에서

있다. 창덕궁은 아름답고 넓은 후원으로도 유명하다. 자연 지형을 그대로 살려서 골짜기마다 정원을 만들었다.

### 젊음과 예술의 공원, 마로니에 공원과 100년 전통의 광장시장

이여 최 의원이 발길을 옮긴 곳은 종로구 대학로에 위치한 마로니에 공원이다. 서울 시민들을 위한 문화예술의 터전으로 문을 연 마로니에 공원은 옛 서울대 문리대, 법대 자리에 위치해 있다. 공원 안에는 아르코미술관, 아르코예술극장, 예술가의집, 야외무대 등과 바탕골소극

장, 파랑새극장 등 극장들이 몰려 있어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판사 출신으로 감사원 원장을 지낸 최재형 의원은 마로니에 공원에서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며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의 소회를 들려줬다.

“국회 밖에 있을 때는 국회의원들의 활동에 그다지 높은 점수를 주지는 않았습니니다. 그런데 막상 국회에 들어와 보니 소관 상임위 업무는 물론 국정 전반의 흐름을 잘 파악하고 여러 정치 현안에 대한 바른 소리를 내야 하고 지역구 의원으로 주민들과 꾸준히 소통해야 하는 등 해야 할 일이 참 많더군요. 의정활동을 제대로 하기 위해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서는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부지런히 일해야 한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최 의원은 “정치에 입문하기 직전까지 오랜 시간 법관으로, 또 공직자로 있다가 정치에 뛰어들었다”면서 “정치라는 속성 자체가 제가 해왔던 일들과는 많이 달랐다”고 말했다.

“법관이나 감사원장으로 제가 했던 일은 과거의 일을 현재 위치에서 보고 잘잘못을 가리는 것이었지만 정치는 현재를 바탕으로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야 할 때가 더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항상 민심을 생각하면서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최적의 조합을 찾아내야 합니다. 하지만 조금씩 정답에 접근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재형 의원은 종로 5가에 위치한 서울 최대 규모의

재래시장 광장시장에 들렀다. 광장시장은 1905년 시장 개설 허가를 받았다고 한다. 안쪽 사거리로 들어가니 그 유명한 ‘먹거리 골목’이 나온다. 빈대떡과 잔치국수, 고기전, 순대, 육회비빔밥 등 먹음직한 음식들이 가득하다. 또 중독성 있는 맛을 자랑한다는 ‘마약김밥’이라는 꼬마김밥도 유명하다.

평일인데도 관광객들이 많아 광장시장의 인기를 가늠할 수 있었다. 광장시장은 한국을 방문한 수많은 할리우드 스타들이 찾은 명소로도 알려져 있다. 최 의원도 좁은 통로를 따라 자리잡은 한 가게에서 떡볶이 등을 주문하고 앉아 상인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상인들은 “코로나 19 거리두기가 해제되어서 그나마 좀 낫다”고 했다.

“종로에는 약 2만 5천 명의 소상공인이 계신데, 코로



광장시장



창신 송인 채석장 전망대에서

나19로 인한 피해 부분에 대해 실질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상권을 다시 살려야 하는 변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코로나19 거리두기가 종료되고, 또 종로구에 위치한 청와대가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종로구 상인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청와대 주변 환경을 보완하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 “섬기는 마음을 담은 정치 펼칠 것”

이어 최재형 의원이 들른 곳은 종로구 창신동에 위치한 ‘창신 송인 채석장 전망대’다. 낙산 자락에 위치한 채석장 일대는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와 옛 서울역 등을 짓는 데 사용될 석재를 공급하는 곳이었다고 한다. 한국 전쟁 이후 이주민과 피란민이 모여 마을을 이룬 곳이기도 하다. 2019년 채석장 상부에 문을 연 ‘채석장 전망대’에 올라서면 종로가 한 눈에 보인다. 전망이 좋아 많은 주민들이 찾고 있다.

봉제공장이 밀집해 있어 ‘봉제산업의 1번지’로도 불린 창신동답게 채석장 인근에는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

의 봉제역사관 ‘이음피움’이 있다. ‘이음피움’이라는 이름은 실과 바늘이 천을 이어서 옷을 탄생시키듯 서로를 잇는다는 의미의 ‘이음’과 꽃이 피어나듯 소통과 공감의 피어난다는 뜻의 ‘피움’을 합해 만들었다고 한다.

채석장 전망대에서 최재형 의원은 “지난 선거에서 ‘정치가 좀 달라져야 한다’는 우리 국민의 바람 덕분에 제가 당선될 수 있었던 것 같다”며 “때문에 국민이 원하는 정치의 변화의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도 느낀다”고 했다.

“선거를 치르면서 제가 얻은 중요한 교훈은 정치라는 것이 결국 표를 얻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정치가 민심과 동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선거를 치르는 동안 유권자들에게 고개만 숙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숙이고 낮은 자세로 계속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주민들의 마음과 뜻을 앞으로의 정치에 담아내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섬기는 마음을 담은 정치를 하겠다는 각오로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겠습니다.” 🍵

글 박민선 사진 김지범

## ‘처음부터 끝까지 지치지 않고 꾸준히’

### 서민의 눈물 닦아주는 정치를 위한 마음가짐

양경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재선의 서울특별시 시의원을 거쳐 제21대국회에 비례대표로 입성한 양경숙 의원은 여의도에서 손꼽히는 재정전문가다. 그는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위해 쉼 없이 노력하고, 후회가 남지 않도록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인생 좌우명도 ‘처음부터 끝까지 지치지 않고 꾸준히’라고 했다. 평생을 민주주의와 민생을 위해 살면서 편견과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정치를 해왔다는 양경숙 의원을 국회보가 만났다.

“국회의원은 그 누구보다 공적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치지 않고 꾸준히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늘 일에 몰혀 살다 보니 마음 편히 잠을 잔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시의원 때도 그랬지만 요즘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느라 정신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양경숙 의원은 재야민주화운동의 핵심 조직이었던 민청련(민주화운동청년연합)에서 조직부장 등을 역임하며 6월 항쟁 등 80년대 반독재 민주화 투쟁에 앞장섰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평민당에 입당해 30대 초반에 정치 1번지 종로에서 시의원에 출마해 당선됐다. 또 ‘한국 예산결정의 정치과정 분석’으로 행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그는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초빙교수, 자치행정연수원 지도교수를 역임했으며 국가와 자치단체, 국회 및 지방의회의 예산·재정관련 교육을 하는 한국재정정책연구원장을 맡기도 했다.

양경숙 의원은 “종로에서 3대가 살아온 집안의 남편을 만난 덕분에 종로에서 정치를 시작했다”고 했다. 그는 재선 후 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장’에 선출돼 유일한 여성위원장으로서는 위원회를 모범적으로 이끌기도 했다.

“당시 온갖 로비와 압력에도 불구하고 90년간 썩 이



자만 지불하며 수의계약으로 체결되던 서울시금고 공개경쟁을 관철시켜, 출연금 수천억 원과 수백억 원의 이자수입을 시민에게 되돌려주며 전국 지방자치단체 금고 계약 전체를 공개 입찰화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또 비리공무원의 퇴직 후 사기업 취업 문제, 지하철 설계, 시공, 감리 등 건설 및 운영문제, 대규모 재개발 비리, 공유재산 매각현황 조사, 신용보증재단 운영문제 등을 지적해 시정조치 했습니다. 덕분에 서울시 의원 중 언론매체에 가장 많이 보도된 의원에 오르면서 공무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의원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 예산 및 재정에 대한 전문성 발휘해 정책방향 제시

제21대국회에서 양경숙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자산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되고,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더욱 커지는 것을 보면서 예산 및 재정에 대한 전문성을 발휘해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에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예산안과 추경안을 꼼꼼히 심사했습니다. 특히 벼랑 끝에 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추경안 마련에 애를 썼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상임운영위원이기도 한 양 의원은 최근 원내 민생부대표를 맡게 됐다. 그는 “민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장을 잘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민생간담회와 현장방문 등으로 소상공

인, 자영업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이를 입법 및 의정활동에 반영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양경숙 의원은 1호 법안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고 법안은 2020년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부실시공에 따른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 토지임대부 주택 활성화를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현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해소한 ‘세무사법’ 개정안 등도 대표발의해 이중 ‘주택법’ 개정안과 ‘세무사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정법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해소 등 시장경제의 구조적 문제의 해결을 위한 ‘사회적경제기본법’과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법’, 부동산투기의 사전예방을 위한 ‘부동산감독원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등도 대표발의해 본회의의 통과를 위해 힘을 쏟고 있다.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 취약계층은 늘 정책에서 소외되고 ‘공정과 평등’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서민의 뒷배가 되어주는 정책과 제도가 절실합니다. 저는 늘 서민이 걱정 없이 사는 나라를 꿈꿉니다. 소득불균형을 완화하는 정책을 도입하고 실업, 주거,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민의 오늘, 민생의 안녕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자유가 들꽃처럼 만발하고 통일에의 희망이 무지개처럼 피어오르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신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지치지 않고 꾸준히’ 나아가겠습니다.”

글 김현아 사진 유윤기

# “정치란 행동과 실천이 동반되어야 하는 것”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충청북도 제천시단양군)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충청북도 증평군진천군음성군)



국회보 6월호 ‘칭찬합시다’의 주인공은 엄태영 의원이다. 그를 추천한 임호선 의원은 “초당적인 협력과 소통을 갖춘 충북의 든든한 선배님”이라고 소개했다. 이에 엄태영 의원은 “임호선 의원님은 평생을 경찰 공무원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힘써 오신, 국민과 국가를 위한 봉사정신이 투철하신 분”이라면서 “같은 충북 의원으로 앞으로도 함께 소통하고 여야의 협치를 이끌고 싶다”고 말했다.

엄태영 의원은 1991년 33살에 충북 최연소로 제천시 의원에 당선되며 젊은 정치인으로서 관심을 한 몸에 받았다. 이후 민선 3~4기 제천시장 재선을 거쳐 제21대국회에 여의도에 입성했다. 엄 의원과 정치와의 인연은 지역사회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면서 시작됐다.

“시의원이 되기 전부터 다년간 한국청년회의소 충북 지구 이사, 대우자동차 제천·단양 지점 대표이사 등을 맡아 지역주민과 소통하며 지역에 대한 이해를 넓혀 나갈 수 있었죠. 이러한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활동 속에서 제 고향을 위해 어떤 일을 할 것인지 고민하다 정치야말로 국민의 삶과 국가 발전에 직결된다는 결론을 내리



고 정치 입문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행정을 할 줄 아는 정치인으로 인정받는 업태영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하는 입법 활동과 정부 정책에 대한 견제와 감시, 국가 예산 심의 등 전반의 활동이 공공의 이익으로 환원되는 것을 몸소 느낄 때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지난 총선 당시 제천시와 단양군이 갖고 있는 천혜의 관광자원을 활용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던 그는 제1호 법안으로 ‘중부권글로벌관광도시조성에관한특별법’을 발의했다. 법안은 제천·단양 관광자원을 활용해 글로벌 관광도시로 만들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도지사가 종합계획에 따른 연차별 실시계획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엄 의원은 코로나19로 장기간 힘들었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와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 지역균형발전 기틀 마련할 것

업태영 의원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지역균형발전’이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역대 정부마다 지방소멸 방지, 지역균형개발, 국가균형발전 등의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수도권과 지방 양극화는 심해졌고 지방 도시의 경우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등 소멸 위기에 처한 상황입니다. 청년들에게 지방에 있는 고향은 더 이상 장밋빛 미래를 기대할 수 없는 탈출 대상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제천시장에 재직할 때부터 지역의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장래가 촉망되는 다수 기업을 지역에 유치하며 청년 일자리 창출에 힘써왔습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으로서 국가 100년 대계를 위한 균형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 이전과 지역 대학과 연계, 산·관·학 클러스터를 만들어 지역별 특색있는 산업과 문화를 발전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인은 말뿐이 아닌 민의를 대변하는 행동과 실천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인도의 정치인 자와할랄 네루는 ‘정치란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평소 즐겨 암송하는 명언이자 정치철학이기도 합니다. 국민들의 아픔과 눈물을 생각하는 초심을 잃지 않는다면, 새로운 변화와 따뜻한 혁신을 이룰 수 있다고 믿습니다.”



### 양기대 의원을 칭찬합니다

“양기대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 광명시을)은 제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부포럼에서 연구책임위원으로 같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양 의원님은 탁월한 인품과 실력을 두루 갖춘 능력 있는 공직자로서 무엇보다 추진력과 기획력이 탁월해 제21대국회에서 지역구 현안 사업 등을 해결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큰 발자취를 남겼다는 평가를 받고 계십니다. 민생 안정을 위해 여야의 협치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만큼, 앞으로도 양기대 의원님과 함께 민생을 대변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힘쓸 것을 약속드립니다.”  글 윤성혜 사진 임진완

## 국민 생명 살리는 의사에서 국민의 삶 살리는 의원 되고 싶어



신현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최근 한 국회의원이 KTX 열차 안에서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진 60대 남성 승객의 응급처치를 도운 것으로 알려져 화제를 모았다. ‘그 의원’이 바로 가정의학과 의사 출신인 신현영 의원이다. 한양대 명지병원 코로나 19 역학조사팀장을 지낸 신현영 의원은 공공의료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제21대국회에 입성했다.

세 딸 가운데 막내였던 신 의원은 생물 선생님인 아버지와 간호사인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 어렸을 때부터 인

체와 보건의료에 대한 관심이 컸다고 한다. 신 의원은 사교육을 받을 수 있는 형편이 안 돼 ‘헝그리 정신’으로 공부했는데 운 좋게도 서울과학고에 진학했다고 했다. 그는 “고교 기숙사 시절, ‘천재와 영재 사이’를 오가는 우수한 친구들 사이에서 평범하기 그지없던 저는 하루하루 노력하는 삶을 사는 습관을 갖게 됐다”고 회상했다.

가톨릭대 의대 시절, 신 의원은 2005년 인도네시아 쓰나미 당시 의료봉사활동을 계기로 의사의 다양한 사회적 역할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 국회에 들



어오기 전까지 한양대 의대 교수로 일했던 그는 2019년 한국여자의사회와 한미약품이 공동 제정한 ‘한미 젊은 의학자 학술상’ 수상자로 선정됐을 만큼 진료와 함께 연구에도 몰두했다.

적극적으로 사회적인 ‘목소리’를 내는 데도 주저하지 않았다. 수련의 시절에는 대한전공의협의회 복지이사를 맡아 수련병원에서 인권 침해를 겪는 수련의들의 목소리를 대변했고, 한국여자의사회 법제이사를 맡을 당시에는 여성 의사가 의료계에서 겪는 차별 사례 등을 조사한 내용을 처음 발표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대변인을 맡는 등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

그리고 2020년 코로나19 사태가 터졌다. 신 의원은 “감염병은 사회적 재난에 해당된다. 의사협회 대변인 시절 메르스를 겪었고 또 이번에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이 재난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고민이 많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당시 근무하던 명지병원에서 코로나19 역학조사팀장을 맡아 동분서주했다. 코로나19의 의학적 속성, 임상 경험을 케이스 리포트(case report)로 보고하자고 제안해 논문으로 정리했고, 현장에서 습득한 바이러스의 임상 정보를 알리고 이에 맞는 정책을 정부에 제안하는 등 국민과 소통하는 역할도 맡았다.

신현영 의원은 “의료현장과 국민 소통, 정부의 감염병 정책을 위한 국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였기에 의료인 출신으로서 보건의료체계를 정비하는 데 도움이 되고 싶었다”고 했다. 이와 함께 “‘젊은, 여의사, 워킹맘’으로서 겪어야 했던 의료계의 불공정, 성평등, 열악한 제도적 환경 등에 대해 누군가는 목소리를 내고 개선해야 한다는 시대적 사명감도 느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래서 의정활동 목표도 ‘감염병에 안전한 나라’, ‘환자와 의사가 행복한 나라’, ‘아동이 안전한 나라’, ‘워킹맘을 포함한 여성이 차별받지 않는 나라’로 정하고 지

난 2년을 보내왔다”고 회상했다.

지난 2020년 5월 국회에 입성한 그는 ‘제1호 법안’으로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시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는 “감염병 시기에 전문성을 발휘하며 과학적 근거를 쌓은 질병관리본부가 독립성을 가진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되는 것이 매우 중요했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지난 2년간 정은경 청장이 맹활약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의사로서의 환자 진료와 국회의원으로서 ‘국민 섬김’은 닮은 점 많아

전문성을 살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복지위의 유일한 의사 국회의원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바쁘고, 빠르게 달려왔다”고 회상했다.

“의사로서 환자를 진료하는 일과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을 섬기는 일은 닮은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과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일, 모두 소중하면서 일맥상통하는 일입니다. 건강과 복지, 연금개혁까지 앞으로 전문성을 발휘해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지난 2년을 바탕으로 남은 2년간 코로나19 회복과 또 다른 신종 감염병 대응 준비, 고령화·저출생 시대의 대안 마련 등을 위해 ‘선택과 집중’이라는 화두를 더할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에게 ‘KTX 안에서 심근경색 환자를 구한 의사 출신 국회의원’이라는 기사에 대해 물어봤다.

“환자 생명을 살린 미담 기사를 넘어, 우리 정치에서 ‘국민의 삶을 살리는 국회의원’이라는 미담 기사가 넘쳐나는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하루하루 성실하고, 모범적인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

글 박민선 사진 유윤기



# 국회 본회의, 검찰 수사권 분리하는 ‘검찰청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배달 라이더 적용 ‘산재보험법’ 개정안 등 의결

국회는 5월 29일 제397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법률안 110건 등을 의결했다.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는 업무상 재해 보상을 확대하기 위해 ‘배달 라이더’도 산재보험을 적용받도록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국정운영의 효율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제고하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법’,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한 대응 강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이 처리됐다.

이에 앞서 국회는 4월 30일 제396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고, 5월 3일 제39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검찰 수사권 분리에 관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사법체계 전반을 논의하기 위한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도 처리했다.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http://likms.assembly.go.kr))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본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법률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의 범위에서 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 등 4개 범죄를 삭제하고 경찰공무원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를 포함하도록 했다. 다만, 선거범죄의 경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대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부칙에 경과조치규정을 두었다. 또 개정법은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를 제외하고 검사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의 경우 검사가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헤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수사할 수 있음을 명시했다. 아울러, 수사기관 준수사항으로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하지 말 것과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또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사결과 불송치결정을 받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주체에서 고발인을 제외하도록 했다.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은 항공승무원에 대한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체계를 일원화하고 우주방사선과 관련해 건강보호의 필요성이 높아져 개정됐다.

개정안은 항공운송사업자의 우주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제 기관을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로 일원화하고, 항공운송사업자가 우주방사선에 피폭할 우려가 있는 항공승무원의 건강 보호 및 안전을 위해 승무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했다. 또 항공승무원이 우주방사선 피폭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원안위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이번 개정으로 원안위의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감독과 책임이 강화되고 항공승무원에 대한 건강보호 안전관리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뉴 스페이스(New Space) 시대에 접어들면서 우주산업의 규모가 급격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우주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효과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개정됐다.

개정안은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에 민간 우주개발 촉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정부와 협약을 맺어 우주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은 필요한 경우 그 사업의 일부를 다른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우주신기술, 우주산업클러스

터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민간 우주개발 지원시책 마련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우주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우주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며 자생적인 우주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기업정보 유출, 랜섬웨어 감염 등의 사이버 침해 사고 및 스미싱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재발 방지와 후속 대응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사이버 정보 침해사고 예방을 위해 정보보호 취약점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해, 정보보호 취약점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또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한 후속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 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규정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방지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스미싱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청장이 해당 전화번호의 이용 제한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추



가적인 피해를 원천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제주와 세종에 이어 강원도를 ‘특별자치도’로 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처리됐다. 그동안 강원도는 군사규제 및 자연환경 보존 규제 등이 중첩돼 상대적으로 개발이 더디고 지역 경제가 발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특별법은 기존의 ‘강원도’를 폐지하고 정부 직할로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하는 내용이며, 총 23개 조항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한 특별지원·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별도 계정 설치·자치사무 위탁 등의 특례를 담았다. 이번 특별법 통과로 강원도의 지역 경쟁력이 제고되어 지방분권 및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당법’ 제37조제2항에서 정당의 정책 및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현수막 등을 이용해 홍보하거나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행위를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옥외광고물법에서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현수막을 표시·설치하는 경우를 광고물의 허가·신고, 금지·제한의 적용배제 대상(현행법 제8조)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어 대집행, 철거의 대상이 되기도 해 이를 개정해

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표시·설치하는 경우’를 현행법에 따른 허가·신고 및 금지·제한의 적용배제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해,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의해 보장되는 정당활동의 자유가 보다 두텁게 보장될 것으로 보인다.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안’

인구의 자연적 감소와 수도권 등 도시로의 인구집중으로 인한 인구의 사회적 감소로 지방소멸 위기문제가 가속화되고 있어 구체적인 제도 특례와 추진체계 등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별법안은 시군구, 시도, 국가 상향식 계획수립, 국가와 지자체 간 사업 공동추진을 위한 협약, 공공서비스의 공동이용 등을 위한 지자체 간 생활권 연계,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연계한 계획 등을 수립하고, 인구감소지역 내 보육, 교육, 의료, 주거, 교통, 문화, 외국인, 노후시설, 산업단지 등 각종 분야에 대한 특례 및 시책을 규정하도록 했다.

이 특별법안은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지역활력 도모로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험한 환경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소방·경찰공무원 등이 질병에 걸리거나 질병으로 인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현행 제도는 전문적 지식과 정보가 부족한 공



무원 측에게 질병과 공무 간 관련성을 스스로 입증하도록 해, 공무원과 유족에게 입증과정상 과도한 정신적·경제적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개정안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공무수행과정에서 상당기간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돼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도록 했다.

또한 공무상 부상이 공무상 사고로 인해 발생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생략하도록 해 보다 신속·용이하게 공무원과 그 유족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 ‘수상레저안전법’ 전부개정법률안

법률안은 수상레저활동을 체계적으로 규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개정됐다.

개정안은 5년을 주기로 수상레저안전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수상레저기구의 일반조종면허 연령조건을 강화했다(제1급 조종면허에 한정하여 연령에 따른 조종면허 결격사유를 14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상향). 또 수상레저활동의 제한 규정 및 사고신고 의무를 정비하고, 과태료 조항도 정비해 인명안전장비의 미착용, 운항규칙 미준수 및 사고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에 대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했다.

이번 개정으로 체계적으로 수상레저활동을 규율하고 안전사고도 보다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청정수소 중심의 생산-유통-활용 전주기에 걸친 수소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수소가스터빈 등 수소발전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해 수소경제로의 이행 촉진을 위해 개정됐다.

개정안은 청정수소, 수소발전, 수소가스터빈 등의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등급별 청정수소 인증 및 인증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 수소가스터빈 등 수소발전 에 공급하는 수소를 생산하기 위해 사용되는 천연가스 에 대해 별도의 요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운영자 등에게 수소판매·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정수소로 판매하거나 사용하도록 하고, 전기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개설하는 수소발전 입찰시장을 통해 수소발전량을 구매하게 하거나 공급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청정수소 중심의 수소경제 육성기반을 조기에 마련해 관련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수소경제로의 이행 및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그동안 화학적 처리를 거치지 않은 물리적 재생원료(사용된 합성수지 제품을 회수·선별해 분쇄·세척한 뒤 불순물을 제거해 화학적 변화 없이 재생한 원료)는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어 식품 용기의 원재료로 사용



하는 것을 제한했으나, 최근 자원 재활용 확대를 통한 환경오염 예방과 국제적 추세를 고려해 사용된 식품 용기를 분류 수거해 안전성이 인정된 물리적 재생공정을 거치는 경우에는 식품 용기의 원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어서 이에 대한 근거 마련을 위해 개정됐다.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을 제조할 때 원재료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재생원료의 기준을 정해 고시하도록 하고, 물리적 재생원료를 제조하려는 자는 해당 재생원료가 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인정을 받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그간 식품 용기의 원재료로 사용이 금지되고 있었던 물리적 재생원료를 허용함으로써 자원 재활용 확대를 통한 환경오염 예방에 기여하고, 물리적 재생원료에 관한 인정 제도의 운용을 통해 식품 용기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년 7월 지역가입자 주택금융부채 보험료공제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동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주택금융부채 관련 정보를 금융회사로부터 제공받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실제 수행하고 있는 요양급여 대상 여부 확인 제도, 수탁사무의 수행,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업무에 관해 법적 근거가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개정됐다.

개정안은 지역가입자 주택금융부채 보험료공제 제도

의 시행에 있어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정보수집 대상에 추가하고, 2022년 9월분 보험료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 중 요양급여 대상 여부 확인 제도, 수탁사무의 수행,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의 법적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지역가입자 주택금융부채 보험료공제 제도의 안정적인 시행으로 2022년 9월분 보험료부터 지역가입자는 주택금융부채에 관해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도 명확하게 규정될 것으로 보인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배달 라이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사업주와 계약을 맺고 근무하지만, 정해진 월급이 아닌 일한 만큼 소득을 얻는 근로자)가 산재보험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특정 사업에의 전속(專屬)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런데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복수의 사업체에서 일감을 받아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종사자는 전속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산재보험에 가입을 하고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해왔다. 또한, 특수형태근로자가 ‘전속성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주된 사업장 외의 보조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다.

개정안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기존의 특례조항을 삭제하고, ‘노무제공자’라는 개념을 신설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포함함과 동시에 전속성 요건을 폐지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로써 그동안 여러 플랫폼에 소속되어 ‘전속성’을 충족하지 못했던 ‘배달 라이더’ 등 플랫폼 노동자들도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게 돼, 산재보험의 보호 범위가 한층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개정법 공포 후 시행 전에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보조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산재 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별도의 부칙이 함께 마련됐다.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미관 중심의 투명방음벽, 투명창 설치가 증가함에 따라, 조류 충돌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개정안은 인공구조물로 인한 충돌·추락 등 야생동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 등이 야생동물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소관 인공구조물을 설치·관리하도록 법에 명시했다. 또한 관련 야생동물 피해에 대한 실태 조사 및 피해방지 조치 이행을 위한 국비 지원 근거도 함께 마련해, 인간과 야생동물이 공존하는 환경을 확보하고자 했다.

한편, 개정법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불법 인공증식 문제와 관련, 상습적으로 인공증식 허가를 받지 않고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증식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했으며, 불법적으로 인공증식되거나 인공증식에 사용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몰수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등원하는 아동 간 환경교육 지원 수준이 달라 교육의 양·질에 차이가 발생하고, 초·중등학생 대상 조기 환경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져 개정됐다.

개정안은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과 ‘유아교육법’상 유치원에 대해 동일한 수준의 환경교육을 지원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환경교육 지원 내용에 관해 환경부장관은 교육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고 초등학교·중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환경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환경부에서 시행 중인 유아용 환경교육 프로그램 및 사업들의 운영 통일성이 도모되고, 기후위기, 탄소중립 등 다양한 환경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소양과 역량이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이 집적된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통령과 그 소속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물리적 사무공간으로 집무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부여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로써 그동안 대부분의 행정기관이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위치하고 있으나 행정수반인 대통령 및 그 소속기관의 집무실은 서울에 위치해 발생하는 국정운영의 비효율성이 해소될 것으로 보이며, 국가균형 발전 역시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 코로나19 시대에 참정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선거제도 도입

국회는 지난 2월 14일과 4월 15일 본회의에서 코로나19 시대에 새로운 선거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같은 해에 연이어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선거(3.9)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6.1)를 성공적으로 치르려면 기존과 다른 새로운 대안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 2월 14일 의결된 개정법률의 주요 배경과 내용

제20대 대통령 선거일로부터 한달 전이자 코로나19에 대처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처음으로 발의된 날인 2022년 2월 8일을 기준으로 보면, 당시에는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5만 명에 육박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격리자가 급증하는 시기였다. 국회와 언론 등은 제20대 대통령 선거 시 대규모의 격리자가 제대로 투표하지 못해 이들의 참정권이 침해되고, 그에 따라 대통령선거의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될 소지가 있는 등 사회적 혼란의 발생을 우려했다. 이에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는 코로나19 격리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해당 법률안의 내용은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과 연계해 코로나19 확진자 등 격리자를 정의했다. 새로운 선거제도가 적용되는 대상을 명확히 하고, ‘감염병예방법’과 ‘공직선거법’이 자연스럽게 연계되도록 했다.

둘째, 격리자가 선거권 행사를 위해 활동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감염병예방법’은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격리에 초점을 두고 있어, 격리자가 선거권 행사를 위해 투표소에 방문할 수 있도록 하려면 일시적 격리해제를 위한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했다.

셋째, 격리자가 선거권을 용이하게 행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



김일권 수석전문위원  
행정안전위원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격리자의 선거권 행사를 위해 교통 편의 등을 제공토록 하고, 서면 외에 인터넷으로도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인터넷 신고는 준비 기간을 고려해 지방선거 다음부터 적용토록 했다.

넷째, 격리자가 바깥출입 없이 혹은 별도의 구분된 장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신설했다. 격리자와 감염병관리시설 등이 각각 거소투표 대상이자 거소투표 대상시설임을 명확히 했고, 격리자를 위해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다섯째, 격리자와 일반 유권자를 분리해 투표소를 운영하도록 투표 시간을 구분·연장했다. 일반 유권자는 기존처럼 오후 6시까지 투표하되, 격리자는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별도로 투표하도록 했다.

#### 4월 15일 의결된 개정법률의 주요 배경과 내용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격리자는 사전투표 둘째날(3.5)과 본투표일(3.9)에 각각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그런데 본투표일과 달리 사전투표 둘째날에는 격리자 선거의 관리 및 집행에 있어서 준비 부족 및 부실한 운영이 크게 논란이 됐다. 이에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 및 집행을 철저히 하는 것 외에 법률개정 등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도 제기돼, 정개특위는 관련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다시 한 번 심의·의결했다.

해당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격리자 투표를 오후 6시가 아닌 6시 30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고, 본투표일 외 사전투표일에도 격리자에게 별도의 투표시간을 부여하는 것이었다. 격리자의 투표시간을 30분 늦춰 일반 유권자와 동선을 분리하고, 사전투표 둘째날 오후 6시 30분부터 8시 사이에 격리자가 투표할 수 있도록 했다.

#### 개정법률의 의의 및 향후 과제

위의 두 개정법률의 의의로는 첫째, 상충될 수 있는 격리자의 참정권과 일반 유권자의 건강권 간에 조화로운 보장을 도모했다는 점이다. 사전투표소 추가설치 및 별도 투표시간 부여 등으로 격리자와 일반 유권자의 투표소 내 시·공간을 분리함으로써 이를 달성하고자 했다.

둘째, 효과성과 효율성을 함께 추구했다는 점이다. 격리자의 선거권 보장 문제는 투표시간을 충분히 보장할수록 격리자의 참정권 보장이라는 효과성은 높아지지만, 그만큼 투·개표 마감시간이 늦어져 인력과 비용이 더 필요하게 되고, 선거행정의 효율성이 저하된다. 이에 법안심사소위에서 격리자를 위한 투표마감시간이 당초 제안된 오후 9시에서 오후 7시 30분으로 조정됐다.

마지막은 국회의 신속하면서도 신중한 위기대응능력이다. 첫 번째 개정법률의 경우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발의부터 심의·의결, 공포·시행까지 모든 절차를 일주일 만에 완료했다. 해당 개정안이 2월 8일 퇴근 무렵 국회사 무처(의안과)에 접수되자마자 그날 밤 검토보고서를 작성해 송부했고, 다음 날인 2월 9일 오전 10시에 정개특위 전체회의에 상정하는 식이었다. 이렇듯 신속성을 기하면서도,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정개특위 법안소위에서는 만 이틀 동안 해당 개정안을 심도있게 심사하는 등 신중을 기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 팬데믹을 지나 단계적 일상회복 중에 있으나, 동시에 변이바이러스 등 새로운 감염병의 출현과 유행 가능성도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향후에도 두 개정법률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 🍵

## 미국의 낙태 관련 입법동향

1973년 연방대법원의 역사적인 로 대 웨이드(Roe vs Wade) 판결 이래 미국에서 여성의 낙태는 헌법적인 권리로 인정되어왔다. 로 대 웨이드 판결은 여성의 낙태에 대한 권리를 헌법상 사생활의 권리에서 찾았으며, 태아가 자궁 밖에서 생존할 수 있는 시점(통상 임신 22~24주) 이전에는 낙태 금지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이러한 로 대 웨이드 판결 이후에도 낙태를 반대하는 보수적인 중서부 및 남부 벨트라인의 주들은 반낙태 법안을 계속 통과시키며 연방대법원을 지속해서 압박했다. 그간 정치적·상징적 행위로 치부됐던 이들의 도전은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연방대법원의 구성이 보수 쪽으로 급격히 기울면서 마침내 결실을 맺게 된다.

연방대법원은 작년 5월부터 임신 15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미시시피주 법을 심리 중인데, 오는 6월에 예정된 판결에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파기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5월 2일 폴리티코가 입수해 공개한 대법원 내부 문건에서 다수 의견은 헌법에는 그 문장이나 구조 어디에도 낙태에 대한 헌법적 권리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이 문제는 법원이 아닌 정치인이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뒤집힐 경우 낙태의 적법성은 각 주가 자율로 결정하게 되며, 이 경우 미국은 낙태를 금지하거나 매우 제한하며 인정하는 28개 주와 낙태에 대한 광범위한 접근을 허용하는 22개 주로 분할되는 새로운 시대



문성환  
국회 뉴욕 주재관

로 접어들 것이다. 미국의 각 주는 벌써 포스트 로(post-Roe)에 대비한 입법 전쟁이 한창이다.

### 올해만 최소 40개 주에서 531개의 반낙태 조항 도입

낙태를 지원하는 민간단체인 구트마허 연구소(Guttmacher Institute)에 따르면 올해만 최소 40개 주에서 531개의 반낙태 조항이 도입됐다. 작년에는 로 대 웨이드 판결 이후 가장 많은 100개가 넘는 반낙태 법안이 통과됐다. 이들 반낙태 법안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로 대 웨이드 판결에도 불구하고 태아의 자궁 밖 생존 시점 이전에 낙태를 금지한다.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텍사스주의 낙태법이 대표적인 이 법은 임신 6주가 지나면 낙태를 할 수 없다. 통상 임신 6주가 되면 태아의 심장박동이 감지되므로 이러한 법을 일명 ‘심장박동법(heartbeat bill)’이라 한다.

아이다호주 역시 텍사스주를 따라 동일한 낙태법을 지난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미시시피주, 애리조나주, 켄터키주, 플로리다주는 임신 15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며, 특히 오클라호마주는 산모의 목숨을 구하기 위한 긴급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낙태를 금지하는 가장 강력한 반낙태법을 주의회에서 통과시켜,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둘째, 포스트 로 이후 새로운 전선으로 대두될 낙태약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낙태약은 원격진료나 우편 배달을 통해 쉽게 구입할 수 있으므로 낙태를 금지하거나 엄격히 제한하는 주들에서 주요 우회 수단으로 이용되어왔다. 구트마허 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2020년에 이루어진 낙태의 54%가 낙태약을 통해 이

루어졌다고 한다. 이에 따라 올해 첫 3개월간 22개 주에서 낙태약을 제한하는 100개 이상의 법안이 제출됐다. 19개 주는 이미 낙태약을 원격진료로 처방받거나 우편을 통해 배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중 미시시피주 법은 낙태약을 의사 사무실에서 직접 삼키도록까지 하고 있다.

셋째, 시민들의 낙태 조력자에 대한 소송 허용과 지원으로 주정부가 아닌 시민 감시와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텍사스주 낙태법은 임신 6주 이후 낙태 시술을 한 의사나 타 주로 이동하는 것을 도운 택시 기사 등에 대한 시민들의 소송을 허용하면서 이들이 소송에서 이기는 경우 법률 비용을 포함해 최대 1만 불까지의 배상금을 지불한다. 아이다호주는 낙태 수술을 받은 여성의 가족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최소 2만 불의 배상금을 지불한다.

### 민주당 우세 지역, 반낙태 법안에 맞서 활발히 대응

이와 같은 레드 스테이트(공화당 지지 주)의 강력한 반낙태 법안에 맞서 블루 스테이트(민주당 지지 주)의 대응도 활발하다.

먼저 로 대 웨이드 판결에서 인정된 낙태 권리를 주 법이나 헌법에 성문화하고 있다. 뉴욕주는 2019년 재생산 건강법(Reproductive Health Act)을 제정해 가장 먼저 낙태 권리를 성문화했고, 뉴저지주와 콜로라도주는 올해 연초 낙태 권리를 주 법에 포함시켰다.

둘째, 낙태 시술을 받는 데 필요한 비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낙태 비용 지원은 지금까지는 무보험 여성에 대한 지원에 주로 초점을 맞추어왔지만, 포



대법원 앞 낙태 관련 시위 현장

스트로 시대에는 여행 경비 지원이 중요하다. 낙태가 금지된 주에 거주하는 흑인, 라티노, 십대, 무보험자 등의 취약계층 여성들은 아무래도 이동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낙태 피난처(abortion haven)를 자처하고 있는 뉴욕주는 현재 타주에서 오는 여성의 낙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펀드를 조성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셋째, 텍사스주와 같이 자신들의 정책 선호를 타주로까지 넓혀 낙태 피난처 주의 시민(의사)까지 처벌하는 법안에 대한 대응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중 코네티컷주는 재생산 자유를 가장 강력히 보호하는 법안이라 불리는 낙태법을 최근 통과시켰는데, 이 법률은 코네티컷주 주민이 합법적인 낙태 시술 행위 등으로 인해 타주의 법원이 소환할 경우 응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으며, 낙태 시술과 관련된 여성이나 의사의 개인정보를 다른 주나 기관에 넘기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 시사점

우리나라는 2019년 4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처벌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여전히 대체입법을 고민 중이다. 이와 관련해 낙태를 둘러싼 미국 사회의 논쟁과 입법례는 우리나라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 예를 들어, 태아의 생명이 언제 시작된다고 봐야 하는지, 여성의 인공임신중절 기간과 사유를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그리고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 관련해서 미국의 입법사례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만, 미국의 경우 텍사스주의 낙태법에서 보듯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사고가 개입된 측면이 강한데, 이 점은 대체입법 마련과정에서 우리도 주의해야 할 사항이다.

낙태 문제는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건강권에 대한 객관적인 비교 형량과 과학적·의학적 증거에서 해결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



## 동물보호법 개정, 성평등 추진기구 강화 등 주제로 토론회 열려

### 동물복지 제고를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 토론회

허은아 의원(국민의힘)은 5월 2일 국회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에서 ‘동물복지 제고를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반려견과 반려묘 등 반려동물이 크게 늘면서 반려동물과의 동반 생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31년 만에 개정된 동물보호법의 개정 내용을 확인하고 반려동물과 동물복지 제고를 위해 반려견 유기방지 이력제 도입과 반려견 생산업 규제 등 앞으로의 개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김지혜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변호사가 ‘사람과 동물의 공존을 위한 동물관리 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이어서 정은겸 대구대 반려동물산업학과 교수, 박애경 한국애견협회 부회장, 김영환 동물권단체 케어 대표, 홍유승 한국반려동물실명이력제협회 회장, 최용석 전국 반려동물생산자비대위 위원장, 한민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과 사무관이 패널로 참석해 반려견 유기방지 이력제 도입과 반려견 생산업 관리 강화 등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 ‘플랫폼 경제에서의 개인정보보호’ 토론회

김희곤(국민의힘), 진선미(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월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플랫폼 경제에서의 개인정보보호’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개인정보를 근간으로 하는 플랫폼 경제의 산업 경쟁력은 유지하고 소비자들의 개인정보 보호와 소비자 피해에 대한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의 좌장은 신현윤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맡았으며, 이병준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플랫폼 경제에서의 개인정보보호’를 주제로 발제했다. 이어 황윤환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 과장, 이병남 개인정보위원회 개인정보보호정책과 과장, 이진규 네이버 이사, 장준영 쿠팡 변호사, 정세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최은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플랫폼 산업의 비약적인 성장에 따른 개인정보 중요성, 최근 플랫폼 관련 해외 및 우리나라 법제도 동향,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방법, 플랫폼 경제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관련 소비자 이슈 등에 대한 토론을 펼쳤다.

### 성평등 추진기구 강화를 위한 국제 토론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5월 3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성평등 추진기구 강화를 위한 국제토론회’를 개최했다.

성평등정책 추진 기구의 역할과 중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토론회에는 주한벨기에대사관 공관차석 파트릭 앵글베르, 주한캐나다대사관 참사관 루슬란 카츠, 주한독일대사관 하나 베커 1등 서기관 등 3개국의 외교관이 발제자로 참석했다. 각국 외교관들은 자국의 성평등정책 추진 기구의 현황, 장관의 역할과 권한, 성평등정책 이행에 따른 주요 성과, 성평등정책의 의미 등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인 권인숙 의원, 조영숙 양성평등대사, 전윤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참여해 다른 나라의 사례 점검과 성평등 추진 체계 강화 및 성평등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기구의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

### 교육복지 강화와 전문인력 확대를 위한 국회 토론회

윤영덕·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5월 3일 ‘교육복지 강화와 전문인력 확대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교육복지사 산업안전실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교육복지 전문인력의 필요성과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복지사는 IMF 외환위기 이후 심화된 사회 양극화 및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근거해 만들어졌다. 교육복지사는 빈곤가정, 다문화가정 등 교육취약계층 학생의 학교 생활 적응 및 지

역사회와의 연계 등을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강은희 서비스연맹 정책국장이 진행을 맡았으며, 전구훈 숭실대 사회복지대학원 교수가 ‘교육복지사 전문인력의 필요성과 확대 방안’을 주제로, 한인임 일과건강 사무처장이 ‘교육복지사 산업 안전 실태와 개선방안 조사결과’를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이어 이근영 경기도 교육연구원 연구위원, 김혜지 학비노조 서울지부 교육복지분과장, 이상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장, 박상철 광주교육청 시민참여담당관 장학사가 토론 패널로 나와 발제 내용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밝혔다.

### ‘민식이법 시행 2주년 성과와 평가’ 토론회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5월 4일 ‘민식이법 시행 2주년 성과와 평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2020년 충남 아산에서 일어난 (故)김민식 군의 교통사고를 계기로 개정된 ‘민식이법’ 시행 2년이 지나, 우리 사회의 어린이 안전에 대한 인식과 개정법안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개선과제를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민식이법’은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시설과 장비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가해자가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사고를 낼 경우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을 통칭한다.

토론회의 첫 주제발표로 이소연 한국리서치 연구원이 민식이법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민식이



법 시행 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가 감소했고 운전자들의 운전습관이 개선되었다는 응답이 우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빈미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대책 효과의 제고방안’에 대해, 조동선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가 민식이법의 입법평가에 대해 발표를 진행했다.

이어 민식이법과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해 오랜 기간 취재해온 변진경 시사인 기자와 강수철 한국도로교통공단 경영본부장, 임재경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그리고 이제복 아동안전위원회 이사장이 토론자로 나서 민식이법의 성과와 평가에 대해 토론했다.

### ‘근로시간 유연성 개선, 어떻게 해야 하나?’ 정책토론회

한무경 의원(국민의힘)은 5월 11일 ‘근로시간 유연성 개선, 어떻게 해야 하나?’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택적 근로시간 정산기간 확대’와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등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근로시간에 대한 규제 해소 및 유연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토론회에서는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주제발표자로 나섰으며, 좌장으로는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류준열 서울시립대 경영대 교수, 최흥기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교수 등이 참석해 고용 환경의 변화에 따른 근로시간 유연화 입법의 필요성, 근로시간 규제의 패러다임 전환과 유연성 확보를 위한 과제, 중소기업 현장에

맞는 근로시간제도 유연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 병역특례 개선 방향 대토론회

안규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5월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병역특례 개선 방향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방탄소년단(BTS) 등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특례 문제가 주로 논의됐다.

현행 병역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다. 그러나 병역법 시행령에는 예술·체육 특기에 대중문화를 포함시키지 않아 BTS 등 국위 선양에 공을 세우는 대중예술인이 예술·체육요원에 편입될 수 없다는 점이 논란이 되고 있는 만큼 토론회에서는 열띤 토론이 이뤄졌다.

이남경 한국매니지먼트연합 국장과 모종화 전 병무청장은 “전성기가 짧은 대중문화예술인의 직업적 특성을 고려해 국가 차원의 지원과 공정한 병역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현행법을 개정하고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정부 차원에서 전반적인 병역제도 및 대체 복무제도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병역특례 제도에 대한 반대 의견으로 진석용 대전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징병제도의 의의는 ‘고역의 평등’이 아닌 ‘국방의 필요’에 있기 때문”이라며 국제노동기구(ILO)와의 협약 내용을 근거로 우리나라가 시행하고 있는 모든 보충역 및 대체 복무제도 폐지, 병역법 전부 개정을 주장했다. 🍵

# 건강 증진하고 삶의 질 높이는 ‘치유농업’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시행 2021. 3. 25.)

자연에서 식물을 가꾸거나 가축을 돌보는 일이 건강에 좋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치유농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치유농업은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활동 등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 증진 및 회복을 돕는 서비스를 말한다. 농촌진흥청의 연구에 따르면 노인의 경우 주말농장에서 꽃과 채소를 기르거나 허브차 만들기 등을 체험하는 것만으로도 우울감이 60% 감소하고 콜레스테롤과 체지방이 줄어들었으며, 청소년의 경우 학교 텃밭 가꾸기에 참여한 학생들의 불안감이 45% 줄어들었다고 한다.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치유농업법)이 2020년 3월 24일 제정되고 2021년 3월 25일 시행됐다. ‘치유농업법’의 제정 이유를 알아보고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시행 성과, 향후 계획 등을 들어봤다.

## 법 시행으로 지역별 치유농업센터 설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치유농업법’의 제정 이유에 대해 “선진국에서는 이미 국가 지원으로 치유농업의 효과,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품질관리 등에 대한 연구개발과 기술을 지원하고 전문가 양성을 통해 국민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국민이 농업·농촌 자원을 치유자원화하며, 안전하고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과 기반 구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연구개발·보급과 사업화, 전문인력 양성 등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노경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입법조사관은 “치유농업법 제정을 통해 치유농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활성화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 삶의 질 향상 및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는 제도적 기틀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치유농업법’에 따르면 농촌진흥청장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치유농업의 실태조사와 정보망을 구축해야 한다. 또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치유농



업 연구개발 및 보급, 창업지원 등을 추진하고, 치유농업사 자격 취득 및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해 규정하도록 했다.

‘치유농업법’ 시행 이후 농촌진흥청은 지역별 치유농업시설 운영자 교육을 추진하는 치유농업센터를 설치하고 식물·곤충·동물·경관 활용 치유농업 서비스 공간을 구축했으며, 치유농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양성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지난 3월 제1회 2급 치유농업사 93명을 배출했다.

농촌진흥청 측은 “연구개발 측면에서 대사성 만성질환 대상, 경증 인지장애 대상, 정신건강 증진 치유관광, 동물교감 치유 효과, 심리 치유용 곤충치유 자원 발굴 등을 추진 중이다. 또 발달·신체 장애인 활동 지원을 위한 스마트 시스템 개발, 4D/VR 활용 가상 치유농장 조성 기술 개발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촌진흥청은 1994년부터 ‘원예치료’를 시작으로 농업의 치유자원을 발굴하고 과학적 효과를 검증해왔으며 원예, 곤충, 자연경관, 동물매개 자원 등을 활용한 치유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있다.

### 농촌진흥청, 치유농업 4개 부문 13개 중점과제 추진

농촌진흥청은 지난 4월,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추진하는 ‘제1차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치유농업에 대한 연구개발, 성과확산, 기반구축, 사업화 촉진 등 4개 부문에서 13개의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 종합계획은 치유농업에 대한 체계적 연구개발과 확산에



어르신들이 화초를 가꾸는 치유농업을 교육받고 있다.

필요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 “다각화된 치유농업 사업모델 육성과 일자리 창출로 농촌의 활력을 도모하고, 다양한 치유농업 서비스로 국민의 삶이 높아지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도 관련 조례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현재 전국에서 치유농업 관련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경기·강원·인천 등 광역자치단체 10곳과 기초자치단체 30곳에 이른다. 조례는 지역 치유농업센터 건립과 치유농업 지원방안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농촌진흥청 측은 “치유농장이라 불리는 치유농업시설의 품질을 강화해 국민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시설 조성을 위해 치유농업 품질인증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품질인증 개념과 인증기준 등을 신설해 치유농업시설을 차별화하고 국민 신뢰성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글 고영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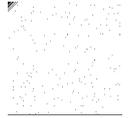
## 뇌 산업 진흥 및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합니다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2021-11-1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결

2021-12-02 본회의 의결





※ 법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회 홈페이지 [www.assembly.go.kr](http://www.assembly.go.kr)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구성 이진택

## 비대면 시대, ‘챗봇’이 뜬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한번쯤 사용해 봤을 ‘챗봇’. 챗봇은 ‘수다’라는 뜻의 채터(chatter)와 로봇(robot)을 결합한 단어로 메신저에 채팅을 하듯이 질문을 입력하면 빅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응답 규칙이 만들어진 인공지능(AI)과 일상 언어로 대화할 수 있는 대화형 메신저다. 급격한 기술 발전과 코로나19 등 비대면 시대에 접어들면서 쇼핑몰, 헬스케어,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 모든 분야에서 챗봇 서비스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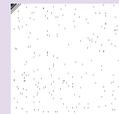
경기도 성남시 판교에 위치한 와이즈넷은 2000년 설립 이후 22년 동안 언어처리기술 기반의 검색 소프트웨어부터 AI 챗봇까지 기술혁신, 원천기술 확보로 국내 4천200여 고객사와 글로벌 10개국에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있는 AI 챗봇, 검색 소프트웨어 1위 기업이다. 와이즈넷이 보유하고 있는 언어처리 기술·빅데이터 수집 및 분석, 인공지능 챗봇 기술은 차세대 AI 기술의 핵심으로, 산업별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의 기반이 되고 있다. 설립 이후부터 현재까지 자체 부설 R&D연구소를 통해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기반 기술인 언어처리 및 의미 분석 기술, 텍스트 마이닝, 인공지능 대화처리 기술 등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왔다. 와이즈넷은 이러한 기술을 기반으로 인공지능 챗봇, 빅데이터, 검색, 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이끌고 있다.

이 중 와이즈넷의 대표적인 기술 및 제품은 언어처리 기술 기반의 인공지능 챗봇이다. 챗봇은 AI기술 중에서도 단일기능에 해당하는 언어기능으로 언어 분석, 의미 이해, 대화 이해 및 자동 통번역, 질의응답, 텍스트 요약 등을 담당한다. 와이즈넷의 챗봇 솔루션 ‘WISE iChat(와이즈 아이챗)’은 지난 20여 년간 자체 개발한 자연어 처



### (주)와이즈넷

이번호에는 AI 산업 분야의 유망 중소기업으로 최근 우수 혁신 기술부문 산업부장관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경기도 주최 디지털 이노베이션 어워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 표창을 수상한 와이즈넷을 소개합니다. 와이즈넷은 언어처리기술에 기반한 검색 소프트웨어를 시작으로 인공지능 ‘챗봇(Chatbot) 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소프트웨어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인공지능(AI) 전문 기업입니다.



리기술과 머신러닝, 텍스트마이닝, 의미분석 및 검색 등이 복합적으로 융합된 인공지능 챗봇 솔루션이다. 이는 웹과 앱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채팅 플랫폼을 활용해 컨택 센터, 민원상담, 내부 업무 문의 등을 자동으로 응대하고, 이용자에게 높은 편의성을 제공해 운영기관의 비용 절감 등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특히, 고객이 기술 라이선스를 구매해 자사 챗봇으로 구축해 활용하는 '구축형 챗봇'의 대표적인 예로 서울시 콜센터 120의 '서울톡', 신한은행 AI 금융파트너 챗봇 '솔메이트 오로라', 병무청 민원상담 AI 챗봇 '아라' 등이 있다. 또 '서비스형(Cloud)'으로도 제공하는데, 서비스형 챗봇은 그간 와이즈넷이 쌓아온 구축형 챗봇 사업의 경험을 토대로 발굴된 기술력을 클라우드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것으로 서울대 IT전산 챗봇 '스누봇', 이화여대 학사 행정 챗봇 '채티', 아주대 입학처 챗봇 '새봇', 오산시 차량등록사업소 '까봇' 등이 있다. 강용성 와이즈넷 대표는 "와이즈넷의 솔루션은 전 산업계가 인공지능을 활용한 기업의 비대면 디지털 서비스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핵심 서비스를 제공하는 챗봇 소프트웨어로, 국가 주무부처 및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금융, 유통, 의료, 물류 등 산업 전반에 도입되어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와이즈넷의 인공지능 챗봇 기술은 세계적인 권위의 국제인공지능학회(AAAI) 2021에 채택된 59건의 한국 논문 중 '딥러닝 기반 멀티턴 대화 향상 기법' 논문이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고, 제21회 대한민국소프트웨어대상 대통령상 및 신SW상품대상, 인텔리전스 대상 등을 수상하며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강 대표는 "4차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으로서 자부심



강용성 와이즈넷 대표가 인공지능 챗봇 기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도 있지만 최첨단 기술을 보유한 인재 확보가 필수인 이 시장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연구하는 인력보다 시장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산업 인력 가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무엇보다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을 지원 대상으로 하는 각종 지원과 운영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정부 차원의 우수 인력 채용과 유지에 실질적인 지원과 실효성 있는 협력 프로그램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특히, 우수 소프트웨어·IT인재를 발굴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산업계를 조성하기 위해 정부와 산업계, 학계 간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으로도 와이즈넷은 4차산업의 핵심기술을 이끌어가 갈 기술 전문 기업으로서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양질의 데이터, 역량있는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최고 성능의 챗봇 기술을 내재화해 인공지능 산업 및 정보·통신 기술을 선도해 나갈 와이즈넷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

경기 성남: 글 윤성혜

## 국회, 국무총리 후보자 등 인사청문회 실시

### 인사청문특위,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주호영)는 5월 2일부터 이틀간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자질과 도덕성 등을 검증했다.

청문회 첫날인 2일 한 후보자는 전관예우·이해충돌 등 공직자 시절 및 퇴임 이후 자신의 이력을 두고 제기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퇴임 후 법률사무소 ‘김앤장’ 재직과 관련해 “저 자신이 특정 케이스에 관여한 것이 한 건도 없고 제 후배인 공무원들에게 단 한 건도 전화하거나 부탁한 바가 없다”고 해명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가 재정 운용에 대해 한 후보자는 “세수를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데는 늘려야 재정 건전성이 다시 회복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팬데믹 때문에 재정이 단기적으로 조금 압박을 받는 건 불가피하다”면서 “빚을 얻는 건 대책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지출의 구조 조정을 해야 한다. 제대로 들여다보면 줄일 데가 있다. 낭비성, 소모성 지출을 줄이고 건전한 국가가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 한 후보자는 “용적률 조정, 주택지 확보 등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주택 공급에 대해 국민을 안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주택 공급이 지금 당장 늘지 않더라도 ‘공급 계획이 믿을 만하다’는 신뢰를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이 굉장히 현명해서 세제나 규제로 수요를 먼저 줄이면 공급도 줄어들기 시작한다”며 “공급을 늘리는 특단의 대책을 처음부터 열심히 하지 않으면 도저히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윤후덕)는 5월 2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여야 위원들은 부동산정책, 가계부채 문제, 물가관리 등 경제정책 전반에 걸친 질의를 통해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 정일영 위원(더불어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와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에 대한 입장을 질의했다. 추 후보자는 ‘임대차 3법’에 대해 “태어나서는 안 될 제도였다고 생각했고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화가 없다”면서 “다만 제도가 시행되고 2년이 지나 순응하고 거래하는 국민이 있다. 제도가 부당하다고 해서 한꺼번에 돌리면 시장의 혼란이 있을 테니 시장 상황을 봐서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종부세에 대해서도 “지금 당장 종부세를 폐지하긴 어렵다”며 “시간을 두면서 재산세와 통합하는 문제를 연구하고 논의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에 대해서는 “현 정부에서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세제를 활용했다는 측면을 이해하지만 과도했다고 생각한다. 양도세와 종부세를 함께 검토해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병수 위원(국민의힘)이 “물가 수준을 어떻게 전망하고 있나”라고 묻자 추 후보자는 “최근 물가불안은 그동안 광범위하게 전 세계에 퍼져있던 유동성 문제와 저금리 문제가 바탕에 깔려 있다. 지난달 수준의 물가상승 추세가 조금 더 심화되는 정도의 물가불안이 당분간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통일위,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이재정)는 5월 2일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자질과 도덕성 등을 검증했다. 박진 후보자는 김기현 위원(국민의힘)이 전술핵 배치에 대한 입장을 묻자 “한미동맹의 긴밀한 공조 통한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가 지금으로선 한반도 평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답변했다. 이어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대해 한미 연합방위력을 강력하게 유지하는 게 현재로선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박 후보자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에 대해서

도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김영주 위원(더불어민주당)의 사드 추가배치에 대한 질의에 “신정부에서 심도 깊게 검토해서 어떤 결론을 낼지 깊은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중요한 건 안보 문제로 인해서 경제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면서 “우리 안보를 위해서 가장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한미동맹을 강조하다 중국과 갈등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현명한 외교를 수행해야 한다”면서 “중국이 한국의 의도를 오해하지 않도록 전략적 소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중국 견제 성격이 강하다고 평가받는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의 협의체) 가입에 대해선 “국익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한다면 거기엔 적극 참여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 문화체육관광위, 박보균 문화체육 관광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이채익)는 5월 2일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자질과 도덕성 등을 검증했다. 야당은 중앙일보 기자 출신인 박 후보자의 과거 칼럼·강연 내용 등을 바탕으로 ‘친일 역사관’, ‘정치적 이념 편향성’ 등에 문제를 제기했다.

임오경 위원(더불어민주당)이 박 후보자의 2014년 한림대 과학원 강연 중에서 ‘일본인들의 준법정신’을 언급한 대목에 관해 “일본의 아시아 침략을 미화하는 내용”, “이런 왜곡된 역사관으로 제대로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나”고 비판하자 박 후보자는 “일본이 최근 보이는 질서 의식을 이야기했다. 동일본대지진 당시 일본인들의 질서 의식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이 높이 평가했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 위원들은 박 후보자가 기자 시절 문화·체육·관광 분야와 관련해 전문성을 발휘한 사례를 부각하고 코로나19 피해 대책에 대해 질문하는 등 정책 위주 검증에 집중했다. 최형두 위원(국민의힘)은 “박 후보자가 1990년대부터 각종 언론 보도와 저술 활동으로 미국 워싱턴D.C. 소재 대한제국 공사관 매입에 일조했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다”며 “대한민국 역사와 문화와 전통의 자주성을 회복하는 계기였다”고 강조했다.



**환경노동위, 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박대출)는 5월 2일 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자질과 도덕성 등을 검증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과 녹색경제로 전환을 위해 환경부가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며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실현가능한 이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지난해 NDC를 상향(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할 때 여론 수렴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박대수 위원(국민의힘) 질의에 “논의를 압축적으로 진행하면서 산업계나 이해관계자와 논의가 미흡했다고 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은 매우 도전적인 목표임은 분명하지만, 국제사회에 약속한 만큼 준수하되 실행방안에 대해서는 지혜로운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한 후보자는 원자력발전이 ‘녹색’(친환경적)인지 묻는 윤미향 위원(무소속)의 질의에는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해서는 녹색 탄소원으로 분류된다”라고 답변했다. 원전보다는 재생에너지를 늘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문에는 “장기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방향에는 동의하나 그 과정에서 원전과의 비중이 적절히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이현승)가 5월 2일 실시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부동산 정책이 쟁점이 됐다.

원 후보자는 이날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표 등을 묻는 심상정 위원(정의당)의 질의에 집값을 단기간에 하향 안정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밝히고 “이미 진행되고 있는 도심 내 정비사업 등의 속도를 높이는 것과 함께 기존의 매물이 나오도록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1년 유예하는 등 공급에 플러스 효과를 줄 수 있는 정책을 하루빨리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동안 주택 공급이 억제돼 있었고, 수요는 세금 등으로 눌러 있어 집값 상승이 초래됐다고 진단했다.

원 후보자는 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의 원인을 묻는 정동만 위원(국민의힘)의 질의에 “시장과 싸우면서 가격을 직접 통제해 국민의 정당한 욕망을

최악시하고 징벌하려 했다. 국민과 시장이 어긋난 반작용 때문”이라고 답했다.

원 후보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관련해서 “DSR은 작년에 도입됐고 지속적으로 강화돼야 한다. 다만 특정 대상, 특히 미래소득이 과소평가된 청년층에 대해선 완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7월 말로 시행 2주년을 맞는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거의 폐지에 가까운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오는 8월이면 2년 전 재계약한 물건이 나오면서 전셋값이 크게 오를 것이라는 우려와 관련해서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며 선제적으로 안정화 정책을 펴겠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원욱)가 5월 3일 실시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의 재산형성 과정과 증여세 탈루 의혹 등에 대해 집중적인 검증이 이뤄졌다.

이날 청문회에서 양정숙 위원(무소속)은 이 후보자가 원광대 재직 당시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공동개발한 기술로 거액의 특허료를 받은 부분을 집중 질의했다.

양 위원은 “개인이 특허 출연료를 다 받는다고 하면 아무리 연구개발(R&D) 예산을 많이 들이고 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 기술이 중요하다고 해도 국가 발전이 아니지 않은가”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자는 “법과 규정, 절차를 다 지켰다. 수익이 KAIST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세계 최초로 3차원(3D) 반도체 기술인 ‘벌크 핀펫’(Bulk FinFET)을 개발해 인텔·삼성 등으로부터 거액의 특허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영찬 위원(더불어민주당)은 후보자가 10년여 동안 부부 간 증여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가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뒤늦게 신고하고 증여세를 낸 사실을 추궁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세무에 지식이 없고 일에 집중하다 보니 그런 부분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국방위,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국방위원회(위원장 민홍철)는 5월 4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자질과 도덕성 등을 검증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새 정



부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른 국방부 이동 문제가 쟁점이 됐다.

기동민 위원(더불어민주당)은 “집무실 이전에 따라 국방 안보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군사 공백, 안보 공백, 통신 공백, 망 공백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상할 수 없는 규모의 국민 혈세가 낭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신원식 위원(국민의힘)은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해 얻는 국가적인 이득에 비하면 그에 대한 리스크와 비용은 훨씬 적다”고 말했다. 그는 “필요하면 여야가 현장에 한번 가보는 것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당선인의 공약 후퇴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와 취임 직후 병사 월급 200만 원 지급을 공약했으나, 이를 새 정부 국정과제에서 제외하거나 수정 반영했다는 것이다. 김병주 위원(더불어민주당)은 병사 월급 인상과 관련, “공약 후퇴로 병사들이 좌절을 느끼고 있다는 소리가 들린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병사 월급 200만 원 지급 공약과 관련, “당선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많이 고민했는데 재정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일부 점진적으로 증액하는 것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사드 추가 배치 공약을 국정과제에서 제외한 데 대해서는 “조금 더 현실적으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된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위성곤)가 5월 4일 개최한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정책 질의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에 대한 질의가 많았다. 윤재갑 위원(더불어민주당)은 “CPTPP 가입으로 수산업계가 염려하는 것은 높은 수입률과 함께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수입될 수 있다는 우려”라며 “가입 후 손해를 보는 업종과 농업·수산업 분야 손실 대책을 세워야 한다. 직접적인 피해 규모만 추산해도 700억 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조 후보자가 “직접 피해만 720억 원을 상회하고 중국도 가입하면 (피

해 규모는) 2천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한다”고 답하자, 윤 위원은 “가입을 못하게 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지만 손실 보는 분야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만희 위원(국민의힘)은 CPTPP 가입 후 어민 피해 대책으로 ‘폐업지원제’ 재도입과 현실적인 제도 운용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폐업지원제 지원 대상과 지원 시기 등 요건이 현실과 동떨어지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달라”고 주문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 이개호 위원(더불어민주당)은 “해수부 주관으로 관계 부처와 함께 국민을 보호할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환경노동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박대출)는 5월 4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 등을 검증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의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시절 비위 의혹, 삼성그룹 자문료 논란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

윤준병 위원(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시절 노동부가 이 후보자를 해임할 것을 재단 이사회에 요청했던 점을 언급하며 “사무총장은 일반 임직원보다 훨씬 책임이 큰 직책”이라며 “당연히 해임돼야 할 것 같은데 부결됐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시절 성희롱 사건 지연 처리, 부하 직원으로부터 고급 양주 수수, 관용차 사적사용 등 비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야당 위원들은 이 후보자가 2020년 5월부터 19개월간 삼성그룹으로부터 자문료, 연구용역비용 등의 명목으로 1억1천여만 원을 받은 점을 지적했다. 특히 그가 삼성전자로부터 19개월간 총 3천800만 원을 받았다고 국회에 보고한 뒤 삼성물산, 삼성생명 등 다른 계열사로부터도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점을 질타했다.

노웅래 위원(더불어민주당)이 “삼성그룹 전체에서 돈을 받아놓고 삼성전자에만 취업한 것처럼 속였다”고 하자 이 후보자는 “보고가 누락됐다는 사실을 청문회를 준비하며 알았다”고 해명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위성근)는 5월 6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자질과 도덕성 등을 검증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여야 모두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곡물 가격 등 농업 현안 위주로 질의했다.

최인호 위원(더불어민주당)은 정 후보자가 농협 지주 사외이사로 1년 4개월 간 재직하며 이사회·감사위원회 안건에 전부 찬성한 점을 들어 “대주주 독단·전횡을 견제한다는 사외이사 취지와 달리 거수기 역할을 한 게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정 후보자는 “이사회 상정 이전에 참여하게 사전 조정을 거친 후에 상정이 되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반대 의견을 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맹성규 위원(더불어민주당)이 정 후보자의 장녀가 대기업 LS그룹의 농기계 제조 계열사 LS엠트론에 2011년 입사한 뒤 이 회사의 회사 연구·개발(R&D) 과제 지원금이 7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증가했다면서 “농림축산부에서 담당과가 과학기술정책과인데 정 후보자가 농촌정책국장 재직 당시 특혜를 준 게 아니냐”고 질의하자 정 후보자는 “농촌정책국과 과학기술정책과는 완전히 별개의 조직이며 R&D 연구 자금은 2009년 이전에 이미 의사 결정이 된 사안”이라고 부인했다.

한편, CPTPP 가입 추진에 대해 정 후보자는 “농업계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돼 상당히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제사법위원회,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광은)는 5월 9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위원들은 후보자 딸의 ‘스펙 논란’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고, 검찰 수사·기소 분리법(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도 쟁점이 됐다.

김용민 위원(더불어민주당)이 한 후보자 딸이 외국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스펙을 쌓으려고 논문 표절·대필 등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한 후보자는 “제가 관여하지 않았고, 대개 그 시기가 제가 지방으로 좌천돼 있을 때라서 사정은 몰랐다”고 답변했다. 반면, 박형수 위원(국민의힘)은 “스펙을 쌓는 과

정에서 불법이 있다든지 이런 것이 잘못된 것이지 스펙을 쌓았다는 그 자체로 문제인가”라고 반문했다.

청문회에서는 검찰 수사·기소 분리법과 관련한 질의도 이어졌다. 한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최근 소위 ‘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어 국민적 우려가 크다. 이 법안은 부패한 정치인과 공직자의 처벌을 어렵게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이 보게 될 피해가 너무나 명확하다”고 말했다.

민형배 위원(무소속)은 “자꾸 후보자는 (검찰 수사·기소 분리 법안 폐지로) 국민들의 편익이 증진될 거라고 표현을 하시던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반면 조수진 위원(국민의힘)이 “이렇게 문제가 많은 법안이 강행 처리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느냐”고 묻자 한 후보자는 “잘못된 법이 잘못된 절차를 통해 입법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 후보자는 전주혜 위원(국민의힘)이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의 필요성에 대해 묻자 “취입하면 즉시 합수단을 부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임기 중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학영)는 5월 9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자질과 도덕성 등을 검증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전기요금을 계속 누르기만 하면 결국 국민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하며 전기요금에 연료비를 연동하는 ‘원가주의’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방향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주환 위원(국민의힘)의 관련 질의에 “한국전력의 적자가 올해 아주 많이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까지 관행은 전기요금이 물가라는 이유로 원가가 올라도 반영을 못 하고 억눌린 채 운영됐는데 이런 상황으로 간다면 한국전력의 적자, 공기업의 적자가 국민 부담으로 가게 된다”고 우려했다.

산업부 전기위원회의 전문성·독립성 강화 부분에 대해 이 후보자는 “전기위원회가 전기요금 등에 대한 최종 결정권자가 되도록 독립성, 전문성을 강



화하는데 대부분 동감한다”며 “독립적 행정위원회로 갈지 등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특별법을 만들고 정부 내에도 종합적인 조정을 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 원전 확대와 동시에 병행해 실행에 옮겨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산업부의 통상 기능 외교부 이전 여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산업과 통상을 정책적으로 쪼개는 것은 부담이 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학영)가 5월 11일 개최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의 이해충돌 의혹이 집중적인 검증 대상이 됐다. 이 후보자가 창업해 주식을 보유한 벤처기업이, 이 후보자가 자문위원으로 있던 국책연구소의 연구용역을 수수하는 과정 등이 쟁점이 됐다.

김정호 위원(더불어민주당)은 “후보자가 테르텐이라는 사이버 보안업체를 창업해 지금도 50.3%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이 후보자가 참여한 각종 정부 위원회에 테르텐 납품용역 계약이 많은 것을 알고 있나”라고 물었다. 이 후보자는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자문위원은 2010년에 했고 물건을 판 것은 2020년인데 이해충돌인가”라며 “자문위원을 한 기간과 제품 수수 기간이 10년 정도 차이 나는 부분을 헤아려 달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정우택 위원(국민의힘)이 “지난해 정부는 벤처기업에 7조 7천억 원을 투자했으나, 이중 과반은 정보통신기술(ICT) 서비스와 생명공학, 의료업종에 투입되는 등 편중 현상이 나타났다”고 지적하자 “국가가 단기적으로 엑시트(투자금 회수)할 수 있는 부분에 공적자금을 투입하기보다는 리스크가 있는, 국가적으로 견인해야 할 비즈니스 모델이나 기술 계획에 투자하는 펀드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성가족위,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 송옥주)는 5월 11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 등을 검증했다.

김 후보자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발의한 여가부 폐지 법안에 여

성의 권익 증진에 대한 부분이 삭제됐다는 양의원영 위원(더불어민주당)의 지적에 “이 문항에서는 사라졌지만, 여성 정책 기획과 종합에 대한 부분은 법무부와 행안부 사무로 이관될 수 있다는 부칙이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 여가부 폐지에 동의한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냐”는 질문에 김 후보자는 “폐지는 동의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여가부 폐지 법안 동의 여부와 향후 부처 폐지 로드맵을 묻는 질문에는 즉답하지 않고 “각당의 의견과 여성단체를 포함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복지 대상자는 동일한데 연령에 따라 소관부처가 달라지는 등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김미애 위원(국민의힘)의 지적에 “여가부 업무가 분절적이고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너무 없어서 일종의 세컨더리(부차적) 역할을 하는 느낌을 너무 많이 받았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여가부에서 해야 하는 일들에 대해 다른 부처에 이관한다는 게 아니라, 상당히 통합하고 일원화해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 외교통일위,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이재정)는 5월 12일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 등을 검증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김영호 위원(더불어민주당)은 “후보자의 형제가 설립한 TNPI HK가 커피빈 중국 사업권을 판 직후 이 회사의 비상장 주식을 후보자는 두 딸과 함께 주당 1천 원에 총 5만 주 매입했다”며 “후보자는 공식 답변 상 금전적 도움을 줬다고 하는데 사업권을 따낸 이후라는 점에서 투자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식 매입 후 불과 3개월 만에 32달러의 프리미엄이 붙어서 우리 돈으로 40배가 올랐다. 1천 원짜리가 3만7천 원이 됐다. 후보자는 공직자 이해충돌을 우려해 원래 산 가격에 다시 팔긴 했지만 대신 형제는 19억 원을 벌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권 후보자는 “재산 공개할 때 자료들을 다 올렸다. 지금 공직 취임은 저희 형님이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권 후보자는 이날 이태규 위원(국민의힘)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김정  
은 위원장 면담을 위한 평양 방문을 북한에 타진할 계획이 있느냐”고 묻자  
“남북관계 상황을 보고 외교안보팀과도 협의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조은희 위원(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특사 방문을 건의하겠느냐  
고 묻자 권 후보자는 “일단 남북관계 상황을 봐야 한다”고 답변했다.

**행정안전위, 노태약 중앙선거관리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서영교)는 5월 13일 노태약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노 후보자는 “지난 대선에서 일어난  
선 안 될 사전투표 부실 관리로 인해 국민께 많은 질책을 받았다”며 “무너진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조직의 명운을 건다는 각오로 선거를 성공적으  
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질의에서도 “공정한 선거관리는 헌법상 책무”라며 “절차의 중립  
성, 법규 해석·운용에서 정확성, 절차가 제대로 됐는지를 보여주는 투명성 등  
세 가지를 통해 공정한 선거가 확보될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선관위 조직 혁신과 관련해선 선관위원장 상근제를 도입하겠다고 답했다.  
노 후보자는 “상근제 위원장이 된다면 효율성과 책임성이 확실히 더 올라갈  
것”이라며 “단기적으로는 지방선거를 철저히 관리해 성공적으로 치르고, 장  
기적으로는 조직개편·혁신 문제를 검토하고 실현 가능한 방안을 찾도록 하  
겠다”고 약속했다.

노 후보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 대선 선관위의 사전투표 관리  
부실 문제로 감사원에 직무감찰을 요청한 데 대해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  
기관으로서 직무감찰에 대한 명확한 법률상 근거도 찾기 어렵지 않나 생각된  
다. 잘못된 건 맞지만, 직무감찰로 이어질지는 고민해보겠다”고 답변했다. 🗣️

## “ 아이들의 순수한 모습 볼 때 에너지를 충전하는 기분 ”



김영지  
국회제3어린이집 교사

### Q. 국회에서 근무하게 된 계기에 대해 알려주세요.

A. 2014년 중앙대에서 위탁 운영하는 국회제3어린이집이 개원했습니다. 저는 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에 근무했던 경험이 있었기에 직원들의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위해 직장어린이집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운영하는 국회어린이집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보육환경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관심이 있었습니다. 때마침 어린이집이 개원된다는 소식을 듣고 ‘국회에서 아이들을 만나면 어떨까?’ 하는 부푼 마음을 가지고 지원하게 되었고 교사로서의 사명감을 갖고 오늘날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출근 첫날 마주한 국회의사당의 위엄과 웅장함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 Q. 국회어린이집은 어떤 곳이며 선생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요.

A. 국회어린이집은 킨더슐레 위탁운영 국회제1어린이집, 이화여대 위탁운영 국회제2어린이집, 중앙대 위탁운영 국회제3어린이집 등 세 개의 어린이집이 각각 위탁기관의 보육 철학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국회 직원인 부모님들이 마음 편히 일하실 수 있도록 6개월부터 학령 전까지 아이들을 위해 7시30분부터 22시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어린이집뿐 아니라 국회 내의 운동장, 사랑채, 산책로 등 국회의 아름다운 환경은 아이들에게 사계절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맘껏 뛰어놀 수 있는 보육환경을 제공합니다. 우수한 선생님들은 아이들의 흥미와 놀이의 흐름에 따라 다양한 보육프로그램으



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며, 건강하고 영양 만점인 친환경 먹거리를 제공합니다.

저는 현재 만 0세반 교사로 돌 전후의 아이들과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이들마다 개별적 특성과 발달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 하루일과를 운영하고, 교사와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해 편안한 일상과 다양한 놀이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 선후배 교사들과 학습공동체를 형성해 다양한 주제로 공부하고 연구하며 이를 보육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연령별 사용하는 교재교구와 관련된 업무, 어린이집 안전, 청결, 환경구성 등 전반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Q. 국회어린이집에서 일하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것과 힘든 점이 있다면?

A. 하루에도 가슴이 뭉클한 경우가 몇 번씩 있어 모두 나열할 수는 없지만 보람차다고 느낄 때의 공통점은 아이들의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이 전달될 때, 자라는 모습이 느껴질 때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 좋아”, “사랑해요”, “우리집에 놀러와요”라고 배시시 웃으며 표현하거나 팔을 뻗어 꼭 안길 때 방전된 에너지를 충전하는 기분이 듭니다. 재작년 유모차를 타고 다녔던 아이들이 어느덧 형님이 되어 “선생님 도와줄까요?”, “내가 밀어주고 싶어요”라고 말하며 동생들이 탄 유모차를 천천히 밀어주고 보살펴주는 모습에 웃음이 절로 난답니다.

그 외에도 몰라보게 성장한 졸업생들이 “선생님!” 하며 동창회에 참여해 자신들의 근황과 어린이집 다닐 때의 추억을 조잘조잘 이야기할 때 ‘이런 맛에 교사생활을 계속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로 영상으로만 안부를 묻던 졸업생들을 올해에는 직접 얼굴을 마주하고 이야기 나눴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힘든 점이라면 아이들이 갑자기 아프거나 다칠 때, 혹은 제 자신이 아플 때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어린이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길다 보니 갑자기 아프거나 다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그럴 때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더불어 몸과 마음에 에너지가 넘쳐야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제 자신이 아프면 쉽사리 몸이 따라주지 않아 속상하고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도 큼니다. 또, 부모님과 소통에서 오류가 생기면 여러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 Q. 코로나19로 어린이집 보육도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이전과 달라진 것에 대해 알려주세요.

A. 코로나19가 우리 일상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생활에도 많은 변화를 주었습니다. 어린이집 출입이 통제됨에 따라 현관 앞에서 등·하원이 이루어지는 등 교사와 학부모 모두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지속적으로 협력했습니다. 마스크를 장시간 쓰고 생활하다 보니 교사와 아이들이 서로 얼굴과 표정을 제대로 보지 못해 상호작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특히나 영아들과의 소통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현장학습이나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특별활동 등의 경험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여유로운 하루일과 속에서 ‘바깥놀이’가 활성화됐고, 아이들이 놀이를 무궁무진하게 창조하면서 놀이가 한층 더 깊어지기도 하였습니다. 부모님들을 대면해 진행하던 오리엔테이션, 교육 등을 비대면 영상으로 대신해 아쉬움도 있었지만 시공간을 넘나들며 적절히 활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하루 빨리 종식돼 어린이집도 예전과 같이 정상화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글 고영선 사진 임진완

## 조세법률주의와 위임입법의 적정성 유지를 위한 국회의 역할

조세법률주의는 국민의 대표인 의회가 제정한 법률의 근거 없이 국가는 조세를 부과·징수할 수 없고, 국민은 조세 납부를 요구받지 아니한다는 조세법의 원칙이다. 연혁적으로 영국에서는 대헌장(Magna Carta)에 이어 제도적으로는 권리장전(Bill of Rights) 제4조에 의해 확립됐고, 미국에서는 독립전쟁 이후 식민지 대표 없는 영국 의회의 과세는 부당하다는 원칙으로 확립됐다. 프랑스에서는 프랑스 인권선언 제14조를 계승한 헌법 제34조제1항에서 모든 조세의 과세기준, 세율, 징수방법 및 화폐발행제도를 법률로 규정하도록 했다.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헌법’ 제59조에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 조세법률주의의 구체적 내용과 현실적 한계

우리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조세에 관한 사항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제정한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원칙이다(의회유보 원칙). 구체적으로 보면, 납세의무를 성립시키는 과세요건 즉, 납세의무자·과세대상·과세표준·과세기간·세율 등과 조세의 부과·징수절차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규정하여야 하고(과세요건 법정주의), 과세요건을 법률로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면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염려가 있으므로 그 내용이 명확하고, 일의적(一義的)이어야 한다(과세요건 명확주의). (헌법재판소 판례, 이하 “憲判” 1989. 7. 21. 89헌마38, 1992. 12. 24. 90헌바21등 등).



윤동준  
국회 법제실 재정법제과장



이러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경제 현실의 다양성이나 전문적 기술의 발달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보다 더 탄력성이 있는 행정입법에 위임할 수 있다(憲判 1996. 6. 26. 93헌바2).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고(제75조),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제95조) 행정입법의 근거를 두고 있다.

다양성과 전문성이 심화된 현대 국가에서 국회가 모든 사항을 예측하여 법률로 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심의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법률만으로는 사회·경제적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어려우므로 법률에서는 목적·요건·내용의 대강을 규정하고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부에 위임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다만, 조세법규와 같이 국민의 기본권(재산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경우에는 위임에 대한 구체성의 요구가 강화되어 위임의 요건과 범위가 일반적인 급부 행정법규보다 더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憲判 1995. 11. 30. 94헌바40등).

###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

행정입법은 국민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행정부에 의해 실질적인 입법권이 행사된다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는데, 이로 인한 행정부의 지나친 권한 행사를 막기

위해 ①행정부 내부적 통제 ②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사법적 통제 ③본래의 입법권자로서의 국회의 통제가 필요하다.

국회의 통제는 행정부의 내부적 통제 및 사법적 통제와 달리 적법성 심사에만 한정되지 않으며 민주적인 선거를 통해 선출된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입법부인 의회가 행정입법의 적법성 및 합목적성을 국민의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다각도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국회의 행정입법 검토 및 통보제도

국회는 1997년 ‘국회법’을 개정해 ‘국회의 행정입법 검토 및 통보제도’를 도입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입법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한 경우에는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국회는 행정입법의 법률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여 위원회나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로 송부하며, 정부는 국회의 검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입법을 통제할 수 있고, 실무적으로 위원회의 의뢰에 따라 국회 법제실이 행정입법에 대한 검토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조세분야 법률의 위임입법 현황 및 분석기준

조세분야 33건의 법률을 대상으로 각 법률의 총 조문 수 대비 위임 조문 수 비율을 조사한 결과, 조세분야 법률의 평균 위임 비중은 61.6%로 나타났으며, 특히, ‘조세특례제한법’은 그 비율이 90.3%에 달하는 등 조세분야 법률은 전반적으로 높은 비율의 위임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회 법제실은 조세법률주의와 관련되는 헌법규정과

판례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행정입법의 분석기준을 아래 여섯 가지로 구분하여 유형화했다.

국회 법제실의 행정입법 분석기준

①위임근거 없는 국민의 권리제한·의무부과	법률의 위임 근거가 없거나 위임 범위를 넘어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새로운 사항을 정하였는지를 판단
②상위 법률의 위임 내용·취지와 불합치	법률의 위임 내용이나 취지와 다른 내용으로 행정입법이 이루어졌는지를 판단
③행정입법 부작위	정부에 행정입법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할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지체하여 국회의 의사에 따르지 아니하였는지를 판단
④포괄적 재위임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재위임할 때 그 대강의 내용이나 구체적인 범위·예시 등이 없이 하위 법규에 그대로 재위임하였는지를 판단
⑤법령 체계·형식·용어 등의 미정비	법률에서 위임받은 형식과 다른 행정입법의 형식으로 규정되거나 행정입법이 개정된 법령 또는 변화된 행정 여건 등을 반영하지 않아 발생하는 누락·오기 등 법령의 정비 필요성이 있는지를 판단
⑥법률의 정비가 필요한 사항	법률에서 과세요건과 조세의 부과·징수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였는지, 위임사항을 불가피한 사항으로 한정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위임하였는지 여부를 판단

### 조세분야 법률의 위임입법 분석결과

국회 법제실이 2021년 10월부터 2022년 4월까지 6개월간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등 조세 관련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 총 398건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45건의 개선의견이 제시됐다.

가장 빈번한 위반 유형은 ‘상위 법률의 위임 내용이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행정입법’으로 15건(33.3%)이 지적되어 전체 중 3분의 1을 차지했다.

중점분석대상 조세분야 법령

법률	행정입법	
	시행령·시행규칙	고시·예규 등
33건	87건	278건

조세분야 행정입법 유형별 위반 현황

유형		위반 건수
1	위임근거 없는 국민의 권리제한·의무부과	8건
2	상위 법률의 내용·취지와 불합치	15건
3	행정입법 부작위	5건
4	포괄적 재위임	1건
5	법령 체계·형식·용어 등의 미정비	8건
6	법률 정비 필요	8건
합계		45건

### 대표적인 위반사례

다양한 위반사례가 지적됐지만, 아래와 같은 대표적인 위반사례가 발견되어 시급히 개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됐다.

#### 1. 위임근거 없는 국민의 권리제한·의무부과(유형 1)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국세청장으로부터 현금영수증사업자로 승인받은 자는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는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시행령에서는 법률의 위임 없이 현금영수증사업자 ‘승인 철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

#### 2. 상위 법률의 내용·취지와 불합치(유형 2)

‘국세기본법’에서는 장기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업종, 규모, 경제력 집중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도록 했으나, 시행령에서는 이와 다르게 ‘납세자의 이력, 세무정보 등’의 선정 기준을 규정하여 상위 법률의 내용·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개선이 필요했다.



### 3. 법률 정비가 필요한 경우(유형 6)

법인세의 감면 및 공제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이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데, 소득금액 결정은 법인세액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 행정입법 시정조치 미흡에 대한 개선대책

국회 법제실은 2017년도 이후 중소기업·공정거래 분야를 시작으로 2022년 개별금융법 분야까지 총 274건의 행정입법 개선의견을 제시했지만, 실제로 개정이 이루어지는 비율은 높지 않았다. 분야별 행정입법 분석결과 반영 여부를 살펴보면, 법률 개정의견은 총 96건 중 16건이 반영됐고, 행정입법 개정의견은 178건 중 20건이 반영되어 10% 남짓한 개선율을 보였다.

분야별 행정입법 분석 결과 반영 현황

(2022.4.12.기준, 단위: 건)

연도	분야	소계	법률 개정사항				하위법령 개정사항	
			개정 의견	법제실 입안	법률안 발의	본회의 처리	개정 의견	개정 완료
2017	중소기업·공정거래	39	27	15	7	6	12	4
2018	고용노동	28	16	12	7	1	12	2
	보건복지	16	7	5	7	6	9	1
2019	국토환경	27	8	3	1	-	19	3
	교육문화	25	2	-	1	1	23	1
2020	행정안전	53	9	3	1	-	44	5
	농림해양	37	5	2	2	2	32	1
2021	금융일반	23	11	-	-	-	12	2
2022	개별 금융업법	26	11	13	2	-	15	1
	합계	274	96	53	28	16	178	20

국회가 제시하는 개선의견에 대해 행정부의 시정조치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향후 본래의

입법권자로서 국회가 위임입법에 대해 통제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폭넓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주요국 의회의 행정입법 통제제도

지면상 여기에서 상세히 논의할 수는 없지만 영국의 회의 경우 행정입법의 내용을 의회로 제출하도록 하여 점검하거나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는 ‘의회제출 절차(Laying Before Parliament)’, 미국의회의 경우 의회심사법(Congressional Review Act)에 따라 양원의 합동부인(否認)결의로 행정입법을 거부할 수 있는 제도, 독일의회의 경우 행정입법이 효력을 발생하려면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동의권 유보제도 등이 도입되어 있다. 대한민국 국회도 행정입법 통제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권력분립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러한 입법례를 참고하여 적절한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지난 6개월간 행정입법에 대한 분석과 개선의견을 도출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유기적인 분업과 협력 그리고 감수 작업을 체계화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었다. 제정법제과에서 개선후보 사항을 발굴하면 법제연구분석과에서 2차 검토를 했고, 경제산업법제심의관의 수정 의견을 반영한 다음, 법제실장의 중간점검 후에 입법차장 주재로 경제산업법제심의관, 제정법제과장, 법제연구분석과장, 사법법제과장이 공동으로 3차 심의를 하는 집단지성을 발휘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 자리를 빌려서 평소 확고한 의회주의자로서 조세법률주의의 관점에서 상세한 내용까지 감수해 주신 전상수 입법차장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

## 영국과 미국의 오랜 의사운영 경험을 공유하다 의회제도 발전 모색을 위한 ‘영국·미국 의사규칙’ 발간

국회사무처는 의회정치의 본향인 영국 하원과 대통령제를 바탕으로 견제와 균형의 헌법 원리를 구현하고 있는 미국 상 하원의 의사규칙을 번역한 ‘영국·미국 의사규칙’ 개정판을 2022년 5월 새롭게 발간했다.

### 선진 의회정치 경험을 담고 있는 영국·미국 의사규칙

의회민주주의의 선구로서 오랜 기간 의사운영 경험을 축적해 온 영국과 미국의 경우에는 법의 형식이 아닌 의회의 자율규범인 의사규칙으로서 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해당 의사규칙은 법의 형식을 취하지 않아 우리 국회법에 비해 내용이 상세하고 규율 범위가 광범위한 특징을 갖고 있다.

국회사무처는 이러한 영국과 미국 의사규칙에 반영되어 있는 선진 의회정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의회제도의 발전방향과 시사점을 찾기 위해 ‘영미 의사규칙’을 발간해 왔다. 2006년에 ‘영국의회 의사규칙’을 시작으로, 2007년에 ‘미국의회 의사규칙’을 발간한 바 있으며, 2014년에는 미국 상원 의사규칙을 추가 번역해 합본으로 ‘영미 의사규칙’을 발간해 편의성을 제고했다. 이번에 새로 발간된 ‘영국 미국 의사규칙’은 2021년까지의 개정 사항을 반영해 시의성을 제고했다.

그동안 발간 작업을 하면서 국회의 의사 의안을 담당할 실무자가 한 줄 한 줄 원문을 읽고 의미를 새기며 우리 제도와 비교하는 과정을 거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다. 예컨대, 영국 미국 의사규칙에서 ‘motion’은 우리나라 국회법상 안건을 처리하거나 의사 진행을 위해 필요한 제안을 하는 절차인 ‘동



우영진  
의사국 의사과 의사2담당



의(動議)에 대응한다. 그 밖에도 생소한 용어의 경우에는 각주를 달아 그 의미와 운영사례 등을 설명함으로써 외국 주요 의회제도를 보다 생생하게 접할 수 있도록 했다.

### 시대상황을 반영하여 변화·발전하는 의회제도

2014년 ‘영미 의사규칙’ 발간 이후 이번 개정판을 내기까지 영국과 미국 의회에서 시대상황과 의회정치문화의 변화 등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제도가 여럿 있다. 그 중 특기할만한 제도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미국 하원의 경우 의회 윤리성 제고 및 다양성·포용성 증진 등 의회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한 규정을 도입했다. 우선, 이해충돌 방지 강화를 위해 하원 의사규칙 제 19조를 신설해 하원 의원과 직원이 다른 공기업의 직원이나 감독자로서 근무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이해충돌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직위나 행위 유형에 대해 윤리위원회가 규정을 마련하고, 하원 의원 및 직원이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그 밖에도 미국 하원은 의사규칙 제9조 및 제10조를 신설하여 내부기관으로서 ‘다양성 포용실(Office of Diversity and Inclusion)’과 ‘내부고발 옴부즈맨실(Office of Whistleblower Ombuds)’을 각각 설치했다. 다양성 포용실은 하원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증진하기 위해 하원 사무실이 다양한 인력을 채용·훈련·승진하도록 안내하고, 하원의 다양성을 조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내부고발 옴부즈맨실은 내부고발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내부고발 관련 모범사례를 공표하는 등의 직무를 담당한다.

영국 하원의 경우 ‘대리투표(voting by proxy)’ 제도

를 2019년 1월부터 시범운영해, 2020년 9월에 의사규칙 제39조의A로 정식 채택했다. 이에 따르면 대리투표 사유가 있는 의원은 의장의 지침에 따라 다른 의원을 대리인(proxy)으로 지정해 대리투표를 할 수 있다. 대리투표 사유는 출산



또는 영유아나 새로이 입양된 아이의 보육을 위해 출석을 하지 못할 경우이며, 출산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로 인해 출석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대리투표 자격을 갖는다. 코로나19가 확산되던 2020년에는 전염병과 연관된 의학상·건강상 이유로도 대리투표가 가능하도록 규정했으나, 2021년 7월에 영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해제에 따라 해당 대리투표 사유는 삭제됐다.

이와 같이 주요국 의회제도는 시대환경을 반영해 끊임없이 변화한다. 우리나라도 2021년 초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및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자, 국회법에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고 2022년 5월 30일부터 시행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으로 원격영상회의 제도를 도입했으며, 2022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의회제도를 개선·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주요국 의회의 의사운영 사례는 중요한 참고자료로 기능한다. 이 책을 통해 영국과 미국의 오랜 의사운영 경험이 공유됨으로써 국회 및 지방의회의 제도 발전을 모색하고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

# NEWS



## 박병석 국회의장, 일한의원연맹 방한단 접견

박병석 국회의장은 5월 11일 국회 사랑재에서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방한한 누카가 후쿠시로 일한의원연맹 회장을 단장으로 한 일본 의원 대표단의 예방을 받고 “한일 양국이 과거를 직시하는 가운데 미래를 지향하는 관계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정부와 국회, 민간이 함께 가야한다는 생각”이라면서 “양국 입장은 서로 잘 알고 있다. 지도자의 결단력이 필요하다. 지도자의 결단력과 진심이 없다면 양국 관계는 친구 이상의 수준을 벗어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장은 “양국 관계를 개선하려면 국민들의 절대적 동의가 필요한 만큼 민간분야를 최대한 개방해서 교류가 활성화되도록 양국 국회가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누카가 회장은 “민간 교류에 대해선 기시다 총리께서도 활성화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서 “양국 국민이 이웃나라를 자유롭게 왕래하고 놀러다니고 일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정치가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답했다.

박 의장은 “한국과 일본은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로 두 나라의 협력이 긴요하다”면서 “양국 관계를 개선하려면 정치인들이 리스크를 건 결단을 해야 한다”고 정치인의 역할을 재

차 강조했다.

이날 예방에서는 강제징용 관련 일본 기업의 자산 현금화 판결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박 의장은 “한국은 3권이 분리된 나라다. 사법부의 결정을 행정부가 뒤집을 수는 없다”며 “양국 관계는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정신하에서 양국의 민간교류 활성화와 함께 현안을 포괄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강조했다.



## 박병석 국회의장, 퇴임 기자간담회 열음

박병석 국회의장이 5월 26일 퇴임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21대국회 전반기를 이끈 소회를 밝혔다. 박 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을 지키는 국회,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하면서 오직 국민과 국익만 바라보며 최선을 다했다”고 회고했다.

박 의장은 “여야의 의견이 다른 법안도 대화와 타협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중재에 총력을 다했다”며 ‘검찰 수사권 박탈’ 입법 관련 국회의장 중재안을 언급했다. 박 의장은 “정치권 거의 모든 단위의 동의와 공감대를 거친 아주 수준 높은 합의였다”며 “국민투표를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단계의 합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평했다.



박 의장은 또 제21대국회 전반기에 대해 “지난 2년 동안 본회의에서 역대 최다인 4천355건의 법안을 처리했다”며 “상임위 법안 소위는 이전 국회 대비 36.6% 증가한 470회를 열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관련 민생 추경 신속 통과, 예산안 2년 연속 법정시한 내 통과, 한반도 평화-코리아 세일즈 의회외교, 국가중장기아젠더위원회·국민통합위원회 운영 등의 성과도 소개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마지막으로 “국회 내 최다선 의원으로 돌아가 의회주의자로서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며 국민께 감사 인사를 전했다.



### 박병석 국회의장, 백령도 찾아 해병대장병 격려

박병석 국회의장은 5월 13일 인천 옹진군 백령도에 있는 해병대 제6여단을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위문금을 전달했다. 박 의장은 백령도에 도착 후 천안함 46용사 위령탑에 헌화와 참배를 했다.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해 설명을 들은 박 의장은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장병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참배 후 박 의장은 부대로 이동해 해병대 6여단장으로부터 현황 보고를 받았다. 박 의장은 “강력한 국방력이 있어야 평화가 유지될 수 있고 그러한 토대 위에서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면서 “서

해 최북단에서 여러분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우리의 의지를 분명히 하는 모범 부대로 성장하고 더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장은 “우리 국회도 여러분들의 안전과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예산과 법률로써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밝히며 위문금을 전달했다.



### 직원 격려 오찬 간담회 개최

박병석 국회의장은 5월 12일 국회 사랑재에서 직원 격려 오찬 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 대유행시기에 국회는 가장 안전한 기관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며 “그동안 노고 많으셨고, 여러분의 땀과 정성 속에서 국민의 대변기관인 국회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었고,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데 여러분이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애쓰신 분들이 많다. 국회가 큰 탈 없이 돌아갈 수 있었던 데에는 여러분들의 숨은 힘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이날 오찬 간담회는 코로나19 방역 등을 위해 노력해온 국회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자 마련됐다. 박 의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맡은 일을 다 잘 해주셨다. 국회를 안전하게 만드는데에 헌신했다는 자부심을 갖고, 국회에 있는 동안 건강하고 마음 다치는 일 없이 지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NEWS



## 국회, 국내 최초 도심형 복합 문화 데이터센터 구축

대한민국 국회가 국내 최초로 도심형 복합 문화 데이터센터를 구축한다. ‘국회 통합디지털센터 건립공사 착수식’이 5월 16일 접근성과 과학기술 산업 인프라가 우수한 대전광역시 도안 갑천 지구 생태호수 공원 내 건립 예정부지에서 개최됐다.

이날 착수식에는 박병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및 이춘석 국회사무총장을 비롯한 국회 간부, 이택구 대전시장 권한대행, 성기문 서구청장 권한대행 및 대전 지역 주민 등이 참석했다. 국회 통합디지털센터는 급증하는 데이터 수요에 따라 국회 정보자원을 통합관리하고 디지털 뉴딜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대전시 도안 갑천지구 생태호수 공원 내에 건립될 예정이며, 지역 시민을 위한 문화 소통 공간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할 예정이다.

국회 통합디지털센터는 대지면적 3만2천㎡에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약 1만 2천㎡ 규모로 건립되며, 2024년 준공될 예정이다. 주요 시설로는 국회 데이터센터 기능을 담당할 통합데이터센터를 비롯해 최신 멀티미디어 자료실, 민주주의의 중요성과 입법부의 역할을 체험할 수 있는 디지털 체험·전시관 및 지역 주민들을 위한 시민의정연수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회 통합디지털센터는 첨단 디지털 기술 분야의 대한민국의 랜드마크로 건립될 것”이라며 “이 센터는 국

회 세종의사당과 더불어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제21대 후반기 국회의장에 김진표 의원 선출

더불어민주당이 5월 24일 개최한 제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부의장 후보 선출 의원총회에서 5선의 김진표 국회의장 후보와 4선의 김영주 부의장 후보가 선출됐다.

김진표 의원은 선출 직후 국회의장으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국회의장에 선출되면 당적을 버리고 국회를 대표하는 장으로서의 역할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라며 “그것을 잘하는 게 정말로 민주당을 돕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여소야대 국회를 이끌어갈 방안에 대해서는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이 잘 지켜지는 가운데서 실질적인 협치가 가능하다”며 “국회를 거수기로 생각해서는 협치가 제대로 안 된다”고 했다.

김영주 의원은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정책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개발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 국익을 위한 의원 외교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방안을 찾겠다”며 “여야 간 소통의 메신저가 되어 대화와 협치의 의회정치 복원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1947년생으로 당내 최연장자인 김진표 의원은 노무현 정부에서



경제부총리와 교육부총리 등을 지냈다. 17대 총선에서 경기 수원 영통에 출마해 당선된 뒤 내리 5선을 지냈다. 김영주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여성 최초로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냈다. 차기 국회의장단은 본회의에서 찬반 투표를 거쳐 확정된다.



### 민주주의 체험하는 '국회어린이박물관' 개관

어린이날 100주년에 맞춰 국회어린이박물관이 5월 3일 개관했다. 지난 4월 11일에 개관한 국회박물관에 이어, 문을 연 국회어린이박물관은 연면적 669m<sup>2</sup>의 어린이 맞춤형 전시·체험 공간이다. 국회박물관 1층에 위치한 국회어린이박물관은 다양한 전시와 함께 교육과 놀이·체험 시설을 갖췄다. 특히, 유아와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10세 이하)이 놀이를 통해 함께 규칙을 만들고, 규칙을 지키는 과정 속에서 흥미롭게 국회와 민주주의를 배우고 체험할 수 있도록 전시와 시설을 구성했다.

전시는 크게 3단계로 분류했다. 먼저 전시의 시작인 '내멋대로 마을'에서는 터치형 인터랙티브 놀이시설을 통해 법과 규칙이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이유를 알아보도록 했다. 국회 본회의장과 유사하게 구현된 '영동발발 어린이 국회' 회의장에서는 어린이들이 직접 국회의원이 되어 어린이박물관 놀이터의 규칙을 만들어보는 활동이 이루어지며, '국회 규칙놀이터'에서는 친구들과 함께 만든 규칙을 지키며 놀이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와

민주주의에 대해 자연스럽게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했다. 이춘석 국회사무총장은 "지난 4월 개관한 상설전시세에 이어, 어린이박물관을 개관함으로써 국회박물관이 비로소 완전한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면서 "미래사회의 주역인 어린이들에게 국회와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어린이박물관은 10세 이하의 어린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다(성인동반 필수). 체험 안전관리 및 전시 공간 규모를 고려해 시간대별 사전예약제로 평일 3회, 토요일 1회 운영하며, 법정공휴일은 휴관한다. 참가 접수 등 자세한 안내사항은 국회방문자센터 홈페이지(<https://memorial.assembly.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국회도서관, '디지털화폐' 팩트북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5월 16일 팩트북(2022-2호, 통권 제94호) '디지털화폐'를 발간했다. 디지털화폐는 화폐의 가치가 디지털 방식으로 저장되어 이용되는 화폐로 민간 발행 디지털화폐인 가상자산, 스테이블코인과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 등이 있다.



가상화폐, 암호화폐로 알려진 가상자산은 2021년 11월, 글로벌 시가총액이 3조 달러(약 3천795조 원)에 도달했다. 금융위원회의 '2021년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시가총액은 작년 12월 말 기준, 55조 2천억 원으로 집계되기도 했으나 최근 가상자산 가격이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 NEWS

2008년 비트코인 등장 이후 다양한 가상자산이 출현했고, 이후 가상자산 가격변동성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기축통화나 금과 같은 실물 자산과 연동해 가치가 안정된 스테이블코인으로 확산됐다. 가상자산 시장이 성장하면서 자금세탁, 사기 등 불법행위, 투자자 보호 문제 등에 대한 규제 정책과 관련 논의가 세계 각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금융안정위원회(FSB) 등도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및 국제적 협력과 지침 마련에 힘을 쏟고 있다. 한편, 가상자산이 주요 투자자산과 지급수단으로 자리잡으면서 각국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법정화폐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에 대한 연구와 도입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중국은 2022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CBDC 실증시험을 진행했고, 이후 일부 도시에서 디지털위안화를 통한 세금납부 및 도로통행료 지불 등 사용실험을 하고 있다. 미국 바이트 행정부도 2022년 3월 ‘디지털자산 개발 행정명령’에서 CBDC 연구 개발 검토와 도입에 지지를 표명했다. 국내에서는 한국은행에서 CBDC 모의실험 2단계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디지털화폐로의 전환은 현 실물화폐 거래 시 요구되는 복잡한 절차와 거래비용 등을 혁신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기대와, 개인정보 보호 문제, 해킹 및 자금세탁 위험, 디지털 블랙아웃 발생 시 시스템 오류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디지털자산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점으로 관련 정책과 법안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이 자료가 디지털화폐를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관련 정책을 검토하는 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국회예산정책처,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발간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임익상)는 5월 18일 ‘2022년도 제2회 추

가경정예산안 분석’을 발간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고, 방역 소요 보강 및 향후 의료체계 전환을 뒷받침하며, 고유가·고물가 대응, 경북·강원 지역 산불피해 복구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부는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

산안’을 편성해 5월 13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증액분은 59.4조 원으로, ①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및 손실보상 확대 등 소상공인 지원 26.3조 원, ②방역소요 보강 및 일반 의료체계 전환 지원 6.1조 원, ③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 및 생활물가안정 지원, 산불피해 복구 소요 반영 등 민생·물가안정 지원 3.1조 원, ④예측하지 못한 지출 소요 대응을 위한 예비비 보강 1.0조 원으로 구성됐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은 초과 국세수입 53.3조 원, 지출구조조정 7.0조 원, 세계잉여금 및 기금 여유재원 등 기타 가용재원 8.1조 원으로 조달할 계획이며, 초과 국세수입 반영에 따라 국가채무는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8.4조 원이 감소한 1천673조 원으로 GDP 대비 49.6%에 이를 것으로 보이고,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는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9조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국회 심사를 지원하기 위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총 2장으로 구성됐으며, 1장에서는 추경안의 편성요건·재원·재정건전성·국세수입 경정 등 재정총량과 소상공인에 대한 직·간접지원, 방역 보강, 물가안정 지원 등 주요 정책에 대해 분석했고, 2장에서는 각 부처에 편성된 개별사업들에 대해 사업의 필요성·효과성, 사업 예산의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분석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제11차 의회조사기구 국제세미나’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홍)는 5월 17일 지난 2010년부터 매년 개최해오다 2019년 제10차 세미나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열리지 못한 ‘제11차 의회조사기구 국제세미나’를 3년 만에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의 도전과 대의민주주의의 대응 및 의회의 역할”을 주제로 4개의 세션으로 진행됐으며, 미국의회조사처(CRS), 유럽의회조사처(EPRS)를 비롯한 21개국 의회조사기구 대표단이 참여했다.

미국 CRS 더글라스 그룹 조사관과 사밀라 쇼우드리 조사관은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미국 의회가 통과시킨 주요 법안과 의회조사기구로서 이를 뒷받침한 경험을 소개했고, 일본 유스케 세코 조사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지방재정 위기를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등 각국 대표단은 팬데믹 위기와 이에 대응한 각국의 경험을 나누고 토의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영상 축사에서 “각국 의회의 싱크탱크인 의회조사기구가 인류의 안전을 위한 세계 의회 차원의 공조 방안을 논의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으며, 김만홍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모인 지혜가 앞으로 또 다른 위기에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각국 의회조사

기구 간 발전적 연대를 강화해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 국회미래연구원, 개원 4주년 기념식 개최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5월 19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미래연구원 개원 4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내부 행사로 진행된 개원 4주년 기념식에는 박명광 이사장, 김현곤 원장을 비롯한 내부 구성원이 참석했다. 미래연구원은 기념 행사에서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직원 대상 ‘우수상’과 ‘모범상’을 시상했다. 우수상에는 차정미 부연구위원, 염승선 행정원이, 모범상에는 민보경 부연구위원, 문지혜 연구행정원, 황희정 연구행정원이 내부 추천과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박명광 이사장은 미래연구원이 지난 4년 동안 기관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성공적이었다고 치하하면서, 향후 입법부의 연구기관으로서 차별화된 연구성과를 보여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김현곤 원장도 2020년 5월 취임 이후 2년 동안 양적, 질적인 성취를 보여준 구성원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미래연구원은 지난 2018년 5월 25일 출범한 국회 소속 출연연구기관이다. ‘국회미래연구원법’에 따라 국가의 미래 환경변화를 예측·분석하고, 분야별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함으로써 국회의 정책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가 발전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

## 법정에서 못다 한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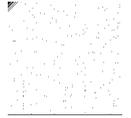
저 자 박형남  
출판사 Humanist  
출판일 2021. 11.

나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강의를 할 때마다 단호한 어조로 학생들에게 이런 말을 한다. “법조인은 서비스업 종사자이므로 투철한 서비스 정신을 갖춰야 한다. 변호사 자격증은 라이선스에 불과하니 이것으로 특혜나 특권을 받을 생각은 절대로 하지 말아라.”

이 책은 내가 그동안 가져왔던 법조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이나 입장과 매우 비슷해 미처 알지 못했던 부분에 새로운 성찰을 하게 함과 동시에 국민에게 봉사하고 서비스해야 하는 법조계의 역할과 의무에 대한 인식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다.

사람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법치주의는 그 역사가 그리 길지 않다. 근대에 들어와 3대 시민혁명(영국의 명예혁명, 프랑스의 대혁명, 미국의 독립전쟁)을 거치면서 법으로 개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권력을 통치한다는 법치주의 개념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조선시대 ‘사또’라고 불리는 고을 원님이 범인을 잡아다가 취조하고 올려대서 자백 받고 형을 선고하고 감옥에 가두는 일을 도맡아 하면서, 즉 지금으로 치면 군수 정도에 해당하는 지방 행정관이 경찰서장, 검사, 판사, 교도소장을 겸임하면서 무고한 사람을 처벌하더라도 이를 견제할 방법이 없어 개인의 인권이 유린당했던 역사를 생각해 보면 너무나 당연하여 그 가치를 잘 알지 못하는 법치주의는 개인 인권을 보장하는 데 필수 요소라 할 수 있다. 저자는 이러한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다양한 사



례를 들어 재미있게 알려 주고 있다.

형법 분야에서는 사법자제의 원칙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야 한다는 저자의 주장도 귀담아들어야 한다. 법률에만 숙련된 사람들이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일은 위험하다. 형법학자들은 형벌이란 조심스럽고 섬세하게 행사되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은 너무 다르다.

사회 규제의 최후 수단이 되어야 할 형벌은 어떤 상황에서나 사용되는 마스터키가 되었고 그로 인해 일종의 형벌 만능주의가 팽배한 것이다. 다산 정약용은 그의 저서 ‘흙흙신서(欽欽新書)’에서 “흙흙이라 한 것은 무슨 까닭인가. 삼가고 삼가는 일이야말로 형벌을 다스리는 근본이기 때문이다”라고 해 국가의 형벌권은 장자가 말한 ‘포정의 칼’처럼 섬세하게 사용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모두 저자가 이 책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다.

민법의 핵심은 ‘사적 자치의 원칙’인데 자유롭고 평등하게 계약을 체결한다는 의미에서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사적인 경제관계와 가족관계를 마주하게 된다.

그중에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해 이익을 추구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아 손해를 최소화하는 재산법은 어떤 사람에게나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인지 나폴레옹 1세도 “나의 진정한 영광은 전쟁에서의 40번에 걸친 승리가 아니다. 오히려 이 법전[1804년에 제정

한 나폴레옹법전(프랑스민법)]에 있다”라고 말했다.

개인주의와 자유주의에 기반을 둔 민법은 “권리 위에서 잠자는 사람은 보호하지 않는다”를 강조한다. 그러다 보니 과거 원님 재판에 익숙했던 국민들로서는 형사 재판 절차가 민사 재판 절차에도 그대로 적용되지 않음을 이해하지 못한다. 민사 재판에서도 판사가 형사 재판의 검사처럼 모든 것을 알아서 판단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법원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치유하기가 쉽지 않은 지점이라 할 수 있다.

법률가는 비통하고 억울한 사람의 삶을 공감하는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해서 공정한 판단을 잘 내릴 수 있어야 한다. 저자는 자신의 경험에서 얻은 진리 중 하나로 “절차가 공정해야 결과도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

그렇다면 일반 국민이 바라는 재판 절차의 공정함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판사의 공감 능력일 것이다. 판사가 당사자를 의사소통의 상대방이라고 생각하며 그들의 말을 들어 주고 공감할 때 법정은 진정한 의미에서 소통의 장이 될 것이다.

이 책은 이러한 저자의 자기 고백이다. 억울한 사람의 아픔과 슬픔에 공감하고 보듬어 주는 것이 ‘법의 눈물’이라는 저자의 의견에 공감하며 상처의 치유를 위해 이런 법의 눈물을 우리 국민들이 많이 경험했으면 한다. 🍵

글 백대용(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 택당(澤堂) 이식(李植) 선생과 양동(楊東) 지역

필자가 고향인 양동에서 초등학교에 입학한 것은 한국전쟁이 휴전협정으로 멈춘 지 5년이 지난 1958년이다. 학교에서 10분도 안 되는 거리에 덕수 이씨(德水李氏)의 세장지(世葬地)가 있다. 이곳에 택당 이식(李植:1584-1647) 선생과 그 분의 조상들, 그리고 아들을 비롯한 후손들이 묻혀 있다. 그 앞에는 택풍당이 있는데 바로 선생의 독서처(讀書處)다. 선생이 서거한 6월을 맞으며 택당의 삶을 떠올려 본다.

당(唐)나라의 저명한 문인 유우석(劉禹錫:772-842)은 세상에 회자되는 명문인 자신의 누실명(陋室銘)을 이렇게 시작했다.

“산이 높다 낮다는 문제가 아니다. 그 산에 신선(神仙)이 살면 이름이 나는 것이다. 물이 깊다 얕다도 문제가 아니다. 그 물에 용(龍)이 살면 신령스러운 것이다.”

(山不在高 有仙則名, 水不在深 有龍則靈)

양평군의 동쪽 끝에 위치한 양동은 조선시대 지평현(砥平縣) 상동면(上東面)으로 특별히 산수가 빼어난 곳은 아니다. 그러나 택당 이식 선생이 입향하자 양동은 역사 문화적으로 큰 인물을 품은 지역이 되었다.

택당 선생은 조선을 대표하는 문인이며, ‘선조수정실록’(宣祖修正實錄)을 편찬한 역사학자이자, 이조판서와 대제학을 역임한 정치가다. 선생이 양동으로 입향한 것은 400년 전 일이다. 부친의 묘소를 백아곡(白鴉谷)에 옮기고, 계산재(啓山齋)와 택풍당(澤風堂)을 지었다. 서울을 오가며 살다가 음력 6월 11일 삶을 마치고 이곳에 묻혔다. 김소헌 장례를 유언으로 남겼다.

역사는 이를 기록했다. 영조(英祖) 때인 1757년에 ‘여지도서’(輿地圖書)를 편찬하면서 이 지역의 인물조에 택



당 선생과 아들 외재(畏齋) 이단하(李端夏:1625-1689)를, 충묘(塚墓)조에는 택당의 묘소를 수록한 것이다. 이는 국가가 기억해야 할 인물로 평가한 것이다.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는 물론이고 당시 저명한 인물의 문집에는 택당을 찾아 양동을 방문한 기록이 빈번하다. 관련하여 지은 시문도 많이 보인다. 택당이 살던 백아곡의 택풍당과, 아들 외재가 살던 연재(戀齋)가 있던 도소리(道巢里)의 이름은 이들로 해서 널리 알려지게 됐다.

택당은 당쟁으로 혼탁한 시대를 살았다. 예나 지금이나 사회가 혼란할수록 너무나 쉽게 진영(陣營)에 들게 된다. 그러나 택당은 어느 당에도 가담하지 않겠다 맹서하고 실천한다. 어려운 길을 걷는 사람에게 고립(孤立)과 곤궁은 당연하다. 젊어서 여주(驪州)에 살다가 정치적 사건과 관련되어 새로 살 곳을 찾아 나설 때 양동을 놓고 점을 쳤다. 그때 대과괘(大過卦)를 얻었다. 그 괘상(卦象)에 있는 ‘독립불구 둔세무민(獨立不懼 遁世無憫)’이라는 여덟 글자를 뽑아냈다. 그리고 독서처로 택풍당(澤風堂)을 짓고 벽에 써 붙였다. “자신의 신념에 따라 홀로서서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피해 살아도 답답해하지 않는다”는 뜻의 이 여덟 글자는, 택당 선생의 일생을 웅변하는 말이지만, 평범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말은 아니다.

택당은 소탈(疎脫)하고 시비(是非) 판단이 명쾌했다. 신념에서 나오는 비판은 상대나 지위의 고하를 가리지 않았다. 당신의 원칙과 어긋날 때는 거취를 정함에 망설임이 없었고, 그 때마다 마음의 평온을 얻고자 찾아 온 안식처가 택풍당이다.

택당의 글을 읽다 보면, 나라에 대한 충심, 가족에 대한 뜨거운 사랑, 원칙을 지켜나가는 데서 오는 고통,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견뎌내는 뚝심, 그리고 독립(獨立)의 의지에서 느껴지는 한없는 고독감(孤獨感)이 깊게 배어

난다. 많은 조선의 선비들이 그의 글을 읽고 그를 기리며 그를 배우는 까닭을 알게 한다. 이런 택당이 뒷날 이 지역 사람들에게 정신적으로 큰 영향을 주었으리라는 것은 자명하다.

택당은 양동이 크게 자랑할 만한 산수는 없지만, 후손과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산수의 즐거움을 누리게 하겠다는 생각을 가졌다. 주변을 직접 걸어보고서 ‘동계팔경(東溪八景)’을 정했다. 저명 화가를 불러다 ‘팔경도(八景圖)’를 그리고 이를 설명한 ‘동계기(東溪記)’도 남겼다. 택당이 양동의 산수를 재발견하고 새롭게 드러낸 것이다. 이 지역을 사랑한 따듯한 마음이 남긴 선물이라고 생각한다.

글을 끝내면서 가슴속의 경륜(經綸)을 다 펴지 못하는 불우함을 토해낸 선생의 많은 시 중에서, 절명시(絶命詩) 한 수(澤堂先生續集 卷六 五月十九日口占)를 여기에 적는다. 서거를 앞둔 5월 19일에 구술한 것이다.

그리고 옷깃을 여미고 자리에서 일어나 큰 소리로 읽는 것으로 독립독행지사(特立獨行之士)인 선생의 고독한 녀를 기린다.

내 나서 살아 낸 예순하고 네 해(行年六十四春秋)  
 꿈을 품은 사내 일생 고통의 연속(弧矢生涯苦未休)  
 글 잘 한단 헛된 이름 화를 불러서(文字虛名終速禍)  
 좋은 벼슬 과한 봉급 늘 부끄러웠다(清班素廩每包羞)  
 눈으로 본 이 땅의 하 많은 일과(眼看天地無窮事)  
 마음에 품고 산 그 많은 나라 걱정(心抱君民不盡愁)  
 나 이제 죽고 나면 그런 근심 없겠지만(便入九原無一念)  
 푸른 산과 동류수는 변함없으리(碧山長在水東流) 〇

글 신승운(한국고전번역원장)

## 중대재해처벌법 태동의 원조 삼풍백화점붕괴사건조사특위

‘6월’ 하면 떠오르는 역사적인 사건이 많다. 그중 가장 슬픈 역사라고 하면 단연 수많은 사람의 목숨이 덧없이 사라진 삼풍백화점 붕괴를 들 수 있다.

1995년 6월 29일 오후 5시 57분, 서울 강남의 랜드마크인 삼풍백화점 건물이 순식간에 땅으로 주저앉은 광경을 보고 모두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다. 그 사고의 피해자는 누군가의 부모님, 내 가족, 내 이웃이었다. 그래서 안타까움이 컸고 하루하루 생존자가 구조될 때마다 박수를 치며 또 다른 생존자가 나오기를 온 국민이 매일 매일 기도했다. 더군다나 1994년 10월에 있었던 성수대교 붕괴사건 이후 채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 발생한 대형 사건이라 국민들이 받은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다.

결국 이 사고는 사망 502명, 실종 6명, 부상 937명이란 인명 피해를 낳았고 6·25전쟁 이후 가장 큰 인적 재해로 기록됐으며 이로 인해 삼풍백화점 이준 회장이 구속됐다.

삼풍백화점 사고 발생 후 국회는 곧바로 임시회를 소집했다. 14대 제176회국회 개회식(1995년 7월 5일)에서 황낙주 국회의장은 “삼풍백화점이 붕괴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한 건물이 무너졌다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위신이, 우리 대한민국의 명예가, 우리 대한민국의 공신력이, 온 세계 앞에서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라면서 참담한 심정을 토로했다.

이후 국회 차원의 사고 원인 규명과 건설 관련 제도 보완 등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삼풍백화점붕괴사건조

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됐고, 6차에 걸친 특별위원회 회의와 8차의 국정조사를 했다. 당시 국정조사 회의록을 보면 증인·참고인·감정인들에 대한 신문 과정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마치 TV 생중계를 보는 것 같다.

1차 국정조사(1995년 7월 20일)는 서울특별시에 대한 보고와 증인신문이 있었는데 조순 시장의 발언을 보면 시장 취임식도 붕괴사고 현장에서 할 만큼 절박했던 당시 상황을 말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장 조순 저는 7월 1일 0시를 기하여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현장에서 시장직에 취임하였습니다. (……) 이번의 사고는 서울시의 많은 시설물들이 70년대 80년대 급성장기에 조급하게 건설되어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기도 하였지만은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안전의식 부족과 안전관리에 철저하지 못한 관행에서 비롯된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1995.7.20.)

그리고 많은 의원들이 질의를 통해서 질책도 하고 대책을 요구했지만 그중 조순환 의원은 붕괴 직후 초동대응이 미흡한 것에 대해, 김길홍 의원은 유가족들의 아픔을 얘기하고 있다.

○조순환 위원 그러니까 구조 차원에서 보면 준비가, 그런 기초적인 장비마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것이 아닌가 (……) 그래서 언론 쪽에서는 본격적인 구조작업에 들어가는 데 3일이 걸렸다. 그래서 본격적인 구조작업에 들어가면서 문제는 최초의 매우 소중한 3일간의 구조 공백이 있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1995.7.21.)



○김길홍 위원 온 국민의 가슴을 아프게 한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가 일어난 지도 한 달이 지났지만 아직 시신조차 찾지 못한 실종자 가족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삼복더위에 호미를 들고 난지도 쓰레기 더미를 뒤지고 있습니다. (1995.7.31.)

7월 31일에 있었던 6차 국정조사 회의록을 보면 국회 회의장이 아닌 서울구치소에서 증인신문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은 삼풍백화점 이준 회장 등 해당 증인들이 피의자로 구속 중이었기 때문이다.

이 증인신문에서도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친 것과 안전불감증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조순환 위원 균열이 가고 천장이 내려앉고 한 여러 가지 위험 징후가 오전부터 연속적으로 일어났는데 거기에 2시간 동안 있으면서 더 이상 균열이 없고 더 이상 침하가 없으면 괜찮다 이런 판단을 전문가로서 내릴 수 있는 판단입니까? 판단의 착오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니까?

○증인 이학수 예, 책임감을 많이 느낍니다.

(중간 생략)

○김길홍 위원 (……) 이번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에 앞서서 정확한 판단을 내리고 또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최고 경영자의 책임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일부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이런 비난 여론이 있는 것도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중간 생략)

○증인 이준 (……) 그런데 그것이 토담 무너지듯이 그렇게 쉽게 무너지는 것은 지금 이학수 구조기술사도 얘기했지만 세계적으로 없었던 일입니다. 저도 이것이 생각하면 분하고 왜 이것……

○박주천 위원 세계적으로 없었던 붕괴는 세계적으로 없는 공사를 했던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이해 안 되는 공사를 했던 것이고…… 그것 이유 없이 그것이 왜 무너지겠습니까. 그리고 세계적

으로 유례없는 관리를 해 오신 것입니다. (1995.7.31.)

삼풍백화점붕괴사건조사특위는 6차 회의에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해산했는데, 결과보고서 내용에 건의사항으로 건설기본법의 제정이 있다.

○전문위원 박주일 (……)

다음으로는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재난관리능력 제고 측면에서 세 가지 사항을 건의했습니다.

평상시의 대처능력 제고, 재난관리통제기구의 설치·운용, 긴급 구조구난체계의 확립. 두 번째로 건설·건축행정개선 측면에서 여섯 가지 사항을 지적했습니다.

건설·건축행정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다중이용시설의 안전성 확보와 건축 자재의 품질확보 설계도면 등의 보존기간 연장, 부실시공자 등 처벌 강화 건설기본법의 제정입니다. (1995.7.31.)

### 삼풍백화점 참사 이후 재난방지 관련법 제·개정

삼풍백화점 참사 이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재난방지 관련 법안들이 제·개정됐다. 2021년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됐고 관련 뉴스가 연일 언론에서 쏟아지고 있다. 지난 2021년 말 광주 아이파크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 이후에는 ‘건설산업안전특별법’ 제정까지 거론되고 있다.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중요성을 잘 알지 못한다. 그래서 흔히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고 미래의 청사진을 그린다고 하는 온고지신(溫故知新), 법고창신(法古創新)을 종종 이야기한다. 삼풍백화점 참사 이후 관련 법안들이 제·개정된 것을 보면서 온고지신·법고창신의 가르침을 다시 떠올려 보게 된다. 🍵

글 김미라 서기관(의정기록2과)

## 중·서유럽과 러시아 사이에서 고심 중인 벨라루스



유라시아 대륙 동서에 걸쳐 있는 러시아의 서쪽 중·서유럽과 만나는 지점에 벨라루스가 있다. 슬라브어로 ‘흰 러시아’를 뜻하는 벨라루스는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발전한 러시아와 달리, 북부 발트해 유역과 서부 독일·폴란드와 긴밀한 교류를 통해 발전해 온 슬라브계 민족이었다. 벨라루스는 인근 우크라이나와 마찬가지로 기독교 정교(Orthodox Church)를 신봉하면서도, 중부 유럽 국가들의 오랜 지배를 받아온 도시 국가들에 기반을 두고 형성됐다. 민스크(Minsk), 폴로츠크(Polotsk), 비텡스크(Vitebsk) 같은 도시들은 키이우(키예프) 루시의 문

화를 받아들여 정교를 받아들이고 키릴문자를 사용하게 된다. 하지만 키이우(키예프) 루시가 13세기 몽골 제국의 공격을 받아 초토화될 때, 벨라루스 지역은 몽골군의 침략 경로에서 벗어나 있어 피해를 모면할 수 있었다.

### 정교 받아들이고 키릴문자 사용한 벨라루스

이후 발트해 연안에서 강성해진 리투아니아(Lithuania) 대공국이 남진하면서 벨라루스 지역을 지배한다. 리투아니아는 폴란드 왕실과 혼인 관계를 맺고 연합국을 형성하면서 동유럽의 광활한 영토를 통치했다. 그



러나 정교를 신봉했던 벨라루스 지역의 주민들은 가톨릭을 따르는 리투아니아-폴란드 연합 왕국의 지배에서 벗어나고자 했다. 특히 16세기 유럽의 종교개혁이 거세지면서 리투아니아-폴란드의 국왕들은 가톨릭에 경도되었고, 이는 벨라루스 주민들에게 압박으로 작용했다. 결국 벨라루스 지역의 주민들은 같은 기독교 정교도이면서 점차 강성해지던 러시아에 호응하기 시작했다. 17세기 벨라루스 지역을 통치하던 리투아니아-폴란드 연합 왕국은 우크라이나 지역의 코자크인들의 반란, 스웨덴의 침입, 러시아와의 전쟁을 거치면서 약화됐다. 특히 중유럽의 강국 프러시아와 오스트리아는 러시아와 연합해 리투아니아-폴란드의 영토를 노렸다. 결국 18세기 후반 리투아니아-폴란드 연합 왕국은 해체되고, 오늘날 벨라루스 지방은 러시아 제국에 편입됐다.

### 서유럽과 러시아 갈등으로 전쟁터 된 벨라루스

벨라루스 지방이 러시아 제국에 편입됐지만, 곧 서유럽과 러시아 사이에 갈등이 증폭되면서 전쟁에 휘말리게 된다. 1789년 프랑스 혁명의 결과 나폴레옹이 서부 및 중부 유럽 전역을 장악하고 1812년 러시아를 침공하자, 벨라루스 지역은 전쟁의 주요 격전지가 됐다. 나폴레옹 축출 이후 러시아는 '유럽의 경찰'로서 폴란드를 포함한 동유럽을 장악하지만, 이번에는 프러시아가 독일을 통일하면서 갈등을 빚는다. 독일과 러시아 사이 군비 경쟁의 결과 벨라루스 지역은 러시아 제국의 군사 기지화됐고 1914년 제1차 세계대전 발발과 함께 민스크 일대에서 전선이 형성되면서 큰 피해를 입었다.

1917년 공산 혁명으로 러시아 제국이 무너지는 와중에 독일군은 벨라루스 지역을 점령한다. 독일의 점령은



러시아로부터 독립을 원하던 벨라루스 민족주의자들이 '벨라루스 공화국'이라는 독립 국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됐다.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이 독일의 패배로 끝나자, 새롭게 수립된 소련 정부는 군사력을 동원해 폴란드로부터 벨라루스 동부 지역을 탈환하는 데 성공한다. 소련은 이 지역에 벨라루스 소비에트 공화국을 세우고 공산화를 실시했다. 동서로 나뉜 벨라루스에서 폴란드 치하 서부는 반러 성향이, 러시아 치하 동부는 친러 성향이 짙었다.

독일에서 히틀러가 나치 정부를 수립하자, 소련은 처음에는 그와 비밀 협상을 진행해 폴란드를 협공하기로 하고 1939년 폴란드 치하 벨라루스 서부 지역을 병합한다. 그러나 이번에는 나치 독일과 전쟁이 벌어지고, 1941년 독일군은 벨라루스 지역부터 시작하여 러시아를 침공했다. 이 과정에서 벨라루스에서만 수십만 명의 민간인이 희생되는데, 특히 벨라루스에 거주하던 유태인이 큰 피해를 입었다. 민스크 동남부 트로스테네츠 (Trostenets)에 설치된 유태인 강제수용소는 20만 명이 넘는 유태인들의 대량 학살이 자행됐던 곳으로 유명하

다. 유태인 출신으로 20세기 최고의 화가 중 한 명인 마르크 샤갈(Marc Chagall) 역시 벨라루스 동부 비텡스크 출신으로, 나치의 탄압을 피해 1941년 미국으로 망명해야 했다.

### 반러 계열과 친러 계열로 나뉘어 갈등 겪은 벨라루스

1944년 소련이 독일군을 몰아낸 이후 벨라루스는 1991년 소련 붕괴 시까지 소련 15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의 일원으로 공산 진영에 속했다. 스탈린에 의해 러시아계 주민들이 대거 벨라루스로 이주했고, 그 결과 언어나 문화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이 증대됐다. 1991년 독립한 지금도 러시아어는 벨라루스어와 함께 벨라루스의 공식어로 인정된다.

이렇게 발트해의 리투아니아, 폴란드, 독일, 러시아 등 당시 강대국 사이에서 존재하던 벨라루스는 19세기부터 반러 계열과 친러 계열로 나뉘어, 자체 민족의식을 고양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1863년 벨라루스 최초의 민족주의 문학가이자 민족운동가로 알려진 카스투스 칼

리노스키는 폴란드, 리투아니아의 독립 운동가들과 함께 러시아 제국에 맞서 독립운동을 펼친 것으로 유명하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폴란드 지배 지역을 중심으로 친러-반폴란드 운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러다가 1939년 소련이 벨라루스 전역을 점령한 이후에는 다시 나치 독일을 지지하는 국가사회주의의 흐름 속에서 반 유태인 기조가 형성되기도 했다.

벨라루스가 민족의식을 함양하는 데 러시아와 독일 사이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사실은 벨라루스 국기 사용을 둘러싼 논쟁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소련의 일원으로 자리잡은 벨라루스는 1951년부터 현재 국기와 유사한 붉은색-녹색 계열의 국기를 사용해 왔다. 그러다가 1991년 독립하면서 과거 독일 후원 아래 1918년 수립된 벨라루스 공화국 시기에 사용했던 흰색-붉은색-흰색의 국기를 공식 채택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1995년부터 다시 붉은색-녹색의 국기로 회귀한다. 지금도 소련 시대처럼 러시아와 관계를 돈독히 하려는 입장을 가진 이들은 붉은색-녹색 국기를 선호하지만, 러시아와 거리를 두고 싶어하는 이들은 붉은색-흰색-붉은색 국기를 흔들고는 한다.

이렇게 벨라루스는 역사적으로 발트 지역의 리투아니아, 폴란드, 독일, 그리고 러시아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스스로 정체성을 찾기 위해 노력해왔다. 1991년 반러 친 유럽의 노선을 취하다가 1994년 친서방에서 친러시아로 돌아선 것처럼, 지금 벨라루스는 러시아의 동맹국이지만 언제 어떻게 국가 발전의 노선을 변경해 스스로의 발전을 향해 나아갈지 모른다. 🍷

글 이광태(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 HK연구교수)

일러스트 윤소영(soyoungyun.com)



구(백홍백) 현(적녹) 국기를 모두 흔드는 벨라루스 시위대 (출처 knewsby)



## 작약

연분홍, 진분홍의 커다란 작약이 국회 분수대 주변에 피어 있습니다. 꽃이 큼직해서 함박꽃이라고도 불립니다. 작약은 예로부터 약용, 관상용으로 재배됐는데, 작약의 영어명 ‘피어니(peony)’는 그리스 신화 속 치유의 신 ‘파이온(Paeon)’의 이름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작약은 모란과 비슷하게 생겨 헷갈리기 쉬운데 이를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작약은 다 자란 높이가 60~70cm 정도이고 모란은 최대 2m까지도 자랍니다. 또 모란 잎은 둥근 오리발 모양에 광택이 없지만, 작약 잎은 세 개의 길쭉한 타원형에 광택이 있습니다. 🍷

글 고정선 사진 임진완



주태석, '한국전쟁(6·25)', 291×218cm, 종이에 채색 1997

## 개인의 고통에 주목하는 전쟁 그림



전쟁을 기록하는 그림은 회화의 존재 증명 차원에 서도 오랫동안 이어온 전통적인 미덕 가운데 하나다. 회화를 통해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는 인류사적 참상을 기록하고 그것을 전승해 평화 의제를 공유하고자 하는 공동체의 의지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현대미술에서의 일이다. 예술가의 비판 정신이 독자적인 정신 문화로 자리잡기 전까지, 즉 근대시기 이전까지의 예술은 전쟁을 영웅적 서사로 가득찬 승리의 역사로 기록하는 데 여념이 없었다. 아직도 일부 권위주의 독재국가들은 전쟁과 관련한 예술 표현을 영웅담에 묶어두고 그 이외의 전쟁으로 인한 고통이나 반전의 서사들은 철저히 금기시하고 있다.

우리가 기억하는 역사 속 전쟁 관련 그림은 영웅사적인 승전의 기록이다. 프랑스의 나폴레옹이나 조선의 이순신이 전쟁 영웅의 모습으로 길이 기억될만한 미술 형식, 그러니까 회화나 조형물의 형상으로 대중 앞에 당당하게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은 근대 이전부터 존재했던 전쟁의 승리를 기념하는 영웅 서사에 기반한다. 한국전쟁 또한 수많은 전쟁영웅의 승전 서사로 가득 차 있다.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은 모뉴먼트라고 불리는 전쟁조형물이다. 넓은 틀에서는 공공미술로 분류되는 이런 창작물에서 우리는 전쟁을 기억하는 방식이 지나치게 획일화되었다는 점을 익히 잘 알고 있다.

주태석은 극사실주의로 한국 화단에 새물결을 일으켰던 청년작가로서 대학 4학년 때 국전 대통령상

을 수상할 정도로 빼어난 재능을 발휘했다. 자연의 모습을 전체가 아닌 부분의 이미지로 포착해서 실제 이미지와 그림자 이미지 간의 간극을 드러내는 회화술을 지속해온 화가다. 1970년대 이후 한국 현대미술은 추상미술과 민중미술의 흐름이 대세를 이루었는데, 그 사이에서 자연이미지를 다루는 형상미술로 일관해오면서 독자적인 화업을 이루는 것은 쉽지 않은 길이었다. ‘자연-이미지’ 연작을 통해 그는 나무와 숲, 입체 이미지와 평면 이미지 사이의 관계를 탐색하면서 자연의 형상 속에서 생태 의제를 길어냈다.

#### 국회 개원 50주년을 기념해 주문 제작한 작품

한 시대를 주도하는 시류가 강력한 원심력을 발휘할 때조차도 자신의 길을 잃지 않지 않으려는 독자적인 외길을 걸어왔던 주태석의 작품 가운데 이 그림처럼 역사를 다룬 것은 매우 드물다. 자연과 생태 의제로 작업해오던 화가 주태석이 전쟁을 소재로 한 이 그림을 그린 것은 특별한 계기에 의해서다. 주태석의 이 작품 ‘한국전쟁(6·25)’은 국회 개원 50주년을 기념해 주문 제작한 작품이다. 현대미술 씬에서 주문제작은 그리 흔한 일은 아니다. 미술관이나 공공기관에서 특별한 의미로 작가에게 특정 주제나 소재의 작품을 의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그림이 바로 그런 경우다. 한국전쟁을 다룬 주태석의 회화술은 극사실주의 화풍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길이가 거의 3미터에 달하는 대작인데, 화면은 네 부분으로 분할되어 있다. 폭파당한 한강다리를 건너

는 사람들의 모습, 군인들과 전차 등 전쟁터의 장면들, 땅에 꽂힌 총 위에 앉힌 철모, 붕대로 상처를 감싼 어머니가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모습 등 화면을 4등분으로 나누는 이러한 이미지들은 전쟁의 참혹한 고통을 그려냈다. 국회와 같이 전형적인 국가기관이 의뢰한 그림에서 주태석은 왜 전쟁의 영웅적 서사는 배제하고 개인이나 개인들의 고통에 주목했을까? 화가의 생각이 미치는 곳은 국가나 이념, 영웅 등이 아니라 개인으로서의 인간 그 자체에 있기 때문이다.

한국전쟁은 세계사적으로도 보기 드문 전대미문의 비극이다. 동족상잔이라는 면에서도 그렇고, 20세기 후반을 지배한 냉전체제가 낳은 전쟁이라는 점에서도 그렇고, 군인들만이 아니라 엄청난 수의 민간인 희생자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올해가 지나면 정전협정을 맺은 지 70년이 된다. 아직도 정전에서 종전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한국전쟁은 그러니까 끝나지 않은 전쟁이다. 1945년에 시작한 한반도 분단체제는 여전히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전쟁 충돌 위험지역으로 남아있다.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루기 위한 기나긴 여정은 어느날 문득 찾아올 것만 같다가도 어느새 저 먼 미래의 일로 달아나버리곤 한다.

#### 평화를 지키기 위해 전쟁의 고통 잊지 말아야

이렇듯 어려운 길을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길에 가장 중요한 것은 평화다. 평화를 지키는 것만이 미래를 담보하는 유일한 길이다. 그 평화를 지키는 데 있



국회 본관 6층 중앙홀에 걸려 있는 주태석의 '한국전쟁(6·25)'

어 빠질 수 없는 일은 바로 전쟁의 고통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전 지구의 동시대인들에게도 전쟁은 국가와 이념의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생명의 문제이듯, 70여 년 전의 한국전쟁은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절박한 삶의 문제였다. 주태석의 이 그림이 말해주듯 전쟁은 개인의 고통 없이 존재하지 않는다. '잊지말자 6·25'라는 포어의 앞 뒤에는 국가나 이념이 대신할 수 없는 개인의 고통이 깔려있다는 점, 진짜 잊지 말아야 할 핵심이 아니겠는가. 🍷

글 김준기(미술평론가)



대한민국임시의정원 개원 103주년 기념

#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 국회박물관 개관



## 국회체험관

국회의 기능과 역할 소개 및 의정체험  
국회박물관 오리엔테이션

## 1전시실

3·1운동 이후 중국 상하이에서  
개원한 임시의정원의 활동과 성과

## 2전시실

제헌국회에서 제9차 개헌(제12대  
국회)까지 국회가 걸어온 길

## 3전시실

제9차 개헌 이후 국회(제13대 국회~  
제21대 국회)의 변화와 성과  
확대된 정치 참여와 민주주의의 발전

## 4전시실

역대 의장의 발언을 통해 민주주의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국회를 보여줌

## 기획전시실

국회의 역할과 구성



## 우리가 만드는 국회 규칙놀이터

어린이 국회에서 놀이터의 법을 만들고  
지키는 과정에서 배우는 국회와 민주주의

운영시간 | 월~금 10:00 - 18:00  
토 10:00 - 13:00

정기휴관 | 법정공휴일

관람료 | 무료

관람방법 |

• 상설전시실, 기획전시실 : 자유 관람

• 국회체험관, 어린이박물관 : 사전 예약

※ 「국회 방문·참관예약 시스템」을 통해 예약 가능

(<https://reservation.assembly.go.kr>)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우리 건축의 뿌리를 찾아서  
한 나라의 역사를 담은  
아름다운 그릇, 박물관 건축





박물관은 미술관, 극장 등과 함께 국가의 문화 역량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다. 이 가운데 박물관은 특히 한 나라의 역사를 물리적 실체로 증명하는 문화재를 보관, 관리, 기록, 전시하는 공간이어서 그 중요성이 건축을 넘어 과거의 영광과 현재의 기술·경제력을 가늠하는 지표가 된다. 문화의 척도인 동시에 국력의 척도인 셈이다.



국립중앙박물관

박물관은 크게 콘텐츠와 건축으로 나누어진다. 건축을 보면, 민간 박물관은 대체로 동시대에 유행하는 양식을 따르는 편이며 국립을 비롯한 공공박물관은 국가적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는 전통 양식을 활용하는 편이다. 이런 박물관 건축은 서양에서 먼저 시작한 걸로 볼 수 있다. 15세기부터 메디치를 비롯한 피렌체의 유력 가문과 로마 교황청이 양대 산맥을 이루며 예술 작품과 유적을 모으기 시작했다. 이후 19세기 제국 경쟁 때 대형 공공문화시설로서의 박물관이 수도를 비롯한 주요 도시에 대거 들어서며 당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룬 현대 고고학 기술과 짝을 이루어 비로소 박물관 건축이 완성되었다.

제국 열강들은 경쟁적으로 대형박물관 건립에 공을 들였는데 크게 세 가지 목적이 있었다. 첫째, 각국이 그야말로 과거의 역사적 영광과 현재의 국력을 자랑하는 장으로 생각했다. 둘째, 근대적 통일국가의 시초를 이루는 만큼 시민을 위한 공공 서비스였다. 셋째, 건축에서 국가 양식을 구현하기에 가장 좋은 장이었다.

다시 민주주의 시대인 20세기에도 국립박물관을 비롯한 대형박물관 건립은 국가가 주도하는 중요한 문화 정책이 됐으며 그 목적도 대체로 19세기의 세 가지가 여전히 유효했다. 여기에 좀 더 자살한 민간 박물관이 가세하면서 전시 콘텐츠의 종류가 대폭 다양해졌고, 실내 전시 공간과 외관의 건축 양식 등에서는 ‘박물관 건축학’이라는 세부 장르가 형성되면서 현재에 이르는 형국이다.

우리는 어떠할까. 우리의 박물관 건축은 대체로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 초에 본격화되어서 1990년대까지 활발히 진행됐다. 서구 선진국에 비해서 늦은 편인데, 근대 산업화의 지각 출발과 같은 흐름으로 볼 수 있다. 진행 양상은 서구 선진국과 비슷해서 대형 국립박물관과 공공박물관이 일차 완성을 이루었으며 그 목적도 19세기 유럽의 세 가지가 그대로 해당한다. 대형 문화시

설이라는 중요한 공공 서비스를 구축한다는 순수한 뜻이 기본이 되었으며, 권위주의 정권 시절 국가와 정부의 위신을 높이기 위한 정치적 목적도 있었다. 이런 가운데 특히 건축적으로 중요한 건 세 번째 ‘국가 양식’이라는 주제였다. 실제로 국립박물관을 중심으로 이른바 ‘한국적인 양식’이 아직도 하나의 규칙처럼 반복되고 있다.

우리는 역사가 오랜 민족이라 박물관 개념이 확장할 잠재력이 크다. 우선 박물관 건축이 집중했던 1970~2000년의 앞뒤로 시간의 끈을 늘릴 수 있는데 이 경우 다양한 박물관이 파생한다. 공간 역시 건물 실내에 한정되지 않고 여러 외부 공간으로 확장할 수 있다. 21세기에는 건립 주체가 지방 정부와 민간으로 확장하면서 관광과 지역 정체성의 확립 등과 연계해 콘텐츠가 다양해지고 있으며 건축 양식도 국가 양식을 벗어나 자유롭게 구사되는 편이다.

이런 배경 아래 우리의 박물관도 어느덧 성큼 성장해서 다양한 콘텐츠를 구비하고 발길을 기다리고 있다. 잘 찾아보면 수도 서울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 매우 다양한 박물관이 있다. 이와 함께 박물관 건축도 꾸준히 발전하고 있는데, 건축 양식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 곳의 국립박물관을 거치면서 앞에 말한 ‘국가 양식’이 교복처럼 표준 양식으로 통하게 된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다. 국가 양식이란 말 그대로 ‘한 나라를 대표하는 건축양식’인데, 중요한 건 구체적인 내용이다. 우리의 경우는 ‘전통 건축의 현대화’, 즉 ‘한국적 모더니즘의 건축 버전’이 그것인데, 이 과정에서 ‘전통 논의’라는 한국 현대건축사의 중요한 주제가 발생했다.

출발은 김수근이 설계한 부여박물관(1967)이 촉발한 ‘왜색 논쟁’이었다. 나름대로 한국적 분위기를 구현한 건 맞는데 결정적으로 ‘X’자로 교차하는 지붕이 일본 신사를 닮아서 건축계는 물론이고 사회적으로까지 비판을



국립부여박물관



받으며 논란이 되었다. 이때부터 국가 양식에 대한 인식이 싹트며 건축계에 우리의 고유한 현대건축 양식을 찾으려는 ‘전통 논의’가 일었다. 하물며 한 나라의 문화 역사를 담는 국립박물관임에야 더 말할 필요도 없었다. 김수근의 라이벌이었던 김중업은 육군박물관(1983)에서 돌과 석재를 이용한 한국적 모더니즘 양식을 선보였다. 물론 김수근도 심기일전해서 이후에는 전통 논의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 우리 전통 요소 담은 양식으로 주요 공공건축물 설계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국립박물관을 필두로 도청사 등 주요 공공건축물에서는 우리의 전통 요소를 담은 양식으로 설계하는 것이 불문율로 자리잡았다. 국립청주박물관, 국립경주박물관, 국립부여박물관, 국립전주박

물관, 독립기념관 등이 이 계보를 이었으며 그 절정은 2005년에 준공한 국립중앙박물관이었다. 이 건물의 실내 구성은 둥근 돔 천장과 19세기 유럽 대형박물관의 갤러리 유형 등 서양식으로 짚으나 외관은 우리의 성곽 모티브를 살린 ‘현대적 전통 양식’으로 디자인했다. 원래 우리의 성곽은 석재의 물성을 활용한 아름다운 돌쌓기의 미학이 자랑인데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이를 화강암을 주재료로 삼은 표면 질감의 미학으로 응용했다. 건물 전체를 봐도 넓은 정원 속에 옆으로 길게 누운 거석 구조여서 마치 현대화된 성곽을 보는 것과 같은 안정감을 주며 석재 마감을 통해 우리의 국가적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다. 🏠

글 임석재(이화여대 건축학과 교수)



## 한국의 지명을 딴 전염병, ‘한탄 바이러스’

그리 자랑스러운 일은 아니지만, 전염병 중에서 한국의 지역 이름이 붙은 ‘한탄 바이러스(Hantaan Virus)’가 있다. 한탄 바이러스는 다른 이름으로 한탄강 바이러스(Hantann River Virus)라고도 부르는데, 한탄강이라고 하면 어딘지 떠오르지 않는가? 바로 강원도 철원군에 흐

르는 한탄강을 가리킨다. 즉, 한탄 바이러스는 한탄강의 이름을 따와서 붙여진 것이다.

한탄 바이러스가 세상에 알려지게 된 동기는 1951년 한국전쟁 중이었다. 당시 중공군과 싸우면서 한국에 주둔했던 미군 병사 중에서 약 3천200명이 원인을 알 수 없는



고열과 구토, 피부 출혈 증세를 앓다가 사망했는데, 미군 측에서 이 증상을 연구하다가 바이러스에 감염된 탓이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한반도에 토착 바이러스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다만 한탄 바이러스라는 이름은 한국전쟁이 끝난 1953년으로부터 23년 후인 1976년, 한국의 이호왕 박사에 의해 붙여졌다. 이호왕 박사는 매년 늦가을마다 국내에서 수천 명이 높은 발열과 출혈 증세를 보이는 바이러스에 감염된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문제의 바이러스를 연구하다가 1976년 바이러스 균에 감염된 쥐의 폐조직에서 바이러스를 세계 최초로 분리해 확인하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바이러스가 발견된 지역인 강원도 한탄강의 이름을 따서 이를 한탄 바이러스라고 명명했다.

한탄 바이러스는 주로 바이러스에 감염된 쥐의 배설물과 침에 의해 사람에게 감염된다. 특히나 쥐가 많이 서식하고 활동하는 시골과 산골 지역이 한탄 바이러스에 위협한데, 산과 들판의 풀과 나무에 묻은 쥐의 배설물을 통해 공기 중으로 바이러스가 퍼지고, 그 바이러스를 호흡기를 통해 들이마신 사람들이 감염된다. 그래서 시골과 산골에서 활동하는 농부나 군인들은 한탄 바이러스를 조심해야 한다. 실제로 한탄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피해자들 중 상당수가 바로 농부나 군인이다.

한탄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대략 2~3주 동안 잠복기를 거치고, 1~2일 동안 오한, 식욕부진과 신체 쇠약 등의 증세가 나타나며, 발열과 오한과 두통과 구토 같은 증상에 시달린다. 발열은 하루 만에 39도까지 올라가며, 3~7일 동안 계속되다가 정상적인 체온으로 내려가지만 결코 안심하면 안 된다. 그 이후에는 입천장과 겨드랑이에서 피

가 흘러내리는 출혈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탄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은 혈압이 떨어지고 출혈 증상이 더욱 나빠지면서 정신 착란과 혼수상태에 빠진다. 이 현상은 약 3~7일 동안 계속되는데, 특히 출혈 증상이 나아지지 않으면 한탄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 중 약 절반은 그 단계에서 사망한다.

다행히 이 단계를 지나면 출혈 증상은 어느 정도 완화되지만, 대신 하루에 3~6리터나 소변을 볼 만큼 매우 심한 탈수 증상이 나타난다. 여기에서도 보기 드물지만 2차 감염 사태가 나타나서 사망할 수도 있다.

그리고 나서 대략 몇 주에서 몇 달이 지나면 소변량이 서서히 줄어들면서 정상으로 돌아오는데, 불행히도 이때는 빈혈 증세와 무기력증이 이어지면서 한동안 고생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고통스러운 한탄 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수칙을 지켜야 한다. 우선 한탄 바이러스가 창궐할 시기인 10~12월에는 가급적 산이나 풀밭에 가는 것을 피해야 한다. 또한 들쥐의 배설물을 신체에 접촉하는 일을 삼가야 하며, 어쩔 수 없이 야외에서 활동하고 집으로 돌아왔다면 옷을 꼭 세탁하고 목욕으로 몸을 깨끗이 해야 한다.

또한 산과 들판 같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농부와 군인 같은 사람들은 한탄 바이러스에 감염될 것을 대비해 미리 예방 접종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 다행히 이미 1990년에 한탄 바이러스의 백신인 한타박스가 개발됐으니, 1개월 간격으로 2회 예방 접종을 마치고 1년 후에 추가로 1회 접종하면 다시 접종할 필요가 없다. 🍷

글 도현신작가

# 호랑이와 용의 전설을 품은 서해의 알프스

인천 무의도 호룡곡산



호룡곡산 정상에서 본 하나개해수욕장



등산의 백미는 섬 산행이라고 했던가. 높은 산이 아니어도 막힘없이 시원하게 펼쳐진 풍경, 산과 바다를 한꺼번에 조망할 수 있다는 점은 무엇보다 섬 산행이 주는 가장 큰 매력이다. 섬 안에 우뚝 솟은 산 위에서 내려다보는 바다의 장쾌함은 어떤 높은 산이 주는 감동에 조금도 뒤지지 않는다.

다만 대부분의 섬 산행은 접근성이 떨어지기 마련. 먼 해안가까지 가서 또 배를 타고 이동하기 때문에 큰 마음을 먹기 전에는 찾아가기 쉽지 않다. 무엇보다 섬에서 산다운 산을 찾기가 쉽지 않다. 그런 점에서 인천 무의도에 자리한 ‘호룡곡산’은 서울에서 지척이면서도 산과 바다를 모두 품고 있어 부담없이 섬 산행을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곳으로 꼽힌다. 게다가 주변 경치가 아름다워 ‘서해의 알프스’라는 그럴듯한 수식어까지 달고 있다.

‘호룡곡산’(虎龍谷山). 호랑이와 용의 골짜기라는 이름부터가 범상치 않다. 우리나라 수많은 산 가운데 이렇게 거창한 이름을 갖고 있는 산이 또 있을까 싶다. 이름만으로는 해발 245.6m의 야트막한 산이라고는 상상할 수가 없다. 단지 그럴듯한 이름에 끌려 이 산을 찾는 이들도 적지 않다. 호랑이와 용이 싸웠다는 호룡곡산의 실체를 확인하려면, 하늘에서 선녀가 내려와 춤을 추었다는 전설을 품은 섬 무의도(舞衣島)로 향해야 한다.

무의도는 인천국제공항이 자리한 영종도 앞바다에서 지척으로 면적 9.432㎢, 해안선 길이 31.6km에 불과한 작은 섬이다. 서해안 이름 없는 낙도 중 하나로 조용했던 이 섬의 존재가 제대로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영종도에 인천국제공항이 들어서면서다. 지금이야 서울에서 한 시간 반 남짓이면 갈 수 있지만 90년대까지만 해도 섬으로 가는 길은 참으로 멀고 험했다. 영종대교가 놓이기 전에는 인천에서 배를 타고 돌고 돌아 한참을 들어가야 했다. 그래도 섬인지라 잠깐이지만 똑딱선을 타야 했던 무

의도는 2019년 영종도에서 무의도를 잇는 무의대교가 놓이면서 배를 타지 않아도 되는 섬 아닌 섬이 됐다.

### 정상에 서면 망망대해, 섬과 바다가 어우러지다

호룡곡산은 무의도에서 가장 높은 산이다. 가운데 국사봉이 있고 그 너머에 호룡곡산이 있다. 산행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대중교통을 이용했다면 섬 끝에 자리한 광명항에서 호룡곡산으로 이어지는 직선 코스를 택하는 것이 수월하고, 자가용을 가져갔다면 하나개해수욕장을 들머리로 하는 순환코스를 이용한다.

광명항에서 호룡곡산을 올라 국사봉과 큰무리선착장으로 이어지는 능선코스를 따라 걸으면 바다를 조망하며 걷는 재미가 쏠쏠해 섬 산행의 백미를 경험할 수 있다. 광명항은 섬의 입구인 큰무리선착장에서 30분 정도 더 들어가야 하고, 약 7.6km로 3~4시간 정도가 소요되는 만만치 않은 코스다. 호룡곡산이라는 이름이 주는 선입견에 험준할 것이라 미리 겁먹을 필요는 없지만, 낮은 산인 것에 비해 해수면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높게 느껴진다. 또한 갖가지 기암괴석과 섬과 바다가 어우



정상에서 바라본 망망대해

러진 절경은 왜 이 산이 뜬금없이 서해의 알프스라고 불리고 있는지 어느 정도 수궁하게 한다.

산세가 크게 험하진 않아도 초반 능선에 올라탈 때까지는 경사가 계속돼 쉬엄쉬엄 올라야 숨이 가쁘지 않다. 매운 해풍에 몸을 낮춘 나무들이 인상적이다. 바닷바람과 고요한 숲이 뿜어내는 피톤치드 향을 온몸으로 느끼며 걷다 보면 오르는 중간중간 마당바위, 부처바위, 수직절벽 등 곳곳에 절경을 품고 있어 지루한 줄 모른다.

능선에 올라서면 저 멀리에 다리로 연결된 소무의도와 서해바다, 그 뒤에 인천 송도의 고층빌딩이 한눈에 들어온다. 맑은 날이라면 멀리 제주도과 대부도까지 바라다보인다. 제법 가파른 능선으로 올라서면 최고봉인 호룡곡산이다. 먼 옛날 호랑이와 용이 힘을 겨루었다는 전설이 전해진다. 부드러운 능선이 호랑이의 유연한 등허리를 닮았고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바다가 용의 비늘처럼 보여서 옛사람들이 호랑이와 용이 결투를 벌이는 모습을 상상했는지도 모르겠다.

전망데크가 갖추어진 정상에서 바라본 바다 풍경은 무의도 제1경으로 단연 압권이다. 산 아래로 무의도의 명소 하나개해수욕장과 큰무리해수욕장의 은빛 모래가

반짝이고, 승봉도·자월도·소무의도 등 주변의 작은 섬들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다. 시선을 멀리 돌리면 그 너머로 망망대해에 작은 섬들이 그림처럼 동동 떠다니는 풍경이 정말 눈이 시리도록 아름답다.

호룡곡산 정상에서 내려서는 길은 하나개해수욕장 가는 길과 국사봉 가는 길로 나뉜다. 국사봉을 향해 길을 잡아야 한다. 국사봉(236m)으로 오르자면 능선을 2개 넘어야 하지만 급경사 구간이 많지 않아 쉽게 오를 수 있다. 국사봉에서는 이미 지나온 맞은편 호룡곡산의 능선이 손에 잡힐 듯 가깝다. 하산길의 끝은 종착점인 큰무리선착장과 닿아 있다.

### 하산길 만난 해상관광탐방로, 바다 위를 걷다

차를 가지고 무의도를 들어갔을 경우에는 하나개해수욕장 입구 무료 공용주차장에 차를 대고 호룡곡산에 오른 뒤 돌아서 원점으로 회귀하는 순환코스를 선택한다. 1시간이면 정상에 오를 수 있고 바다 위에 놓인 해상관광탐방로를 이용해 종착점으로 돌아올 수 있는 짧지만 강렬하고 환상적인 코스다.

해수욕장 입구 왼쪽 주차장을 지나 직진하면 호룡곡

산에서 본 해상탐방로





등산로에는 키작은 나무들이 빼곡해 하늘을 가린다.



호룡곡산 능선에서 바라본 소무의도

산으로 바로 오를 수 있는 등산로가 있다. 시계 방향으로 돈다고 생각하면 된다. 이정표가 제대로 없어 길을 잘못 들 수도 있다. 오른쪽 바닷가는 무시하고 곧장 호룡곡산 정상으로 방향을 잡는다.

목적지까지는 1.2km, 정상을 향하는 가장 짧은 등산로여서, 초반엔 경사가 제법 가파르다. 해풍에 시달리다 보니 나무들이 크지 않지만 하늘을 가릴 정도로 빼곡해 깊은 숲속을 걷는 기분이 든다. 30여 분 정도 바위투성이 비탈길에서 숨을 헐떡이다 보면 흙길 능선이 나타나며 이때부터 한결 수월해진다. 능선에 올라서면 서해의 아름다운 풍광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전망 포인트가 여러 곳. 눈 호강은 기본이고 바다에서 불어오는 해풍은 마음속까지 시원하게 해준다.

호룡곡산 정상을 찍은 뒤 전망데크 왼쪽으로 난 길로 방향을 잡으면 해안가까지 내려갈 수 있다. 여기서부터는 다시 해상관광탐방로가 하나개해수욕장까지 이어진다. 2020년 완성된 무의도 해상관광탐방로는 기암괴석이 늘어선 산 풍경과 파도가 넘실대는 바다 풍경을 한 번에 즐길 수 있어 인기다. 800m가량 나무 데크의 평탄한

길이어서 산책 삼아 걸어도 좋다. 길 끝에는 출발점이자 종착점인 하나개해수욕장이 있다. ‘하나개’는 무의도에서 가장 큰 갯벌이란 뜻으로, 1km 길이의 해안에 밀가루처럼 입자가 고운 모래가 가득 깔려있다. 갯벌을 조금만 파 내려가면 동죽조개, 소라, 바지락 등을 주울 수 있다. 바다로 떨어지는 해변 낙조는 한 폭의 수채화를 보는 듯해 산행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기에 제격이다. 🍷

글 | 사진 유인근(여행칼럼니스트)

### 🚌 찾아가기

- 대중교통: 무의도는 서울역과 인천공항역을 잇는 공항철도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인천공항 1터미널 역에서 자기부상열차로 갈아타고 용유역에서 내려 무의번 버스로 환승하면 무의도 광명항까지 갈 수 있다. 자주 다니는 버스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표를 확인하고 일정을 잡는 것이 필수다.
- 승용차: 서울 올림픽대로나 자유로, 또는 외곽순환도로에서 이어지는 공항고속도로를 타고 50분 정도 달린 뒤 영종도에서 무의대교를 건너 가면 된다. 무의도 입구인 큰무리선착장에서 10분 정도 더 들어가면 하나개해수욕장이다. 해수욕장 입구에 무료 공용주차장이 있다.

## 비슷한 말은 뜻도 같을까?: ‘관하여’와 ‘대하여’

글을 쓰다 보면 비슷한 뜻인데 약간의 어감 차이 때문에 어떤 단어를 써야 할지 망설여질 때가 있다. 글의 갈래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공문과 같은 공식적이고 객관적인 문장을 지향하는 글에서도 어떤 단어를 쓰는가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나는 경우를 발견한다. 얼마 전에 공문을 확인하다가 다음과 같은 문장을 발견했다.

(가) 2022학년도 외국인 입학전형 기본계획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우리 부서의 불용물품에 대한 효율적인 사용 및 처분을 위하여 관리전환 소요조회를 합니다.

공문을 자주 접하는 사람들에게는 자주 발견되는 사례다. ‘관한’과 ‘대한’은 서로 비슷하거나 때로는 같은 뜻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독자 입장에서는 큰 의미를 부여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공문을 만들어서 결재를 받아야 하는 사람, 즉 필자 입장에서는 때때로 어떤 표현을 써야 할지 주춤거릴 때가 있다.

필자가 근무하는 교육기관에서 오가는 공문서를 훑어보면, 법령에서는 ‘관한’을 더 많이 사용하고 부서 간 공문에서는 ‘대한’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다면 두 개의 단어는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만약 차이가 있다면 어떤 의미일까.

국립국어원의 설명에 기대서 결론부터 말하자면 두 단어는 비슷한 말로 등재되어 있어서 의미상 차이가 없다고 한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 “의미상 차이가 없다면 왜 두 개의 단어가

일상생활에서 통용되는 것일까? 비슷한 의미일 뿐이지 같은 의미는 아니라는 뜻이니까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닐까?”

‘관(關)하다’와 ‘대(對)하다’는 모두 동사다. 두 단어는 주로 ‘관하여, 관한/대하여, 대한’ 꼴로 쓰이는데,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풀이하고 있다.

관하다: 말하거나 생각하는 대상으로 하다.

대하다: 대상이나 상대로 삼다.

사전 풀이에 따르면 ‘관하다’는 말하거나 생각하는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대하다’보다는 논의 범위가 넓어 보인다. 위의 인용문을 예로 들어서 설명해보자. (가)에서 ‘관한’이라는 단어를 썼다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결정하기 위해 구성원들의 생각을 들어보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므로 기본계획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요소를 전반적으로 다룰 수 있다. 그런데 (나)처럼 ‘대한’을 쓰면 불용물품에 한정해서 논의를 하자는 의미가 된다. 즉, 불용물품을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지정한 물품만을 관리전환하겠다는 뜻이다. 이렇게 보면 ‘관하다’는 주체의 시선이 넓은 범위를 포괄하는 데 비해 ‘대하다’는 좁은 범위로 집중되는 것처럼 보인다.

물론 우리말이 허용하는 관례에서 ‘관하다’와 ‘대하다’는 통용되는 단어가 분명하다. 그렇지만 우리 언어생활 속에서는 둘 사이에 미묘한 차이를 보인다. 비슷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다른 의미를 생각하다 보면 좀 더 명확한 의사 전달이 가능한 문장을 쓸 수 있을 것이다. 🍵 글 김풍기(강원대 국어교육과 교수)



## 국무총리·장관 후보자 등 인사청문회 실시, 제20대 윤석열 대통령 취임

5월 2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회, 한덕수 국무총리·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박진 외교부 장관·원희룡 국토부 장관·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li> </ul>
5월 3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회,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 의결</li> <li>국회,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li> </ul>
5월 4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박병석 국회의장, 이은주 신임 정의당 원내대표 예방 받아</li> <li>국회,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li> </ul>
5월 6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회,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li> </ul>
5월 8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 6·1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식 출마 선언</li> <li>국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li> </ul>
5월 9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재인 대통령, 퇴임 연설에서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다. 그동안 과분한 사랑과 지지로 성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혀</li> </ul>
5월 10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20대 윤석열 대통령 취임</li> <li>안철수 전 대통령인수위원장, 6·1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경기 분당갑 후보 확정</li> </ul>
5월 1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부와 국민의힘, 첫 당정 협의를 열고 코로나19 영업제한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370만 명에게 1인당 최소 6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합의</li> <li>국회,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li> </ul>
5월 12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회,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li> </ul>
5월 13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박병석 국회의장, 인천 백령도 해병대 제6여단 방문해 장병들 격려</li> <li>국회, 노태약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li> </ul>
5월 16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윤석열 대통령,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민생 안정이 어느 때보다 시급해 추경이 이른 시일 내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해</li> </ul>
5월 17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박병석 국회의장,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 있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li> <li>윤석열 대통령, 주미 대사에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 질병관리청장에 백경란 성균관대 의대 교수 임명</li> </ul>
5월 20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국 바이든 대통령, 2박3일 일정으로 방한</li> </ul>
5월 23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여야 지도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13기 추도식 참석</li> <li>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진사퇴</li> </ul>
5월 24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더불어민주당, 제21대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김진표 의원 선출</li> <li>박병석 국회의장, 한덕수 신임 국무총리의 예방을 받고 국회와 정부 간 협력을 토대로 국민통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li> </ul>
5월 25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회,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li> </ul>
5월 29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회, 본회의 열고 코로나19 손실보상 위한 추경안 등 의결</li> </ul>

정리 윤성혜

국회 ART GALLERY 6월 작품전 국회의원회관 1층 아트갤러리

같은 곳을 바라보는  
두개의 시선

2022. 6. 2. - 6. 15.



작가 : 장태영, 변내리 / 추천 : 김의겸 의원

고구려 고분벽화  
진파리1호분 사신도 복원전

2022. 6. 16. - 6. 30.



작가 : 윤영희 / 추천 : 우원식 의원

-편집후기-

6월호 발간과 함께 제21대 전반기 국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양한 입법 및 의정활동을 중심으로 2년간의 성과를 되짚어보면서 후반기에도 더욱 알찬 국회,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의 소식을 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김현아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신록의 계절, 푸른 나무와 색색의 꽃들에 눈과 코가 즐겁습니다. 이달 ‘법 시행 그 후’에서 치유농업법을 소개했습니다. 치유농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 고영선

국회는 제21대국회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5월 29일 추경안을 의결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독자 여러분도 2022년 전반기 마무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 박민선

야외 마스크 해제 이후 곳곳에서 열린 행사와 축제의 활기찬 분위기가 반가웠습니다. 국회에서는 제20대 대통령 취임식과 74주년 개원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하반기 국회와 함께 좋은 소식이 가득한 6월을 기대해봅니다.

- 윤성혜



내일을 여는 국민의 국회

발 간 등 록 번 호

31-9710176-000680-06

국회사무처  
NATIONAL ASSEMBLY SECRETARIAT